

#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일 시 \_ 2013. 11. 14(목) 오후 2시 ~5시

장 소 \_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주 최 \_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후 원 \_  국민연금공단  
National Pension Service



사단  
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www.sswkorea.org](http://www.sswkorea.org)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불법수급자가 없는지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에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 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 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목 차

1 프로그램(식순) / ii

2. 인 사 말 / iii

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3. 축 사 / v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주제발표

강 명 순 이사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 1

5. 토 론 자:

1) 박 병 현 교수(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55

2) 이 태 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 61

3) 서 병 수 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 / 71

6. 부 록

본 연구회 연혁/관련 언론 기사 / 89

# 프로그램

1부.....사 회: 김 혜 숙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본 연구회 이사)

1)개회선언

2)국민의례

3)인사말씀.....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4)참석자소개.....사회자

5)축 사 :

조 성 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2부.....사 회:이정숙 회장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1)주제발표 : 강 명 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2014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2)토론자

1) 박 병 현 교수(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 이 태 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3) 서 병 수 소장(한국빈곤문제연구소)

3)참관자 질의/ 응답

4)총마무리 발언 : 강 명 순 이사장

# 인 사 말

안녕하십니까?

곱게 단풍으로 물든 낙엽은 어느 듯 퇴색이 되어 힘없이 많이 떨어지는 만추晩秋의 계절로 쓸쓸함이 느껴지게 하는 계절입니다.

올 겨울은 더 추울 것이라는 일기예측보도가 있던데 이 겨울을 어떻게 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 ‘사랑의 연탄은행’에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르는 모습이 나온 것을 보고 아직도 연탄을 넉넉히 때지 못하는 이웃들이 많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비단 연탄뿐이겠습니까? 일거리가 줄어들다 보니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이웃들은 몸과 마음이 실제 추위보다 더 낮은 체감온도에 떨며 살게 되겠지요.

매년 10월 17일은 ‘세계빈곤퇴치의 날’로 가난, 질병, 기아, 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자들을 기리고 빈곤퇴치를 위해 유엔에서 제정했습니다.

복지의 성령이라고 할 수 있고 현대 복지의 근간이 되는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를 5대악(惡)이 인간의 삶의 질을 가로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 양극화 고착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더욱 심화 되어 가고 있고 예전에는 개천에서 가꿈씩 용이 나기도 했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그런 소식이 거의 없습니다. 희망의 사다리가 없다 보니 가난도 대를 이어 가난이란 늪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가 사용되고 그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얼마나 복지혜택이 돌아가는지, 그들이 희망의 빛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지, 빈곤에서 얼마나 탈출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빈곤에 처해 있는 그들은 나와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동시대인이기도 하지만 사회 화합과 통합차원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에는 2014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어디에 얼마큼 쓸 것인지, 또 그 돈(재원)은 어떻게 마련 할 것인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국회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새로이 의무지출하게 될 복지 분야 등 돈 쓸 곳이 많아진 내년도 예산이 확실한 재원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구조적인 재정적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장기적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빈곤율이 16.5%로 인구 6명 중 1명꼴로 연간 소득이 빈곤선인 998만원도 못 벌고 있고 (2011년 통계청), 노인빈곤률 45%(OECD 평균 13,5%)로 풍요 속에 빈곤을 겪는 복지사각지대

에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한 예산을 더욱 꼼꼼히 이번에 챙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내년에는 빈곤의 늪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웃이 좀 더 삶의 숨통이 트이거나, 한 줄기 빛을 찾도록 하기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신 일정이지만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상 행복과 행운이 가득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14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회장 이 정 숙

# 축 사

사회복지 현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령화 등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재정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유럽의 경우 재정 악화가 특히 눈에 띄게 두드러집니다.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도 노골적으로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세라고 크게 다른 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불균형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일찌감치 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응 못할 정도로 복지욕구가 분출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회복지전문가로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남단에 파란을 일으킨 제도 역시 사회복지제도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에 국회가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이슈로도 잡아 여야 간 고성인 오갈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고, 여전히 그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라든지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수급요건에 맞는 재산기준이라든지 요율과 수령액 계산법 등, 사회복지제도를 설계하는 데에 경제학자와 수학자까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연금과 수당 중 어떤 것이 맞는지 원론적 내용에 대한 국민적 합의부터 이끌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세미나 주제로 잡은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합니다. 특히 ‘빈곤없는 나라만드는 특별위원회’(빈나특위) 위원장이기도 한 강명순 세계빈곤퇴치회 이사장님을 모셔 그간의 활동상을 돌아보는 것은 사회복지전문가들에게 큰 학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회복지학은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 자본주의가 안고 있는 근본 모순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학문입니다. 이런 학문적 본질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이끌고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경제위기로 힘겨워하는 빈곤·서민층을 위해 강명순 위원장이 어떻게 활동해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18대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100명이 함께 한 빈나특위는 빈곤현장 민생탐방과 전문가 정책개발 간담회 진행을 통해 입법과제와 정책·예산 과제를 도출함으로써, 빈곤 대물림을 막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와 법제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복지는 경제성장에 따른 부수물인 양 단선적 인과관계로 여겨져 온 게 사실입니다. 그간 복지와 경제를 선순환관계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지만, 물리적 자본 중심의 고착화된 인식을 깨고 사회적 자본 중심의 새 시대로 향하기에는 여전히 난제가 많습니다.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순응하는 제도운영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집행 중심의 운영 방식을 정책평가 중심으로 변화시켜 민관협치와 소통의 장을 여는 날이 하루빨리 도래하길 기대합니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고립으로 한계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들은 사회복지사겠지만, 이들을 실제 살릴 수 있는 건 지역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성과 공동체의식 회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 공간을 제공하고 경쟁에서 낙오된 이들을 배려할 수 있는 안식처로 지역사회가 기능하길 바랍니다. 복지전달체계에서 저마다의 전문가적 가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 선진복지사회연구회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14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조 성 철

## 주 제 발 표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  
-2014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강 명 순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빈곤퇴치회)



# 목 차

## I . 서론

## II. 2014년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정부 예산안

## III. 빈곤층 대책 100대 과제와 2014년 예산안 비교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 2011년 정책제안 지표 중심으로

## IV.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제시한 복지정책 24개 과제와 2014년 예산안 비교

## V.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참고자료 1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세부 계획안

참고자료 2. 공급 관리자 중심의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참고자료 3 빈곤상황 및 인터넷에 발표된 자살관련 자료 분석(강명순)  
(2013 삶의 질 향상과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다리 희망사다리에서 발췌함)

## I . 서론

복지예산이 105조를 넘어서서 복지국가로 향한 발걸음이 굳건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가장 시급하고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국민들의 복지체감도는 큰 변화가 없다. 오히려 대선과정에서 여야의 과도한 경쟁으로 공약이 남발되어 마치 복지가 국민에게 돈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복지 철학을 재정립하고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와 국민의 혈세가 국민을 살리는 민생복지로 이어지도록 하기위해 본고는 빈곤층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2014년 정부 발표 예산안과 비교 검토하고자한다. 빈곤층 관련 예산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2014년 국회 예결위에서 민생예산이 정의롭게 반영되기를 소망한다.

2014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안 규모는 2014년 전체 예산액의 29.6%로 총 105조9천억원이다. 전년도 복지 예산인 97조4천억원(전체예산의 28.5%)으로 8.7% 증액되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기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평균치 22%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9.6%로 미흡한 수준이다.

## 2014년 예산안

(조원, %)

| 구 분                      | '13예산         |               | '14안          | 증가율<br>(본예산 대비) |
|--------------------------|---------------|---------------|---------------|-----------------|
|                          | 본예산           | 추경            |               |                 |
| ◇ 총지출                    | 342.0         | 349.0         | 357.7         | 4.6             |
| 1. 보건·복지·고용              | 97.4          | 99.3          | 105.9         | 8.7             |
| ※ 일자리                    | 11.0          | 11.2          | 11.8          | 7.7             |
| 2. 교육<br>(교부금 제외)        | 49.8<br>(8.7) | 49.9<br>(8.8) | 50.8<br>(9.5) | 2.1<br>(9.4)    |
| 3. 문화·체육·관광              | 5.0           | 5.1           | 5.3           | 5.7             |
| 4. 환경                    | 6.3           | 6.5           | 6.4           | 1.5             |
| 5. R&D                   | 16.9          | 17.1          | 17.5          | 4.0             |
|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br>(중소기업) | 15.5<br>(6.6) | 16.7<br>(7.9) | 15.3<br>(7.0) | 11.7<br>(5.4)   |
| 7. SOC                   | 24.3          | 25.0          | 23.3          | 14.3            |
| 8. 농림·수산·식품              | 18.4          | 18.9          | 18.6          | 1.1             |
| 9. 국방                    | 34.3          | 34.5          | 35.8          | 4.2             |
| 10. 외교·통일                | 4.1           | 4.1           | 4.2           | 2.1             |
| 11. 공공질서·안전              | 15.0          | 15.2          | 15.7          | 4.6             |
| 12. 일반·지방행정              | 55.8          | 56.2          | 58.7          | 5.1             |

정부에서 발표한 2014년 예산안을 2011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100명으로 구성된 빈곤 없는 나라 만드는 특별위원회의 100대 빈곤정책 과제와 2012년 강명순의원이 제시한 빈곤층과 서민의 행복을 위한 24개 복지 정책과제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여 국민이 원하는 빈곤층을 위한 복지예산 정립에 기여하고자한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2014년 예산안의 5대 과제 중에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를 두 번째로 정하였고 세부과제는 1)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2) 일·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 3)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 4)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등이다. 2014년 빈곤 서민층과 관련한 예산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생애 주기·수혜 대상별 맞춤형 복지 지원 내용은 양육·보육, 학비, 주거 등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 한 복지수요를 맞춤형으로 확충하고,**

- 1) 어린이 필수예방접종의 현재 본인부담금을 폐지하고, 전국 12세 이하 600만명이 B형 간염과 수두 등 11개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게 되며, 전 계층 영유아에게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121개 늘린다.
- 2) 학생 지원책으로는 국가장학금을 3조2천억원으로 확대하고 2014년 1학기부터 셋째 이상 자녀의 등록금을 지원하기위해 1천225억원을 신규로 편성.
- 3) 장년·노년층 지원책으로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2014년 하반기에 도입.
- 4)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 난치 질환)지원과 관련하여 2016년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필수의료 서비스 확대하고, 2014년에 75세부터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
- 5) 2014년 10월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 제도로 전환하고, 지급대상을 73만 가구에서 94만4천 가구로 늘리고 임대료 지원도 연 96만원에서 연 130만원으로 확대. 주택구입·전세자금도 9조4천억원이 배정되어 1조7천억원이 증가.

### **2.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맞춤형복지**

- 1)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환하여 83만 가구에서 110만 가구 수준으로 기초수급자를 30%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보호대상에 추가로 12만명을 포함.
- 2) 장애인연금은 두 배로 늘어나서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증액.

### **3. 일과 복지연계 저소득층 자활 자립 지원 강화**

근로 유인 체계를 구축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하여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차상위 계층 1만 가구를 신규로 확대 지원키로 하며,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현행 월평균 임금 130만원에서 135만원 이하로 완화해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을 늘린다.

#### 4. 복지행정 효율화를 통해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복지 체감도를 높임

- 1)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1천177명 확충하고,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과정을 도울 행정업무 보조 인력도 3천487명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 2) 사회복지통합정보망 사업에 289억원을 투입하여 부처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함.
- 3) 기부식품 유통기한 관리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고 풀뿌리 복지공동체 민관협력 체계 시범 사업을 10 개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 5.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 향유 기회 확산

- 1) 예술단체의 사회보험료를 50% 지원하는 방안 도입.
- 2) 문화 예술 지원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하여 민간예술 지원규모를 1천223억원에서 1천875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포괄적·인프라 지원 방식으로 전환.

## **Ⅱ. 2014년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정부예산안**

기획재정부 2014 예산안 자료 재정리

- ☐ 역대 최초로 복지예산 105조9천억 원 시대 진입
-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 1.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단위 : 억 원, 전체 105.9조 복지예산에 대한 비율)

|       | 주요 프로그램            | 2013결산   | 2014예산    | 증감         | 비율(%)    |
|-------|--------------------|----------|-----------|------------|----------|
| 영 유 아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강화   | 249억     | 308억      | + 59억      | 36,176억  |
|       | ▪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 폐지   | 1,052억   | 1,230억    | + 178억     |          |
|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165억     | 243억      | + 78억      |          |
| 학 생   | ▪ 지역아동센터 확충(방과후돌봄) | 1,286억   | 1,320억    | + 34억      | 3.42%    |
|       | ▪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2조7,750억 | 3조1,850억  | + 4,100억   |          |
|       | ▪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 -        | 신규 1,225억 | + 1,225억   |          |
| 장 년   | ▪ 4대 중증 질환 의료비 경감  | -        | 신규 5,890억 | + 5,890억   | 15,9027억 |
|       | ▪ 주택 바우처 도입        | -        | 신규 236억   | + 236억     |          |
|       | ▪ 주택구입·전세자금 증액     | 7조6,500억 | 9조3,643억  | + 1조7,143억 |          |
| 어 르 신 | ▪ 기초노령연금 도입        | 3조2,097억 | 5조2,002억  | + 1조9,905억 | 15.02%   |
|       | ▪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 5,412억   | 5,849억    | + 437억     |          |
|       | ▪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 1,182억   | 1,407억    | + 226억     |          |

## 2. 저소득층, 장애인, 농어업인 국가 유공자 맞춤형 복지 지원

|           | 주요 프로그램                                                              | 2013결산        | 2014예산           | 증감                | 비율      |
|-----------|----------------------------------------------------------------------|---------------|------------------|-------------------|---------|
| 저소<br>득층  | ▪ 기초생활보장제도 통합급여 → 개별급여체제로 전환<br>▪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12만명 추가보호      | 80,310억       | 82,237억          | + 2,027억          | 95,947억 |
| 장애<br>인   | ▪ 장애인연금 2배 확대(현행 월 10만원 → 월 20만원)<br>▪ 장애인 심사 관련 '서류발급 대행 서비스' 신규 추진 | 3,440억<br>-   | 4,460억<br>신규 21억 | + 1,220억<br>+ 21억 |         |
| 농<br>어업인  | ▪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설,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br>▪ 농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71→77개)         | 29억<br>2,090억 | 552억<br>2,891억   | + 523억<br>+ 731억  |         |
| 국가<br>유공자 | ▪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 월 1만원 인상                                             | 5,298억        | 5,436억           | + 438억            | 9.07%   |
|           | ▪ 전세자금·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 확대                                                | 295억          | 350억             | + 55억             |         |

## 3. 일과 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

|                          | 주요 프로그램                                           | 2013결산 | 2014예산 | 증감     | 비율    |
|--------------------------|---------------------------------------------------|--------|--------|--------|-------|
| 근로유인체계구<br>축<br>자산형성 지원  | ▪ 희망리본사업 2천명 확대(10→12천명)                          | 223억   | 277억   | + 54억  | 8123억 |
|                          | ▪ 차상위 1만명 자산형성 신규 지원(희망키움통장)                      | -      | 신규 48억 | + 48억  |       |
| 취업성공패키지<br>사회보험료<br>지원확대 |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인원 3만명 확대(22→25만명)                     | 1,696억 | 2,246억 | + 550억 | 0.77% |
|                          | ▪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br>(월평균 임금 130만원 → 135만원 이하) | 5,384억 | 5,552억 | 168억   |       |

#### 4.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                        | 주요 프로그램                          | 2013결산 | 2014예산  | 증감     | 비율                          |
|------------------------|----------------------------------|--------|---------|--------|-----------------------------|
| 사회복지<br>인력 충원          | ▪ 사회복지직 공무원 1,177명 확충            | -      | 신규 119억 | + 119억 | <b>577억</b><br><b>0.05%</b> |
|                        | ▪ 기초연금·기초생보 제도개편 보조인력(3,487명) 지원 | -      | 신규 141억 | + 141억 |                             |
| 복지전달<br>체<br>계 효율화     | ▪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 추진               | 166억   | 289억    | +123억  |                             |
|                        | ▪ 도시·농촌별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 모형 개발       | -      | 신규 10억  | + 10억  |                             |
| 민간복지<br>자<br>원<br>활용강화 | ▪ 풀뿌리 복지공동체 확산 등 민관협력 시범사업 실시    | -      | 신규 2억   | + 2억   |                             |
|                        | ▪ 기부식품 유통기한 관리시스템 도입             | -      | 신규 16억  | + 16억  |                             |

#### 5. 예술인 복지 확대와 문화향유 기회 확산

|                              | 주요 프로그램                   | 2013결산 | 2014예산 | 증감     | 비율            |
|------------------------------|---------------------------|--------|--------|--------|---------------|
| 예술인복지<br>확대<br>창작활동 지원<br>강화 | ▪ 예술인 사회보험료 신규 지원         | -      | 10억    | + 10억  | <b>2,383억</b> |
|                              | ▪ 문화예술 지원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 1,222  | 1,860  | + 638억 |               |
| 문화향유 기회<br>확산                | ▪ 통합 문화 이용권 도입            | 417억   | 459억   | + 42억  | <b>0.23%</b>  |
|                              | ▪ 공공 인문학 강좌 등 인문학 향유기회 확대 | 4억     | 54억    | + 50억  |               |

#### 6. 「서민생활 안정」 2014년 주요사업

(억원, %)

|             | 2013예산  |        | 2014안(B) | 증 감<br>(B-A) | 증가율  |
|-------------|---------|--------|----------|--------------|------|
|             | 본예산 (A) | 추경     |          |              |      |
| ▪ 기초노령연금 지급 | 32,097  | 32,097 | 52,002   | 19,905       | 62.0 |
| ▪ 장애인연금     | 3,440   | 3,440  | 4,660    | 1,220        | 35.5 |
| ▪ 주택구입·전세자금 | 76,500  | 86,740 | 93,643   | 17,143       | 22.4 |
| ▪ 주거급여      | 5,692   | 5,692  | 7,285    | 1,593        | 28.0 |
| ▪ 건강보험료 지원  | 58,248  | 58,248 | 63,221   | 4,973        | 8.5  |
| ▪ 보육·양육수당   | 34,754  | 34,754 | 41,973   | 7,219        | 20.8 |
| ▪ 국가장학금     | 27,750  | 27,750 | 31,850   | 4,100        | 14.8 |

|                           |       |       |       |       |      |
|---------------------------|-------|-------|-------|-------|------|
| ■ 셋째아이 등록금 지원             | -     | -     | 1,225 | 1,225 | 순증   |
| ■ 국가예방접종실시                | 1,042 | 1,042 | 1,230 | 188   | 18.0 |
| ■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            | 2,090 | 2,090 | 2,821 | 731   | 35.0 |
|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br>(희망키움통장Ⅱ) | -     | -     | 48    | 48    | 순증   |
|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 586   | 594   | 967   | 381   | 65.0 |
| ■ 통합문화이용권                 | 417   | 417   | 459   | 42    | 10.1 |
| ■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 -     | -     | 130   | 130   | 순증   |

## 7. 2014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 핵심과제     | 주요 지표                         | '13년                     | '14년                               |
|----------|-------------------------------|--------------------------|------------------------------------|
| 영유아      | 필수예방 접종비 본인부담금<br>(0세 기준)     | 연 5만원<br>(1회, 5천원)       | (본인부담 폐지)                          |
|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96개                      | 121개                               |
|          | 어린이집 평가(개소수)                  | 15,990개                  | 18,660개                            |
| 학 생      | 지역아동센터                        | 3,742개                   | 3,989개                             |
|          | 셋째 아이 등록금                     | -                        | 연 450만원                            |
|          | 대학생장학금                        | 연 67.5 ~ 450만원           | 연 90 ~ 450만원                       |
| 장년<br>노인 | 4대 중증질환<br>(본인부담)             | 연 94만원                   | 연 최대 34만원<br>(‘16년까지 제도<br>개선 완료시) |
|          | 임플란트<br>(75세 이상, 1개당 본인부담)    | 150 ~ 300만원<br>(관행수가 예시) | 75 ~ 150만원                         |
|          | 본인부담 상한제<br>(연 소득 3,800만원 이하) | 연 200 ~ 300만원            | 연 120 ~ 250만원                      |
|          | 기초연금 지급액                      | 월 10만원                   | 월 최대 20만원                          |
|          | 노인일자리                         | 252천명                    | 317천명                              |

## 8. 2014년 수혜 대상별 맞춤형 지원

| 핵심과제  | 주요 지표                        | '13년                         | '14년                         |
|-------|------------------------------|------------------------------|------------------------------|
| 저소득층  | 수급자 가구<br>* '15.1월 기준        | 83만 가구                       | 110만 가구 내외                   |
|       | 자산형성지원(차상위)                  | -                            | 10천명                         |
|       | 통합문화이용권                      | 5만원/연                        | 10만원/연                       |
|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48천명                         | 54천명                         |
|       | 장애인연금(중증장애인)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       | 장애인 일자리 수                    | 11.5천명                       | 14.5천명                       |
| 농어업인  | 농어업 재해보험 품목 수                | 71개                          | 77개                          |
|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br>(월 소득 기준등급) | 연 최대 42.7만원<br>(19등급 월 79만원) | 연 최대 45.9만원<br>(18등급 월 85만원) |
|       | 장병                           | 사병보급(상병기준, 월)                | 11.7만원                       |
| 국가유공자 | 무공 영예수당(월)                   | 21 ~ 23만원                    | 22 ~ 24만원                    |

## 9. 복지 수요별 시민·중산층 주요 혜택

|               |              | '13년                          | '14년 계획                                   | 비고                                   |
|---------------|--------------|-------------------------------|-------------------------------------------|--------------------------------------|
| 보육<br>·<br>양육 | 접종비<br>본인부담  | 연 5만원(1회, 5천원)<br>(0세 기준)     | ⇒ 본인부담금 폐지                                | 연 △5만원                               |
|               | 보육료          | 연 1인당 264 ~ 906만원             |                                           | 지자체 부담 완화로<br>안정적 무상보육<br>기반 구축      |
|               | 양육수당         | 연 1인당 120 ~ 240만원             |                                           |                                      |
| 대학<br>교육비     | 셋째 아이        | -                             | ⇒ 연 450만원                                 | 1학년부터 시행                             |
|               | 대학생 장학금      | 연 67.5 ~ 450만원                | ⇒ 연 90 ~ 450만원                            | 연 +225~180만원<br>(연소득 7,000만원 이하)     |
| 의료<br>비       | 4대 중증질환      | 본인부담<br>연 94만원                | ⇒ 본인부담<br>연 최대 34만원<br>* '16년 제도개선 완료시 기준 | 연 △60만원<br>(진료비 경감)                  |
|               | 임플란트         | 1개당 150~300만원 부담<br>* 관행수가 예시 | ⇒ 1개당 75~150만원 부담                         | 개당 △75~150만원<br>(75세 이상)             |
|               | 본인부담 상한<br>제 | 200~300만원 부담                  | ⇒ 120~250만원 부담                            | 연 △50~△80만원<br>(연소득 3,800만원 이하)      |
| 주거지<br>원      | 주택<br>바우처    | 연 96만원<br>(주거급여)              | ⇒ 연 130만원<br>(주택바우처)                      | 연 +34만원<br>('14.10월 시행)              |
| 소득<br>지원      | 사병보급         | 연 140만원                       | ⇒ 연 162만원                                 | 연 +22만원<br>(상병기준)                    |
|               | 기초연금         | 연 120만원                       | ⇒ 연 최대 240만원                              | 연 최대 +120만원<br>(65세 이상,<br>소득하위 70%) |
|               | 장애인<br>연금    | 연 120만원                       | ⇒ 연 240만원                                 | 연 +120만원<br>(중증장애인,<br>소득하위 70%)     |

## 10. 2014년 이색사업 예산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이색사업 45개 중에서 가장 예산규모가 큰 사업은 관광사업 용자 지원으로 5,250억이고 두 번째로 큰 사업은 해외일자리창출 연계 ODA지원 확대 사업으로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KOICA 해외봉사단 파견 : 1,101억원, 개도국 개발 프로젝트 참여
- 청년인턴 : 75억원 , 해외사무소 및 사업수행업체 파견
- 다자 협력 전문가 : 14억원,
- 농진청 해외농업인턴 파견 : 19억원, ■ 개도국 농업지원 프로젝트 참여

해외봉사단 사업과 관광사업 등에 1,101억, 5250억원의 예산규모에 비해서 절대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10만명을 위해 배정된 예산은 1,320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겨우 34억이 증액되어 빈곤아동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사 급여가 한 달에 110만원-140으로 매우부족하다. 이색사업 규모와 내용을 살펴보면 절대빈곤층 예산보다 더 풍성하다.

## 기재부 발표 45 이색사업

(단위:백만원)

| 구 분                                               | '13예산            |                  | '14(안)<br>(B)    | 증감<br>(B-A)    | %              |
|---------------------------------------------------|------------------|------------------|------------------|----------------|----------------|
|                                                   | 본예산(A)           | 추경               |                  |                |                |
| ○ 백두대간 수목원 호랑이 숲 조성                               | -                | -                | 1,992            | 1,992          | 순증             |
| ○ 장날 목욕탕 설치 지원                                    | -                | -                | 900              | 900            | 순증             |
| ○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                                   | 9,776            | 9,776            | 20,076           | 10,300         | 105.4          |
| <b>○ 남.북극 극지 연구 활동</b>                            | <b>64,623</b>    | <b>64,623</b>    | <b>68,875</b>    | <b>4,252</b>   | <b>6.5</b>     |
| ○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 -                | -                | 1,200            | 1,200          | 순증             |
| ○ 울릉도·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 -                | -                | 3,500            | 3,500          | 순증             |
| ○ 수도권 안전운전체험 센터 건립                                | -                | -                | 7,000            | 7,000          | 순증             |
| ○ 침몰선박 관리사업                                       | -                | -                | 305              | 305            | 순증             |
| ○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공제제도                                 | -                | -                | 1,000            | 1,000          | 순증             |
| ○ 생태순환 복합양식시설                                     | -                | -                | 1,200            | 1,200          | 순증             |
| ○ 출연(연)-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운영·지원                          | -                | -                | 5,000            | 5,000          | 순증             |
| ○ 국가기본도(영상지도 제작)                                  | -                | -                | 3,200            | 3,200          | 순증             |
| ○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                                   | 10,887           | 17,887           | 15,847           | 4,960          | 45.6           |
| * SBAS : Satellite Based Augmentation System      |                  |                  |                  |                |                |
| ○ 다목적 전공역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개발                      | -                | -                | 6,000            | 6,000          | 순증             |
| ○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 : 이야기 할머니 2000명 1인당 3개소 전국 유치원 파견 | 4,730            | 4,730            | 7,110            | 2,380          | 50.3           |
| ○ 장애등급심사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 -                | -                | 2,101            | 2,101          | 순증             |
| ○ 의료 취약지 지원<br>(분만 취약지 지원)                        | 3,950<br>(3,950) | 3,950<br>(3,950) | 5,197<br>(4,875) | 1,247<br>(925) | 31.6<br>(23.4) |
| ○ 작은 영화관 조성                                       | -                | -                | 3,300            | 3,300          | 순증             |
| ○ 작은 영화관 기획전 상영지원                                 | -                | -                | 650              | 650            | 순증             |
| ○ 공동 집하장 설치                                       | -                | -                | 1,500            | 1,500          | 순증             |
| ○ 웹툰(인터넷 만화) 지원                                   | -                | -                | 1,000            | 1,000          | 순증             |
| ○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발                                  | 2,400            | 15,456           | 29,145           | 26,745         | 1,114.3        |
| ○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구축(학습모듈)                            | -                | 3,740            | 13,260           | 13,260         | 순증             |
| ○ 산업 단지 내 적극적 산재예방시설 설치                           | -                | -                | 10,000           | 10,000         | 순증             |

| 구 분                               | '13예산          |                | '14(안)<br>(B)  | 증감<br>(B-A)    | %           |
|-----------------------------------|----------------|----------------|----------------|----------------|-------------|
|                                   | 본예산(A)         | 추경             |                |                |             |
|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 펀드 출자                | -              | -              | 70,000*        | 70,000         | 순증          |
| ○ 세계로 프로젝트 <sup>(해외 전문대학육성)</sup> | 1,660          | 1,660          | 3,100          | 1,440          | 86.7        |
| ○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 전문펀드 조성            | -              | -              | 10,000         | 10,000         | 순증          |
| ○ 예술인 패스                          | -              | -              | 200            | 200            | 순증          |
| ○ 공연연습장 조성 및 운영                   | -              | -              | 10,000         | 10,000         | 순증          |
| ○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체계                   | -              | 10,000         | 55,000         | 55,000         | 순증          |
| ○ 상용형시간선택제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            | -              | -              | 10,052         | 10,052         | 순증          |
| ○ 수요 거점형 훈련센터                     | -              | -              | 6,200          | 6,200          | 순증          |
| <b>○ 관광산업 융자지원</b>                | <b>292,000</b> | <b>307,000</b> | <b>525,000</b> | <b>233,000</b> | <b>79.8</b> |
| ○ 마을번호사 시범사업 운영                   | -              | -              | 185            | 185            | 순증          |
| ○ DMZ세계평화공원 조성                    | -              | -              | 40,200         | 40,200         | 순증          |
| ○ 특수사고대응단 설치                      | -              | -              | 20,340         | 20,340         | 순증          |
| 치유적 사법 (HEALING COURT)            | -              | -              | 1,600          | 1,600          | 순증          |
| ○ 기초훈련병 증식비                       | 5,694          | 5,694          | 9,092          | 3,398          | 59.7        |
| ○ 해군 함정근무자 특수건강검진                 | 60             | 60             | 588            | 528            | 880.0       |
| ○ 한반도 통일 미래 센터                    | 13,442         | 13,442         | 16,223         | 2,781          | 20.7        |
| <b>○ 해외일자리창출 연계 ODA지원 확대</b>      | <b>110,900</b> | <b>110,900</b> | <b>120,900</b> | <b>10,000</b>  | <b>9.0</b>  |
| ○ 국립 생태원 출연                       | 20,001         | 20,001         | 45,436         | 25,435         | 127.1       |
| ○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 16,252         | 16,252         | 6,154          | △10,098        | △62.1       |
|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                  | 9,530          | 9,530          | 11,300         | 1,770          | 18.6        |
|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지원                    | 12,077         | 12,077         | 19,439         | 7,362          | 61.0        |

## **Ⅲ 빈곤층 대책 100대 과제와 2014년 예산안 비교**

### **- 빈곤없는나라만드는 특별위원회 2011년 정책제안 지표 중심으로**

20010년 11월 5일 오전 12시 빈곤없는 나라만드는 특별위원회(이하 빈나특위)에서 주최하는 2011년 정부 예산안 검토 및 서민 예산 반영을 촉구하는 정책간담회를 국회 본청에서 개최하였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77회의 정책 토론회, 정책 간담회 12개 팀별 현장 방문과 정책 제언 마당을 통해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100명의 정책 도출 내용을 종합 분석 재구성하였다. 그 결과 100대 빈곤문제 해결 정책과제는 자료집으로 출판되어 2012년 6월 18대 국회 임기를 마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입법과 예산, 제도 개선의 지표가 되

었다. 이 자료를 근거로 2014년 예산이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빈나특위 설립 목적과 주요활동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빈나특위 강명순 위원장이 주도적으로 조직한 빈나특위 활동은 경제위기로 힘겨워하는 빈곤·서민층을 위한 정책개발을 목표로 빈곤현장 민생탐방과 전문가 정책개발 간담회 진행을 통해 입법과제와 정책, 예산 과제를 도출하고자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100명이 함께 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다. 12개의 팀으로 구성하고 팀별로 고문, 정책팀장, 다솜팀장, 참여의원으로서 조직하여 빈나특위 활동을 통해 국가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빈곤퇴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빈곤없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매진하였다.

## 1. 빈곤퇴치 우선 과제에 따른 빈나특위 12개 팀

- |                            |                    |
|----------------------------|--------------------|
| 1) 빈곤아동 청소년 여성가장 문제해결팀     | 2) 마이크로크레딧(자활자립)팀  |
| 3) 알콜의존자 노숙자 문제해결팀         | 4) 서민계층안정화팀        |
| 5) 빈곤노인 빈곤장애인 문제해결팀        | 6) 탈북자 문제해결팀       |
| 7) 농산어촌 탄광지역 빈곤문제해결팀       | 8) 의료빈곤 개선팀        |
| 9) 다문화가족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족문제해결팀 | 10. 청년 대학생 실업문제해결팀 |
| 11) 해외교민 문제해결팀             | 12. 생명존중팀          |

## 2. 빈나특위 2009-2012 주요 활동내용

| 구분                 | 개최<br>횟수    | 국회<br>의원    | 보좌진<br>정부 및<br>현장관계자 | 연인원<br>통계     |
|--------------------|-------------|-------------|----------------------|---------------|
| 현장방문 및<br>현장 정책간담회 | 52회         | 144명        | 1,655명               | 1,799명        |
| 정책마당               | 1회          | 34명         | 87명                  | 121명          |
| 팀별간담회              | 27회         | 197명        | 1,007명               | 1,204명        |
| 출범식                | 1회          | 50명         | 61명                  | 111명          |
| 정책토론회              | 12회         | 68명         | 1,542명               | 1,610명        |
| 팀장 및 운영위원<br>연석회의  | 6회          | 20명         | 20명                  | 40명           |
| 문화행사               | 2회          | 65명         | 1,153명               | 1,218명        |
| 기자회견               | 3회          | 8명          | 33명                  | 41명           |
| <b>전체누계</b>        | <b>104회</b> | <b>586명</b> | <b>5,558명</b>        | <b>6,144명</b> |

빈나특위는 2009년도 6월 25일 '국회 의원동산 느티나무 아래에서 빈곤문제 함께 풀어내는 정책마당'을 처음으로 그 활동이 출발되었다. 2009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현장방문을 비롯하여 총 104회 빈곤퇴치 활동 참여한 누적인원은 국회의원 586명, 현장 및 정부관계자 외 5,558명으로 총 6,144명이 참여하였다.

2011년도 빈나특위에서 제시한 100대 정책과제와 2014 년 예산안과 비교하면 절대빈곤층인 노숙자와 결핵환자 비닐하우스와 알콜중독자 관련 예산, 청소년 자활과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건립등에는 예산이 전무하다. 또한 항목별로 빈곤층관련 민생예산이 증액 되었으나 자활을 통해 복지의존증을 근절하거나 근본적인 대안 마련보다 나누어 주기식 복지 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어있다.

### 3. 2011년 빈나특위 16개 분야 100대 빈곤 정책과제 와 2014년 예산안 비교표

| 분야       | 정책간담회 정책과제 제안 내용                                                                                                                                                                                                                                                                                                                                                                                                                                                                                                                                                                                            | 2011예산 반영수준 | 2014년 예산안                                                                                                                                                     |
|----------|-------------------------------------------------------------------------------------------------------------------------------------------------------------------------------------------------------------------------------------------------------------------------------------------------------------------------------------------------------------------------------------------------------------------------------------------------------------------------------------------------------------------------------------------------------------------------------------------------------------|-------------|---------------------------------------------------------------------------------------------------------------------------------------------------------------|
| 기초생활보장제도 | 1. 부양의무자 규정의 폐지, 간주부양비 폐지,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 재정비 필요<br>2. 소득공제대상 소득에서 일반근로를 포함, 공제율 30% 유지<br>3. 실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 일용직 근로자 및 추정소득 부과자의 최저임금 적용(시간당 임금)<br>4. 소득환산율 기준이 높아 상당한 부분에서 탈락을 하므로 재산 소득 환산부터 초점을 맞출 것<br>5. 현재 4인 가구 중심인 지역별 최저 생계비나 가구별 최저 생계비등을 도입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주거급여 현실화)<br>6.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적 재정의 및 인적관리 의무화,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마련(별도의 차상위층, 자활지원 관련 법 필요)                                                                                                                                                                                                                                      |             | 수급자 83만명<br>→110만명(30%증가)<br>부양의무자소득기준 완화 12만명 추가<br>생계, 의료, 주거, 교육<br>급여 개별급여<br>체제로 전환<br><br>주거급여<br>5692→7285억<br><br>차상위계층 신규 1만가<br>구 자산형성희망키움<br>통장 지원 |
|          | 7. 재개발 계획 및 미등록으로 인한 시설개선 지원 부족 대책마련<br>8. 경제위기와 대형마트 SSM 진입으로 가중되는 영세상인 지원정책 마련<br>9. 「재래시장 가는 날」 지정 및 운영<br>▪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편의시설)                                                                                                                                                                                                                                                                                                                                                                                                                                                                 |             | 온누리 상품권발행확대<br>5000억→7000억<br><br>ICT전통시장 지원 신설<br>30억원                                                                                                       |
| 빈곤위기아동   | 10. 아동정책 기본계획 및 아동복지 예산의 단계적 확대 목표 제시<br>11. 위기·학대아동의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아동복지안전망 구축<br>12. 가구소득·유형별 건강·영양·정서·안전 등 아동종합실태조사 실시<br>13. 부처별 아동관련 정책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br>14. 정부의 아동복지 예산부족(정부예산 0.01%, 복지예산 0.1%)의 대안적 방안으로 정부기금과 기업, 개인이 함께 출연하는 빈곤아동기금 조성<br>15. 2020년까지 해결해야 할 빈곤아동 문제와 목표에 대한 합의<br>16. 급증하는 빈곤아동, 한부모·맞벌이 가정자녀 지원인프라 강화(지역아동센터 지원 현실화)<br>17. 빈곤 결식아동 365일 아침·점심·저녁 급식지원<br>18. 연령대별기능별·지역별 특성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강화<br>19. 드림스타트, CDA, 지역아동센터, 방과후교실 등 관련사업의 정비 및 서비스 연계 강화<br>20. 빈곤층 자녀 공공부문 채용에 적극 채용제 도입<br>▪ 아동빈곤법안(아동빈곤위원회 설치,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통합적 사회복지지원체계 마련),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             | 지역아동센터<br>3742→3989개소확대<br><br><br>드림스타트211→220개<br>오후5시 초등 돌봄교실<br>오후10시 온종일 돌봄<br>교실 확대                                                                     |
|          |                                                                                                                                                                                                                                                                                                                                                                                                                                                                                                                                                                                                             |             |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br>등에 관한 법률 제정<br>2011.6.23.<br>강명순의원 대표 발의                                                                                                    |

| 분야 | 정책간담회 정책과제 제안 내용 | 2011예산 반영수준 | 2014년 예산안 |
|----|------------------|-------------|-----------|
|----|------------------|-------------|-----------|

| 분야                              | 정책간담회 정책과제 제안 내용                                                                                                                                                                                                                                                  | 2011년예산<br>반영수준                                           | 2014년<br>예산안                                                                          |
|---------------------------------|-------------------------------------------------------------------------------------------------------------------------------------------------------------------------------------------------------------------------------------------------------------------|-----------------------------------------------------------|---------------------------------------------------------------------------------------|
| 마<br>이<br>크<br>로<br>크<br>레<br>딧 | 21. 사회적 취약계층(여성 등)의 참여자 확대<br>22. 사전사후 교육 및 맞춤형 사례관리 제도 강화<br>23. 민간 수행기관의 자립지원금(운영비) 지원                                                                                                                                                                          |                                                           | 1:1밀착사례관리<br>개인별맞춤서<br>비스<br>1만명 → 1만2<br>천명<br>취업성공패키지<br>지원확대                       |
|                                 | 24.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br>25. 복지서비스와 금융서비스의 통합적 접근 필요<br>26. 민관협력체계의 유기적으로 구축<br>27. 미소금융 운영 재원의 안정화<br>28. 각 부처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총괄 조정 기구 마련                                                                                                                       |                                                           |                                                                                       |
|                                 | 29. 고용과 금융소외를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재인식<br>30. 사업수행 역할에 따른 단계별 전문교육 시스템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br>31. 마이크로파이낸스 기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                                                           |                                                                                       |
|                                 | 소액 무담보·무보증 자립자금 대출에 관한 법률안<br>▪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2009년 8월 26일<br>강명순의원 대표 발의<br>2010년 5월 6일<br>강명순의원 대표 발의 |                                                                                       |
|                                 |                                                                                                                                                                                                                                                                   |                                                           |                                                                                       |
| 빈<br>곤<br>위<br>기<br>청<br>소<br>년 | 32. 빈곤위기청소년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확대<br>33. 청소년쉼터의 유형별 인력 1인 이상 추가 배치<br>34. 전국 5개 청소년일시쉼터 전국 16개 광역시도 확대                                                                                                                                                       |                                                           |                                                                                       |
|                                 | 35. 청소년자활 인턴과정, 진로설계형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br>36. 청소년자활지원관 정책 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br>37. 청소년 자활자립을 위한 청소년자활지원관 운영비 현실화                                                                                                                                                     |                                                           |                                                                                       |
|                                 | ▪ 가출 및 자립청소년 지원 법률안<br>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 2011년 6월 29일<br>강명순의원 대표발의                                |                                                                                       |
|                                 |                                                                                                                                                                                                                                                                   |                                                           |                                                                                       |
|                                 |                                                                                                                                                                                                                                                                   |                                                           |                                                                                       |
| 성<br>범<br>죄                     | 38. 성범죄 피해 아동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br>39. 전용쉼터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br>40.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해 피해자 부모 요청시, 가해자 출소시 사전고지<br>41. 성범죄 피해 직후 응급치료 의무화와 병원의 응급키트 구비 강제화<br>42. 성범죄 피해 장루환자 지원 강화<br>43. 피해 예방을 위해 흉악범 얼굴 및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인터넷으로 아동 성폭력범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시행, 복지 시설 및 학교 내 전담 인력을 확충 |                                                           | 성폭력피해자증<br>인보호시설확<br>대지원<br>18억→22억원<br>28→63개소<br><br>통합지원센터<br>33→37개소<br>126억→151억 |

| 분야             | 정책간담회 정책과제 제안 내용                                                                                                                                                                                                                                                                                                               | 2011년예산 반영수준                 | 2014년 예산안                                                                                                 |
|----------------|--------------------------------------------------------------------------------------------------------------------------------------------------------------------------------------------------------------------------------------------------------------------------------------------------------------------------------|------------------------------|-----------------------------------------------------------------------------------------------------------|
| 성폭력<br>·<br>아동 | 44. 가해자 처벌을 위해 양형기준 상향조정, 유기징역형 상한 확대, 공소 시효 정지·취업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심신미약 혹은 정신장애로 인한 감형요소를 엄격 구분함.                                                                                                                                                                                                                                  |                              |                                                                                                           |
|                | 45. 재판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를 위해 국선 변호사 선임 및 증거물 열람권 부여                                                                                                                                                                                                                                                                                |                              |                                                                                                           |
|                | 46.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교정시설 내에서 실질적인 교화 교육을 실시, 교도관 교육 및 증원 필요<br>47. 교정국·경찰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찰은 성범죄자 DB관리 필요<br>48.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인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재판시 출석의 의무를 삭제, 녹화된 영상물로 대체, 전문가들에 의해 진술타당성분석보고서를 만들어 기소 시 첨부하여 기소율을 높일 것.<br>49. 아동학대 신고의무대상자 교육의 부재를 막기 위해 교육이수 강제화<br>50. 지역 사회 내에서 학교 및 복지시설과 지자체 기관들이 협력하여 아동성폭력에 대한 다학제간 팀 접근이 필요 |                              | 범죄자관리체계강화<br>성폭력전담수사체계<br>구축67→88억<br>전자발피부착확대<br>(2500→3100명)<br><br>아동 청소년 보호성<br>폭력보호위한경찰<br>관4000명 증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개정(가해자 처벌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성교육 의무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피해 아동 국선 변호사 선임), 교정 공무원법 제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교정시설 내 교화 및 상담 강화))</li> </ul>                                                                                                  | 2010년 9월 15일<br>강명순의원 대표발의), |                                                                                                           |
| 농어촌            | 51. 잉여쌀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마련                                                                                                                                                                                                                                                                                                          |                              | 농산물 모태 펀드<br>600억                                                                                         |
|                | 52. 농산물 시장거래 가격 현실화                                                                                                                                                                                                                                                                                                            |                              | 동계 논 이모작<br>직불금 신설                                                                                        |
|                | 53. 쌀 직불금 지원기준 완화                                                                                                                                                                                                                                                                                                              |                              | 수산 직불제<br>확대 시행                                                                                           |
| 농어촌            | 54. 5도 2촌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사업 활성화                                                                                                                                                                                                                                                                                          |                              |                                                                                                           |
|                | 55. 마을회관, 노인회관 시설유지를 위한 지원                                                                                                                                                                                                                                                                                                     |                              |                                                                                                           |
|                | 56.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 및 육성방안 마련                                                                                                                                                                                                                                                                                             |                              | 고령농가 농지<br>연금 보장성 강화                                                                                      |
| 농어촌            | 57. 농어촌 국제결혼 증가에 따른 다문화가정 지원 강화                                                                                                                                                                                                                                                                                                |                              |                                                                                                           |
|                | 58. 농어촌 노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 및 노령화 정책                                                                                                                                                                                                                                                                                          |                              |                                                                                                           |
|                | 59. 농어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예산 증액                                                                                                                                                                                                                                                                                                         |                              | 농수산물 수출 촉진<br>5493→6479억                                                                                  |
| 농어촌            | 60. 농촌 특화 지역아동센터와 여성 농업인 센터 확충                                                                                                                                                                                                                                                                                                 |                              |                                                                                                           |
|                | 61. 농산물 적정 거래가격 유지 및 직거래 판로개척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의료 인력 수급)</li> </ul>                                                                                                                                                                                                                                                |                              |                                                                                                           |
| 의료관리           | 62. 노령화사회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예방중심 주치의제도 시행                                                                                                                                                                                                                                                                                        |                              | 기초노령 연금<br>32,097→52,002억원                                                                                |
|                | 63. 과잉 의료이용자 중심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를 벗어나 2차 예방(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1차 예방(질병예방), 건강생활실천 등의 포괄적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 저소득층의료비 본인<br>상환액<br>200→120만원으로<br>하향조정                                                                  |
|                | 64. 지자체가 운영하고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관련 인력 일부와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 인력을 통합하는 의료급여사례관리센터 설립                                                                                                                                                                                                                                                     |                              | 4대 중증 질환 건강<br>보험 보장 확대                                                                                   |
| 의료관리           | 65. 충분한 의료보장,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안전망 기금 도입                                                                                                                                                                                                                                                                                       |                              |                                                                                                           |

| 분야        | 정책간담회 정책과제 제안 내용                                                                                                                                                                                                                                                                                                             | 2011년예산<br>반영수준                                                       | 2014년<br>예산안                                                     |
|-----------|------------------------------------------------------------------------------------------------------------------------------------------------------------------------------------------------------------------------------------------------------------------------------------------------------------------------------|-----------------------------------------------------------------------|------------------------------------------------------------------|
| 비닐하우스거주자  | 66. 임대아파트 이주시 수급권 박탈로 보증금 대출이자, 관리비, 월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대출금 이자상환기간과 관리비 등에 대한 특례 적용 필요                                                                                                                                                                                                                                             |                                                                       |                                                                  |
|           | 67. 2007년 조사에 제외대상 전체 가구의 40%이상이므로 재조사 필요<br>68. 체비지변상금 등에 대한 재점검<br>69. 비닐하우스 거주민이 주거이전 희망 시 유예기간과 보상기준 명확히 제시<br>70. 초기정착을 위한 전세전환 및 전세금 저리 융자 연계<br>71. 주거급여의 현실화 및 긴급 주거 지원 제도 활성화<br>72. 공공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확대<br>73. 정책에 대한 분석과 향후계획, 위장전입 예방에 대한 대책, 초기정착을 위한 정책, 입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br>74. 투기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 |                                                                       | 서민주택 구입전세 자금<br>7.7조→9.4조원<br>(1.7조원 증액)<br>전세 임대매입 임대공급 지원단가 인상 |
| 노숙인       | 75. 노숙인의 자활과 자립을 돕는 일자리 창출과 높은 금리의 저축 사업 중대, 노숙인의 건강권을 위한 의료 시스템 확립<br>76. 노숙인, 쪽방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사업의 실질적인 수요 조사 및 관리 필요<br>77. 노숙인 사업의 국고 재 이양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랑인·노숙인법 제정(노숙인, 부랑인 사업의 통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부랑인·노숙인 명칭 통합)</li> </ul>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br>2011.4.29 제299회 국회 임시회 대안의결<br>[강명순의원 대표발의] |                                                                  |
| 청년실업      | 78. 청년실업자 맞춤형 취업지원 및 일자리 확대<br>79. 기술훈련 및 창업연계를 통한 실업극복<br>80. 중소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여건 개선 및 사회적 인식 전환<br>81. 직업능력개발카드 실효성 제고                                                                                                                                                                                                      |                                                                       | 청년 창업 엔젤펀드<br>1000억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년실업해소특별법(장애인 미취업자 취업기회 제공)</li> </ul>                                                                                                                                                                                                                                                |                                                                       |                                                                  |
| 북한이탈주민    | 82.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취업, 창업지원 및 자립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필요                                                                                                                                                                                                                                                                   |                                                                       |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강화<br>68억→135억원<br>북한이탈여성 청소년교육시설지원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정비(비보호 대상자 구제)</li> </ul>                                                                                                                                                                                                                                         |                                                                       |                                                                  |
| 생명존중-자살예방 | 83. 자살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및 심각성 인식, 전문가 양성, 예방적 대책 강구<br>84. 생명존중 범국민 운동 전개<br>85. 국내외 자살예방 단체 지원<br>8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안 제정                                                                                                                                                                                                |                                                                       | 자살 예방 및 지역 정신보건사업확대<br>352억→374억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단계별 정책, 세부사업규정)</li> </ul>                                                                                                                                                                                                                                 |                                                                       |                                                                  |

| 분야   | 정책간담회 정책과제 제안 내용                                                                                                                                                                                          | 2011년<br>예산반영수준 | 2014년<br>예산안                                                                                                        |
|------|-----------------------------------------------------------------------------------------------------------------------------------------------------------------------------------------------------------|-----------------|---------------------------------------------------------------------------------------------------------------------|
| 장애인  | 87. 장애인연금 지급수준이 비현실적이므로 점진적 확대 필요<br>88. 지적장애인 요양 바우처 지급기준 확대, 평생교육 및 그룹홈 형식 지원<br>89. 장애아동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 장애인연금2배확대<br>3440→4460억원<br>장애인연금부가급여<br>지속지원<br>장애 대학생 학습<br>도우미<br>2500→2600명<br>장애인 활동 지원<br>서비스<br>4.8만→5.4만명확대 |
| 알콜중독 | 90. 복지부의 소극적 알코올 중독 사업에서 예방, 재활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 강화<br>91. 알콜 상담센터의 예산 지원, 중독 관련 전문 인력의 확충 및 전문화<br>92. 복지부의 2010 파랑새 플랜 이후 새로운 국가 차원의 알코올 중독 방지 계획의 정립<br>93. 도박, 게임 등 각종 중독 관련 사업들의 국가중독사업의 일원화              |                 |                                                                                                                     |
|      | 94. 알콜중독 예방을 위한 주류세 건강증진기금 부과 및 국가 중독사업 일원화<br>95. 알콜 치료 전문시설과 무료병원 확충, 빈민지역 거점센터 형식의 알코올 클리닉 개설<br>96. 주류광고 규제와 음주폐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를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증진법 개정(주세의 추가부담), 국가 중독사업 통합법안 제정(각종 중독 관련 사업 통합)</li> </ul>                                                                                                   |                 |                                                                                                                     |
| 해외국민 | 97. 경제위기로 파탄이 된 교민들에 대한 창업 및 생계지원<br>98. 불법체류자들이 귀국도 생존도 어려우므로 시급한 복지지원 대책필요 (가족동반자살 예방)<br>99. 경제파탄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의 해외교민 아동청소년 긴급지원<br>100. 워킹홀리데이 비자발급청년의 해외취업 실태조사 및 노동력 착취, 질병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                 | 해외 창업, 해외 취업<br>인턴 봉사에 대한<br>통합정보제공<br>185억→328억                                                                    |

## IV. 2012년 10월을 기점으로 제시한 복지정책 24개 과제와 2014년 예산안 비교

빈곤층을 위한 생존권보장,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일자리, 자활, 자립 등 서민중심복지, 맞춤형복지, 통합하는 복지, 찾아가는 복지, 민관참여 복지를 주제로 정책과 비전, 과제를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 예산안과 비교한 결과 비정규직 여성 일자리 보완과 빈곤아동 청소년 사례관리를 위한 학교 내 사회복지사 배치, 빈곤아동 수당 지급, 아동 양육 지원 센터, 노숙인등 지방이양사업의 환원 등은 기재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제시한 자료에서는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투표권을 의식한 노인과 장년 대학생 등록금 지원 등 복지의존증을 유발하는 현금지급방식의 보충적인 급여를 복지로 생각할 때 국가 재정도 문제가되지만 국민들의 자립의지를 저하하여 빈곤상태를 고착시킬 수도 있다.

| 구분             | 행복한 자활                                       |                                        |                                            |                              |                                          |                                         | 행복한 일자리                                     |                                              |                                                          |                                                        |                                           |
|----------------|----------------------------------------------|----------------------------------------|--------------------------------------------|------------------------------|------------------------------------------|-----------------------------------------|---------------------------------------------|----------------------------------------------|----------------------------------------------------------|--------------------------------------------------------|-------------------------------------------|
| 비전             | 생존권을 보장하는 든든한 지지망 울타리                        |                                        |                                            |                              |                                          |                                         | 행복한 일자리 행복한 삶의 질 향상                         |                                              |                                                          |                                                        |                                           |
| 정 책 명          | 자활지원<br>으로<br>빈곤퇴치                           | 복지 사각지대 해소 -<br>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                                            |                              | 기초노령<br>연금제도<br>개선                       | 장애인<br>연금제도 개선                          | 청년<br>청소년<br>일자리확대                          | 베이비<br>부머<br>세대지원                            | 비정규직<br>여성일자리<br>보완                                      | 노인<br>일자리<br>확대                                        | 사회복지시설<br>종사자<br>취우개선                     |
| 당면<br>문제       | 근로빈곤층<br>working<br>poor의<br>빈곤층잔존           | 비수급<br>빈곤층<br>해소                       | 현재최저<br>생계비가<br>평균소득<br>40%에도<br>미치지<br>못함 | 부양의무자<br>기준으로<br>기초수급자<br>탈락 | 70%지원<br>일률적으로<br>하면서<br>빈곤 노인<br>지원 부족  | 장애인 등급<br>심사 의사<br>1000명 급여<br>지불       | 전체 실업자<br>86만명 중<br>15-29세<br>청년실업자<br>32만명 | 베이비부머세대<br>712만명 중<br>311만명 은<br>퇴예정         | 특수고용<br>형태의<br>비정규직<br>58만9천명,<br>비정규직<br>산재가입율<br>50%안팎 | 일자리<br>희 망 하는<br>노인<br>116만명중<br>20만명 만<br>취업<br>17.2% | 사회복지사가<br>2명이면<br>기초수급자로<br>전락함           |
| 해 가 달 구<br>(명) | 30만명<br>(차상위,<br>비정규직)<br>지원                 | 1만가구<br>(신규)                           | 중위소득<br>40%60%                             | 100만<br>가구                   | 소득기준으로<br>사각지대<br>빈곤노인 포함                | 250만명                                   | 32만명                                        | 311만명 중<br>상용 근로자<br>100만명                   | 552,700명                                                 | 116만명                                                  | 387,374명                                  |
| 정책<br>내용       |                                              | 재산<br>소득<br>환산제<br>도입                  | 최저<br>생계비<br>계측<br>조정                      | 수급자 탈<br>락 빈곤세<br>대 지원       | 국민연금제<br>도가 노후<br>보장제도자<br>리잡까지<br>중간 정책 | 장애인<br>등급 하락<br>조정으로<br>장애인들의<br>불안정 해소 | 청년 청년<br>취업희망자<br>직업훈련<br>생계 지원             | 베이비부<br>머<br>세대<br>은퇴예정자<br>노 후 준 비<br>교육 지원 | 비정규직<br>여성일자리<br>산재보장 및<br>고용불안정<br>해소                   | 7개월<br>20만원<br>공공근로<br>형 일자리<br>보완                     | 사회복지시설<br>근무 종사자<br>취우 개선                 |
| 목표             | 근로빈곤층<br>자립지원                                | 수급자<br>선정기준<br>개선                      | 극한적<br>생계지<br>지원                           | 단계적 폐<br>지로 보완               | 합리적 제<br>도 개편                            | 장애인 생활<br>안정                            | 청년실업자<br>취업                                 | 노후준비로<br>사회적 부담<br>완화                        | 산재보장성<br>강화                                              | 노인 자활<br>일자리 제공                                        | 임금수준 현<br>실화                              |
| 기대<br>효과       | 탈수급시<br>맞춤형지원<br>자활장려                        | 재산<br>환산율<br>제도<br>파괴구제                | 인간적인<br>기본적<br>삶의 보장                       | 7080노인<br>빈곤세대<br>지원         | 국민연금관<br>의 관계 재<br>설정                    | 장애인의<br>삶의 질<br>개선                      | 청년실업자를<br>국가성장<br>동력으로<br>성찰할 수<br>있도록 지원   | 준비없는<br>은퇴자 노후<br>생활설계                       | 비정규직<br>여성일자리<br>안정화                                     | 시니어<br>직능<br>클럽확대                                      | 근무환경<br>개선으로<br>사회서비스<br>질 향상             |
| 이행<br>절차       | 자활장려금<br>(ETC)지원<br>확대<br>사례관리<br>성과관리<br>확대 | 주거재정<br>지원율<br>4.17%<br>→ 1.04%<br>로인하 | 상대적<br>빈곤선<br>산출방식<br>전환                   | 차상위소득<br>자녀는 기<br>준 유지       | 기초노령연<br>금제도 개<br>편                      | 장애인<br>10대 정책<br>제안 반영                  | 청년<br>사회적기업<br>활성화지원                        | 5년간 재<br>무 및 취업<br>생활전반 온<br>라인 교육실<br>시     | 의무고용<br>전환에 따른<br>고용주<br>부담분의<br>20%지원                   | 고령자 친<br>화형 전문<br>기업확대<br>11개월 30<br>만원                | 호봉제<br>초과 근무수<br>당 보완<br>교원공무원수<br>준으로 지원 |

|          |                                               |                                                       |                                                |                                                        |                                                                       |                                      |                                                            |                                                                                                                 |                                            |                                                                                     |                                                |
|----------|-----------------------------------------------|-------------------------------------------------------|------------------------------------------------|--------------------------------------------------------|-----------------------------------------------------------------------|--------------------------------------|------------------------------------------------------------|-----------------------------------------------------------------------------------------------------------------|--------------------------------------------|-------------------------------------------------------------------------------------|------------------------------------------------|
| 보완<br>법  | 근로기준<br>법<br>개정<br>2012제정                     | 재난소독제 고사개정 '12.12<br>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편 및<br>개별급여 법적 체계 개선 |                                                |                                                        | -                                                                     | -                                    | -                                                          | -                                                                                                               | -                                          | -                                                                                   | -                                              |
| 제도<br>개선 | 자녀형성<br>지원<br>미소금융<br>개편<br>마이크로<br>크리드<br>지원 | 금융재산<br>물<br>6.26%<br>→<br>8.34%<br>로<br>인상           | 사회복지<br>혁신적<br>대안 제시                           | 자녀 취업시<br>근로소득<br>공제로<br>활성화 유도                        | 국회 연금<br>제도 개선<br>특의 구성                                               | 등급판정의사<br>급여비로<br>애인 지원              | 가출청소년<br>자립지원,<br>청년실업자<br>창업지원                            | 보육부<br>민<br>간<br>체<br>협<br>력<br>위탁 수행                                                                           | 학습지교사<br>골프강캐디<br>아동복지교사<br>근무환경개선<br>신채적용 | 노인일자리<br>취업보수<br>교육<br>및 훈련비<br>지원                                                  | 복지사 전<br>문성강화<br>사회 복지 사<br>공제회 지원             |
| 예산<br>추계 | 추가<br>지<br>원<br>사<br>원<br>지<br>원<br>약 500억    | 723억                                                  |                                                |                                                        | 매년 3000억<br>추가 재정<br>소요                                               |                                      | 청년 사회<br>적<br>가<br>치<br>창<br>조<br>지<br>원<br>센<br>터<br>48억원 | 교육개발 훈<br>련비<br>170억                                                                                            | 산재보장<br>110억원                              | 3056억                                                                               | 월10만원<br>씩 지원<br>4648억원                        |
| 조달<br>방안 | 일반회계로<br>편성                                   | 국비기<br>준<br>일<br>반<br>회<br>계<br>로<br>편<br>성           |                                                |                                                        | 2013년<br>44조<br>77억원<br>(국비기<br>준<br>일<br>반<br>회<br>계<br>로<br>편<br>성) |                                      | 국비 및<br>지방비<br>추가 지원                                       | 국비<br>일반회계<br>편성                                                                                                | 국비<br>일반회계<br>편성                           | 매년 국비<br>지방비<br>추가 지원                                                               | 국비<br>일반회계<br>편성                               |
| 2014년    | ETC반영<br>차상위1<br>만명자산<br>형성지원<br>48억          | 비<br>소<br>금<br>에<br>반<br>영                            | 개<br>별<br>금<br>로<br>여<br>전<br>부<br>모<br>조<br>화 | 수<br>30%<br>가<br>83만<br>명<br>에<br>서<br>110만<br>명<br>으로 | 5조 2002<br>억<br>예산                                                    | 장<br>애<br>인<br>2<br>배<br>연<br>속<br>대 | 일·학<br>습<br>시<br>도<br>병<br>행<br>스<br>터<br>임                | 중<br>장<br>년<br>일<br>자<br>리<br>희<br>망<br>운<br>영<br>센<br>터<br>직<br>자<br>에<br>게<br>재<br>취<br>업<br>창<br>업<br>제<br>시 |                                            | 이<br>아<br>기<br>할<br>머<br>니<br>유<br>치<br>원<br>파<br>견<br>일<br>자<br>리<br>제<br>공<br>71억 | 사<br>회<br>복<br>지<br>사<br>공<br>제<br>회<br>지<br>원 |

| 구분                  | 행복한 배움                                                 |                                       |                                                 | 행복한 삶                                                   |                                                      |                                                            |                                           |                                       |
|---------------------|--------------------------------------------------------|---------------------------------------|-------------------------------------------------|---------------------------------------------------------|------------------------------------------------------|------------------------------------------------------------|-------------------------------------------|---------------------------------------|
| 비전                  | 우리 생명 함께 지키리                                           |                                       |                                                 | 희망 사다리 오르며 몸과 맘 희망으로 날아 오르리                             |                                                      |                                                            |                                           |                                       |
| 정책명                 | 아동청소년<br>생명지킴이                                         | 장애아동<br>청소년<br>지원                     | 학교내교육복<br>지 전문<br>인력 배치                         | 주거<br>보<br>금<br>지<br>원                                  | 빈곤아동<br>주<br>당<br>지<br>급                             | 지역사회<br>방과후<br>돌봄<br>통합                                    | 의료빈곤층<br>지<br>원                           | 에너지<br>빈<br>곤<br>층<br>지<br>원          |
| 당면<br>문<br>제        | 아동학대수<br>학교폭력수<br>성 폭 력 피 해 수<br>증가와<br>왕따 피해<br>자살자증가 | 정신지체<br>발달장애<br>뇌병변장애80%<br>가<br>사각지대 | 학교폭력<br>집단화<br>전연령화<br>흉폭화<br>가정폭력<br>성폭력<br>확산 | 쪽방<br>고시원<br>비닐하우스<br>거주자 및<br>노숙인 부랑인<br>알콜중독자<br>차단지원 | 6세이상<br>빈곤아동<br>100만명<br>빈곤상황<br>방지<br>왕따 표적<br>범죄노출 | 주5일제<br>수업으로<br>방과후 방치 아<br>동 증가9-11세<br>아동<br>23.8%<br>방치 | 농어촌<br>광산촌<br>도시빈민<br>공단지역<br>의료빈곤층지<br>원 | 경로당<br>농어촌<br>도시빈민세대<br>난방유<br>지<br>원 |
| 해<br>당<br>가<br>구(명) | 3만 7809명                                               | 8만 7892명                              | 3만 2152명                                        | 주거부담<br>비율이<br>25% 이상 가<br>구                            | 124만명                                                | 10만명<br>이상(추산)                                             | 차상위<br>대상<br>30만명<br>수준                   | 경로당6만177<br>3개소<br>연탄사용빈곤<br>층16만명    |
| 정<br>책<br>내<br>용    | 가정<br>어린이집<br>학교 지역<br>사회에서<br>안전보호                    | 장애아동지원 사<br>각지<br>대 생애주<br>기별특성 지원    | 왕따 쩌따<br>부적응<br>폭행장애<br>중퇴 아동 청소년<br>사례<br>관리   | 주거급여<br>지원(주거<br>개선비,<br>임대료,<br>비주택<br>거주민<br>지원 등)    | 6세-18세<br>미만 아동<br>청소년<br>바우처형태<br>수당지급              | 지역아동센터 지<br>원 현실화<br>방과후<br>서비스통합체계                        | 의료생협<br>을 통한<br>의 료 빈 곤 층<br>사례관리 지<br>원  | 겨울철<br>난방비<br>지<br>원                  |
| 목<br>표              | 아동청소년 생<br>명 보호                                        | 장애아동청소년<br>지원 확대                      | 학생유구에 맞춘<br>지도                                  | 주거복지 체<br>계적<br>지<br>원                                  | 빈곤아동<br>미래성장<br>동력화                                  | 지역사회<br>안에서 아동보<br>호 확대                                    | 예방적<br>건강정책<br>강화                         | 기본적 에너지<br>유지보장                       |
| 기<br>대<br>효<br>과    | 중소도시<br>농어촌아동 문<br>화공간                                 | 성폭력<br>학원폭력<br>대상에서                   | 사례발굴<br>지역사회<br>자원개발                            | 최저주거생활<br>보장 및 주거<br>의 질 향상                             | 탈북민<br>다문화자녀빈<br>곤아동                                 | 방과후<br>돌봄서비스<br>효율성강화                                      | 건강관리통한<br>질병예방 및 절<br>의료비용                | 동사,<br>건강악화 방지<br>등 서민체감              |

|           | 마련                                | 보호                                    | 상처치유                                   |                                                       | 빈곤대물림차단                                         | 통합체계 구축                                                          | 감                                                               | 효과                                     |
|-----------|-----------------------------------|---------------------------------------|----------------------------------------|-------------------------------------------------------|-------------------------------------------------|------------------------------------------------------------------|-----------------------------------------------------------------|----------------------------------------|
| 이행절차      | 성범죄<br>종사자<br>원스트라익아웃<br>제도입      | 성년<br>후견제<br>도입                       | 게임중독<br>폭력중독<br>분노조절<br>게임             | 주거복지<br>실시<br>태조사<br>및 단계적<br>시행                      | 연령별<br>6-9세<br>6-12세<br>6-15세<br>6-18세<br>단계별지원 | 지역아동센터 방<br>고흥<br>아카데미<br>방과후중심 돌봄<br>연계통합                       | 지역아동센터 방<br>고흥<br>아카데미<br>방과후중심 돌봄<br>연계통합                      | 전국 및 지역<br>단위 실태조사<br>실시               |
| 보완법       | 14세미만 나홀<br>로방치 금지법               | 성년후견제 시행<br>법                         | -                                      | 주거복지지원<br>법 제정                                        | 빈곤아동수당<br>근거법<br>마련                             | -                                                                | -                                                               | 에너지<br>빈곤층<br>지원에<br>대한 법<br>제정        |
| 제도개선      | 시설 안전<br>점검강화<br>성범죄학원폭력<br>가해자교육 | 사각지대<br>장애아동<br>청소년<br>지원 종합<br>대책 수립 | 상담을<br>넘어서 사례<br>관리 전문<br>학교사회<br>복지사로 | 최저주거기준<br>제정<br>및<br>주거복지<br>실시<br>태조사<br>및 단계적<br>시행 | 상대적<br>빈곤율<br>적용하여<br>월 10만원부<br>터 지원<br>시작     | 지역사회문제아동<br>청소년 위한 지역<br>사회복지사제도<br>확립청소년 지역<br>아동센터 강화          | 의료취약<br>계층주치의제<br>도,<br>지역협력의료<br>자원체계 구<br>축                   | 학업연료 연탄<br>대체까지 전환<br>위한 대책 수<br>립     |
| 예산추계      | -                                 | -                                     | -                                      | 1,839억                                                | 2014년<br>1,440억                                 | 2012년<br>예산보다<br>559억 증액                                         | -                                                               | 255억                                   |
| 조달방안      | 국비<br>일반회계로<br>편성                 | 국비<br>일반회계로<br>편성                     | 국비<br>일반회계로<br>편성                      | -                                                     | 국비50%<br>지방비<br>50% 편성                          | 국비 및<br>지방비 지원<br>편성                                             | -                                                               | -                                      |
| 2014<br>년 | 성폭력피해자<br>보호시설확대<br>22억원          | 성년후견제 도<br>입<br>장애아 돌봄서<br>비스 확대      |                                        | 주거급여<br>7,285억                                        |                                                 | 지역아동센<br>터<br>3989개 소 지<br>원<br>(1,320억원)<br><br>예 산 증 액 34<br>억 | 저 소 득 층<br>의료비<br>인부담<br>상<br>한액 인하<br>200만 원<br>에서 120만<br>원으로 | 저소득층<br>난방효율 개<br>선비용<br>약 150만원<br>지원 |

| 구분       | 행복한 공보육                                                     |                                           |                                                |                                                     | 행복한 전달체계                                           |                                                    |                                        |
|----------|-------------------------------------------------------------|-------------------------------------------|------------------------------------------------|-----------------------------------------------------|----------------------------------------------------|----------------------------------------------------|----------------------------------------|
| 비전       | 행복한 아동 행복한 부모 행복한교사                                         |                                           |                                                |                                                     | 수요자 중심 통합복지<br>찾아가는 전달체계 구축                        |                                                    |                                        |
| 정책명      | 영유아<br>기초양육<br>지원                                           | 보육교사<br>처우개선                              | 아동양육<br>지원센터                                   | 보육시설<br>지원 평준화                                      | 지방이양<br>사업 환원                                      | 찾아가는<br>복지전달<br>체계                                 | 지역복지<br>균형 발전<br>보조금제<br>도입            |
| 당면<br>문제 | 어린이집<br>이용아동<br>지원에 비해<br>영유아 가정<br>양육아동<br>지원 형평성<br>보완 제기 | 보육교사<br>저임금<br>장시간<br>근무<br>토요근무 등<br>해소  | 집에서<br>양육할 경우<br>지역사회중<br>심미 육아<br>지원기관<br>필요  | 법인시설<br>지원이 민간<br>보육시설이나 국<br>공립시설<br>보다 열악         | 2005년<br>138개 국고<br>보조사업 중<br>6개사업<br>이양된 것<br>재검토 | 복지재정<br>전달체계<br>복지 체감도<br>제고를 위한<br>추가조치<br>필요     | 무상급식<br>지원등으로<br>지방정부<br>재정난 악화        |
| 해당가구(명)  | 67만명                                                        | 16만5천명                                    | 67만명                                           | 5,851명                                              | -                                                  | -                                                  | -                                      |
| 정책<br>내용 | 0-2세아동<br>공공보육비<br>공과비 제외 양<br>육비용<br>20만원 지원               | 보육교사<br>특수교사<br>전문성 책임강<br>화 지원 및<br>처우개선 | 지방보육<br>정 보 센 터 와<br>연계한<br>아동양육<br>지원센터<br>확대 | 농 어 촌 에<br>51.5%가 소재<br>한 법인보육시<br>설 유아교사 인<br>건비지원 | 노동안<br>재정자립도<br>지역별<br>복지사업<br>축소문제<br>해결          | 우리동네<br>복지서비스<br>찾기<br>수요자 중<br>찾아가는<br>사례관리<br>확충 | 지역복지<br>균형 발전을<br>위해 발전<br>보조금지급<br>지원 |

|           |                                                  |                                                             |                                                         |                                                         |                                                |                                         |                                                                    |
|-----------|--------------------------------------------------|-------------------------------------------------------------|---------------------------------------------------------|---------------------------------------------------------|------------------------------------------------|-----------------------------------------|--------------------------------------------------------------------|
| 목표        | 지원대상<br>지원액<br>확대                                | 보육교사임금현<br>실화                                               | 부모와 노인<br>일자리연계<br>아동보호                                 | 농어촌에 위치<br>한<br>보육시설<br>운영안정성<br>보장                     | 지방이양<br>사업 종합<br>평가 후<br>환원                    | 복지접근성<br>체감도 향상                         | 자체 복지 능력 강<br>화 지원                                                 |
| 기대<br>효과  | 저출산<br>사회에서<br>영유아 양육<br>고통 분담                   | 양질의 보육 서<br>비스 제공                                           | 영유아<br>양육의<br>전통과<br>공동체<br>육아전승                        | 농어촌 소재 보<br>육시설<br>안정적<br>운영과<br>양질의<br>서비스 제공          | 평가를<br>비탕으로<br>중앙정부와<br>지방정부<br>결정육구<br>반영     | 복지자격<br>가판정<br>시스템 구현<br>모바일<br>앱서비스구축  | 지역사회<br>서비스투자<br>사업 및<br>광역 지역별<br>특별<br>회계<br>통합 지원               |
| 이행<br>절차  | 영아는 부모양<br>육이 아동<br>발달에<br>더 바람직함<br>고려<br>지원 확대 | 2세이하아동교<br>사 및 누리<br>과정 교사<br>월 30만원<br>차우개선                | 지방보육<br>시설제외<br>지역가정<br>아동센터<br>이동센터<br>지원체계<br>구축      | 현행 30%수준<br>이<br>아동보육<br>시설 유아반<br>교사 인건비<br>지원비율<br>확대 | 사회복지서비스<br>행위와<br>보편성에<br>의한<br>환원 결정          | 13년말까지 시스템<br>구축 완료<br>호주 선진모델<br>체계 보완 | 자체 및 관계부처<br>의견 수렴 후<br>2016년 7월 도입                                |
| 보완<br>법   | -                                                | -                                                           | -                                                       | -                                                       | 지방교부세<br>법 등<br>관계법 개정                         | -                                       | -                                                                  |
| 제도<br>개선  | 보육교사<br>확보 지방비 부<br>담증대<br>국비보조를<br>상향 조정할요      | 대체교사 지원<br>교사 근무환경<br>개선                                    | 서울시를 제<br>외한 15개 시<br>도에일시보육,<br>육아상담<br>학부모교육등<br>밀착지원 | 농어촌소재<br>법인보육<br>시설 유아반<br>교사 인건비<br>적정 지원<br>비율 파악     | 지역 간<br>격차와<br>인프라구축<br>지역 역효과<br>해소 방안 마<br>련 | 한부모가족, 노인<br>장애인<br>보육 서비스<br>통합 실시     | 지방교부금<br>구조조정                                                      |
| 예산<br>추계  | 12년 대비<br>9085억원<br>추가                           | 5854억                                                       | 매년<br>10개소 설치<br>12년 예산<br>30억                          | 교사인건비<br>267억<br>개보수비<br>260억                           | -                                              | 15억                                     | 1조                                                                 |
| 조달<br>방안  | 국비 지방비<br>지원 및 편성                                | 국비<br>지방비<br>지원 및 편성                                        | 국비<br>지방비 지원 및<br>편성                                    | -                                                       | 국비로<br>전환<br>및 편성                              | 국비<br>일반회계로<br>편성                       | 보통교부세<br>보통사교부세<br>지방교부세 중<br>지방보육<br>자정 확충을 위한<br>추가 지원조달<br>및 편성 |
| 2014<br>년 | 집에서 양육<br>하는만0세-5<br>세아동 양육<br>수당지급              | 우수민간어린이<br>집집 운영비<br>지원 확대(10<br>만-20만)<br>대체교사 428<br>명 확충 |                                                         |                                                         |                                                | 복지전달체계<br>개선299억                        |                                                                    |

## V.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

### 1. 중복, 부정 수급자문제 해결하여 빈곤층에게 지원 확대해야

국가의 과도한 개입으로 사회복지비 지출이 확대되어 정부의 복지 영역이 확대되었으나 전달체계의 불완전함으로 비효율성이 증가되고 세금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기초수급자 부정수령 7392건, 기초노령연금 부정 수령 4만 8989건. 중앙일보 2013.10.4) 나아가서 도덕적 해이와 복지 의존증이 높아져 복지 정책은 실패하고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1)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올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56명이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타워팰리스에 거주하면서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월 9만6,8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급아파트에 살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이유는 은퇴한 뒤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하여 이들 중 29명은 소득인정액이 0원이므로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초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어서 타워팰리스 수급자들은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으로 오른 기초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한국일보 2013.10.2).

(2) 복지부는 현재 주민등록상에 복수국적을 표시하지 않아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저소득 복수 국적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1천여 명의 해외 거주 복수국적 노인에게 2014년 7월에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초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들을 지급대상에서 빼는 것은 보편적 복지 장치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기에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연합뉴스 2013.10.2.)

(3) 10월 1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극빈 노인 38만8천명은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최예륜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법이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에게 기초(노령) 연금을 우선 지급한 뒤 기초생활 수급비에서 그만큼 차감하도록 돼 있어, 극빈층 노인은 현행 기초노령 연금은 물론 새로 도입되는 기초연금 20만원 가운데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서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주는 게 맞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한겨레 2013.10.1.).

(4) 복지통합관리망 부실하게 구축되어 복지에산 누수가짜 빈곤층 18만 명 적발되었는데 새로 도입했거나 대상자가 급증한 복지 분야의 예산 누수가 많다. 대표적인 게 영·유아 복지다. 사통망 점검에서 5만4491명, 1133억원의 예산 누수가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국민세금이 매년 3288억이 날라 갔다(중앙일보 2011.1.31.)

## 2. 정직한 전달체계 센터링크 제도 도입

사회복지통합망의 불완전한 관리로 3년간 7000억원의 누수와 사망자에게 지급된 689억원의 복지 급여 등을 감안 한다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IT 기술을 보강하여 호주의 센터링크 제도를 보완한 새로운 전달체계를 보완하여 사통망을 국민을 위한 완전한 전달체계로 보완해야 한다.

1) **센터링크 제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호주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이름과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기본적인 복지 급여 내용이 공지되고 지역사회 안에 사무실과 상담실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에게도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되 컴퓨터로 자신의 나라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기본적인 온라인 복지 서비스는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를 보다 전문화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무원을 7천명이나 증원하는데 들어가는 것과 같은 예산 지출을 축소하고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통해 종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개별부처가 제공하는 각각의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각기 다른기관을 찾아다녀야 하지만, 호주 국민들은 그럴 필요 없이 센터링크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2)호주 센터링크(Centrelink)는 호주 휴먼 서비스 포트폴리오(Human service portfolio) 산하의 정부조직으로서, 연방정부 예산의 30%(연간 \$636억)를 지원받아 27,000명 직원이 1,000개의 서비스 거점센터(delivery points)와 360개 office를 통해 120가지의 현금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되 지방정부에서 중복급여가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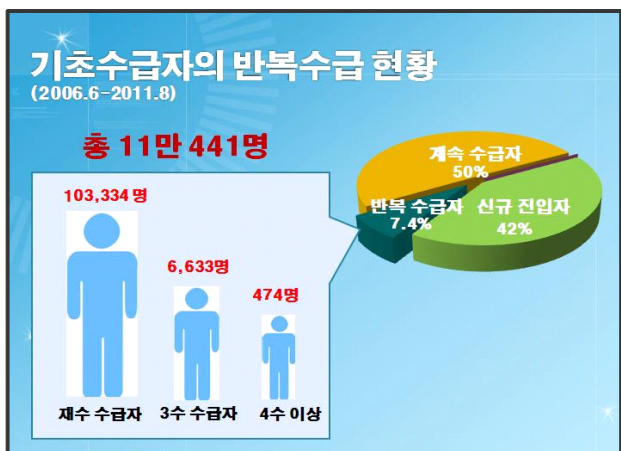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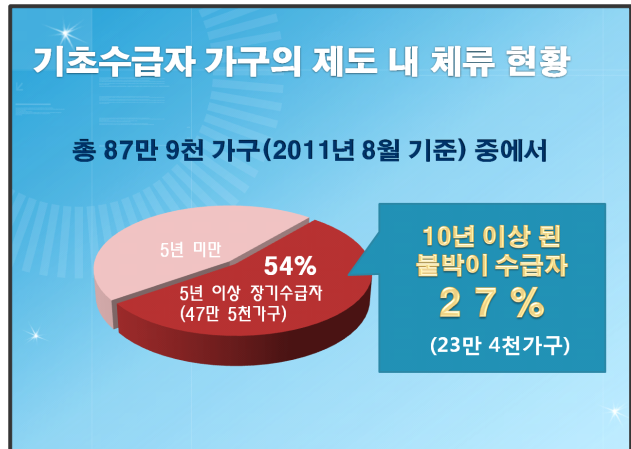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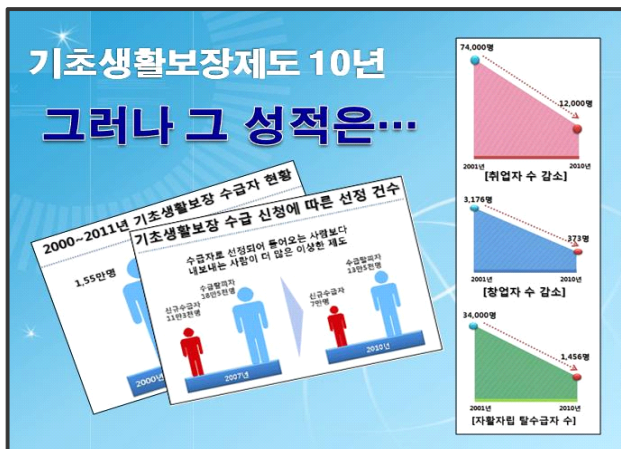
3)센터링크가 운영하는 통합전산망은 세계 8위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여 47만 명이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8천6백만 명의 방문객이 편지를 보내온다. 16개 콜센터에는 150-250명의 직원이 200개의 언어로 전화 상담을 받으며 매달 65만 명을 상담하는 것 외에 연간 4백만 명을 대상으로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할 뿐 만 아니라 노동연령의 인구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 발생의 위기를 겪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등 생애에서 특별 보조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 3. 국민기초생활 수급 제도의 개혁

우리나라의 기초 수급제도는 도입된 지 10년이 지나 기본 설계가 현재 상황과 차이가 있고 10년 동안 많은 문제 속에서 진행되어 온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 전면 개정을 해야 한다. 부양자 의무 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거나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10년 전의 설계와 원칙을 고수한다면 중복지원 부정지원 증가로 과중되는 예산을 국민의 혈세로 부담할 수는 없다.

2011년 8월 기준으로 5년 이상 장기 수급자는 47만 5천 가구로 전체수급자의 54%이고 이중 27%인 23만 4천 가구는 10년 이상 된 불박이 수급자이다. 또 근로 능력이 있는 30대부터 50대까지 수급자는 43만명으로 전체 수급자 148만 명의 29.0%이고 신규 진입자는 42.6%에 불과하고 나머지 57.4%는 반복적인 수급자이다.

기초수급제도를 통해 자활을 유도하기보다 통합적으로 일률적인 지원으로 의존적인 복지병을 지속하게 복지수요를 채우고 있다. 차상위 계층과 복지사각지대의 빈곤층과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다시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해야 한다.



#### 수급자 가구주의 연령별 현황 (2007년-2011년)

| 시점기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
|---------|-------------------------|--------|---------|---------|---------|
| 2007.12 | 17,867                  | 78,844 | 191,228 | 140,282 | 390,140 |
| 2008.12 | 18,431                  | 72,490 | 191,769 | 147,814 | 387,242 |
| 2009.12 | 19,415                  | 71,007 | 197,659 | 161,993 | 394,307 |
| 2010.12 | 18,121                  | 64,076 | 188,516 | 172,627 | 398,144 |
| 2011.08 | 17,328                  | 58,170 | 177,488 | 177,824 | 387,638 |
| 비율(%)   | 1.1%                    | 15.9%  | 12.0%   |         | 26.2%   |
| 총 148만명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43만명 29.0% |        |         |         |         |

#### 4. 절대 빈곤층 우선복지 대안 마련 후 무상보육 무상복지 해야 한다

통계청이 2012년 12월 21일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2011년 빈곤율이 16.5%로 인구 6명 중 1명꼴로 연간 소득이 빈곤선인 998만원도 못 벌었다. 더구나 1인 가구·65세 이상은 노인들의 절반이 빈곤층이다(빈곤율 50%).

일자리가 없이 사는 가구의 빈곤율도 66.7%에 이르렀고, 조손가구의 빈곤율은 59.5%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가구(38.9%), 한부모가구(37.8%), 다문화가구(20.8%) 등의 빈곤율도 심각하다. 또 노인연령층(65세 이상)이 49.4%, 근로연령층(18~64세) 11.6%, 아동연령층(18세 미만) 11.5%로 빈곤율이 발표 되었다. 여자의 빈곤율이 남자의 빈곤율인 14.6%보다 더 높은 18.3% 이고 학력이 낮은 경우가 더욱 가난하다고 발표되었다 (초등학교 졸업 이하 27.1%, 중학교 졸업 21.0%, 고등학교 졸업 13.4%, 대학교 졸업 이상 6.4%)

국민 6명중에 1명이 빈곤층으로 심각한 고통가운데 있고 더구나 날씨가 추워지면서 에너지빈곤층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금융부채를 가진 995만 가구의 68.7%가 원리금 상환을 하지 못하여 카드 돌려막기나 어떤 방법으로든 살아 갈 길이 없어서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하는 독거노인과 자녀를 살해하면서 생활고와 부채와 절망에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정년연장, 노인일자리 늘리기, 복지확대, 공교육 강화, 하우스푸어 지원대책으로 1년에 1만5천여 명씩 자살을 택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노숙자, 독거 노인, 선거권이 없는 빈곤 아동 청소년, 모자가정, 조손가정 등 절대 빈곤층의 문제 해결이 민생문제 해결의 최우선 복지과제로 세워야 한다.

#### 5. 빈곤아동 청소년의 빈곤상황과 아동복지 예산 20배 증액해야 OECD 평균치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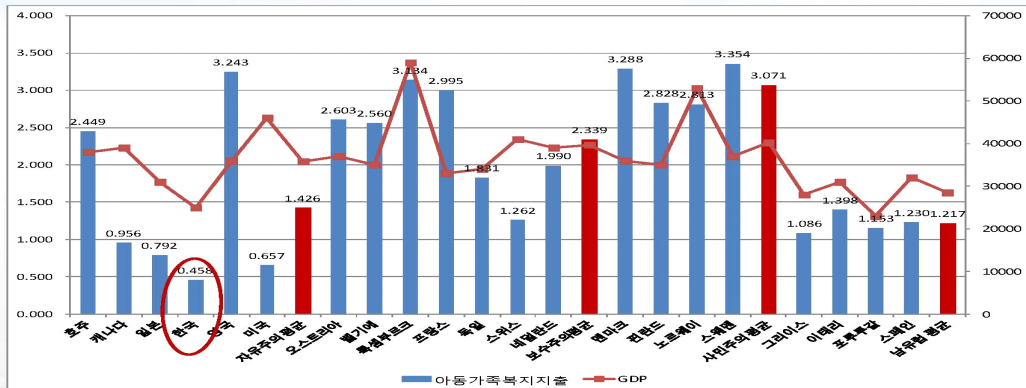
주요 OECD 국가별 아동 가족 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면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평균 1.426% 지출하고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2.339%, 사회주의 복지국가는 평균 3.071% 지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0.458% 지출하여 지출 수준이 가장 낮다.

(평균 2.279%지출에 이르려면 우리나라는 20배 예산을 증액 지출하여야 한다(국제아동빈곤포럼 자료집 2011.11.11.).

## 아동복지지출

K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국가 아동(가족)복지지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 지출 수준을 진단함 (200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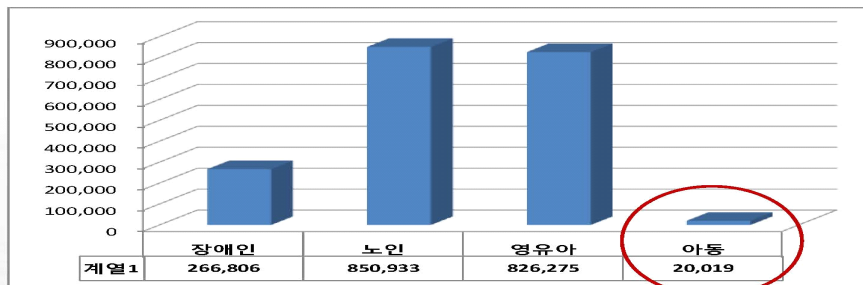
자료: OECD (2010).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tats.oecd.org>

4/20

## 아동1인당 복지예산

K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지난 25년간 아동 1인당 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97년 680원, 97년 3,500원, 08년 8,800원 이었다가 2011년에는 **20,019원**이 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대상인 노인, 장애인에 비하여 낮음.
- \*11년 대상별 1인당 복지비: 노인 85만원, 영유아 83만원, 장애인 27만원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및 금융운용계획안 검토보고」, 2011.

6/20

## 한국의 아동복지 지출수준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예산 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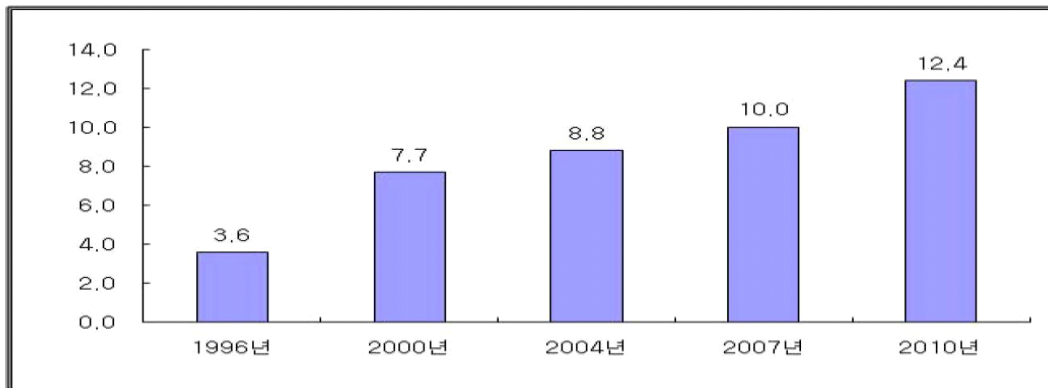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 33조 5,694억원

| 구분                     | 아동<br>복지예산   | 노인<br>복지예산    | 장애인<br>복지예산  |
|------------------------|--------------|---------------|--------------|
| 2011년 예산               | 1,750억 원     | 3조7,305억 원    | 8,141억 원     |
| <b>전체 복지<br/>예산 비율</b> | <b>0.52%</b> | <b>11.11%</b> | <b>2.43%</b> |
| 전체 수                   | 9,688천명      | 5,537천명       | 2,517천명      |
| 1인당<br>평균예산            | 1만8,065원     | 67만3,756원     | 32만3천원       |

출처 : 보건복지부(2011), 강명순 의원실 재구성

## 한국 빈곤아동 청소년 절대빈곤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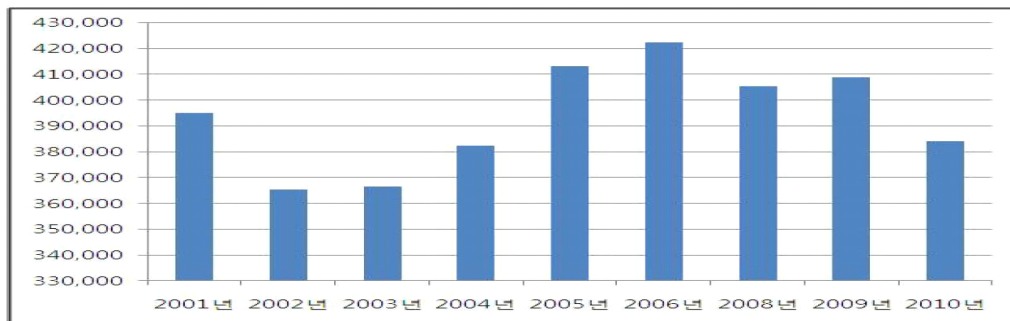
(단위 :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 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출처 : 보건복지부(2011), 강명순 의원실 재구성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 질 아동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음으로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망이 부실하여 학원 폭력, 성폭력의 희생제물이 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의 자살도 2009년 450명, 2010년 353명 2011 373명이다. 지난 3년 동안 1,176명의 아동청소년이 자살을 했다. 최근 1년간 자살 계획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19.5%나 됐다. 15-24세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 이유 중에서 경제적 빈곤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8.5%나 된다. 우울증과 빈곤 상황이 자살로 이끌어 간다. 빈곤층 아동청소년 복지대책이 통합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더구나 학교 폭력 성폭력, 집단괴롭힘도 심각하다. 2008년 이러한 청소년 가해 피해자를 위한 청소년 전용 지역아동센터 설립 3만5천명의 청소년과 실무자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복지부에 제출하였으나 지금까지 대답은 없다.

2014년 예산 편성에서 대학등록금 지원을 위한국가 장학금 예산이 3조1천 850억원으로 4천1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반해 빈곤아동 청소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1452억원이 증액된 1조5279억원이다.

놀라운 일은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말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은 보편적 복지가 정말 복지혜택을 받아야할 소외계층의 복지를 축소시킨다는 논리로 보편적 복지를 반대해 왔었는데 이들 작년 7월 아동복지협회가 1427원이던 단가를 3000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복지부는 예산안 편성 때 200원만 올렸고 기획재정부가 거기서 100원을 깎았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말뿐이고 소외계층에게는 박근혜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이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만7000명 보육원 아이들 식비를 3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드는 예산은 295억원 정도다. 국회는 올해 0~5세 아동 무상보육비로 작년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4조177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여야는 20~30대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고 무상보육 예산을 올리면서도 도움의 손길이 몇 배 절절한 보육원 아이들 사정은 외면한 것이다."(조선일보 2013. 4,23)

이런 상황에서 선거권이 있는 대학생에게 지출된 국가 장학금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감사원이 작년 2학기 최빈곤층(소득 하위 30% 계층)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을 받아간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거주 대학생 9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18%가 무자격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의 한 대학생은 어머니의 금융 자산이 87억원에 이르는데도 소득 하위 40%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 107만원을 받았다. 정부는 2011년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는 대학생 시위가 확산하자 작년부터 예산 1조 7500억원을 투입해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동아 일보 2013 6.25)

## 6. 정신적 빈곤 자살 예방 통계 및 대책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매년 1년 동안 고의적 자해(자살)자가 1만 5천명을 넘어섰다, 생활고 비관하여 영아 살해하거나 동반 자살도 증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살자의 숫자를 발표하여 각 지자체 장의 업무 평가와 연동하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부터 예산을 투입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하듯이 생명안전 자살 예방교육을 하는 예산도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올해 정부의 자살 예방 예산은 33억원에 불과하다. 일본의 지난해 자살 예방 예산은 우리의 80배인 2540억원 이었다.

자살 예방 전문가들은 "지난 2000년부터 정권마다 자살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만날 비전 선포만 하는 전시성 행정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자살자 수가 한해 1만5000여명에 이른 것이다. 약 34분에 한 명씩 자살하는 수치다. 다행히 지난해 자살자 수는 전년보다 11% 감소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은 추세가 꺾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2013.9.27)

### 전국 자살자 통계청 통계 (2007-2011)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의적 자해(자살)자 수 연도별 비교표 |        |        |        |        |        | 2011소계<br>(인구 수)      |             | 권<br>역      | 인구십만명당<br>자살 비율 |      | 증가<br>율 |
|---------------------------------|--------|--------|--------|--------|--------|-----------------------|-------------|-------------|-----------------|------|---------|
| 시도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 2007            | 2011 |         |
| 전국                              | 12,174 | 12,858 | 15,412 | 15,566 | 15,906 | (50,176,656)          |             |             | 24.8            | 31.7 | 6.9     |
| 서울특별시                           | 2045   | 2,200  | 2,662  | 2,668  | 2,722  | (10,118,959)          |             |             | 20.1            | 26.9 | 6.8     |
| 경기도                             | 2433   | 2,699  | 3,286  | 3,408  | 3,580  | (11,737,704)          |             |             | 22.1            | 30.5 | 8.4     |
| 인천광역시                           | 620    | 724    | 843    | 875    | 903    | (2,753,048)           |             |             | 23.4            | 32.8 | 9.4     |
| 부산광역시                           | 919    | 981    | 1,141  | 1,163  | 1,123  | 4,138<br>(13,074,141) |             | 경<br>상<br>권 | 25.5            | 31.9 | 6.4     |
| 경상남도                            | 926    | 927    | 1,020  | 1,044  | 1,054  |                       |             |             | 29.1            | 32.2 | 3.1     |
| 대구광역시                           | 568    | 632    | 730    | 740    | 735    |                       |             |             | 22.8            | 29.6 | 6.8     |
| 경상북도                            | 802    | 770    | 916    | 945    | 938    |                       |             |             | 29.9            | 35.1 | 5.2     |
| 울산광역시                           | 207    | 242    | 276    | 272    | 288    |                       |             |             | 18.9            | 25.6 | 6.7     |
| 충청남도                            | 734    | 711    | 928    | 914    | 931    | 1,977<br>(5,116,799)  | 충<br>청<br>권 | 37.0        | 44.9            | 7.9  |         |
| 대전광역시                           | 355    | 335    | 461    | 435    | 445    |                       |             | 24.1        | 29.7            | 5.6  |         |

|       |     |     |     |     |     |                  |             |      |             |            |
|-------|-----|-----|-----|-----|-----|------------------|-------------|------|-------------|------------|
| 충청북도  | 467 | 509 | 640 | 550 | 601 |                  |             | 31.1 | 38.9        | <b>7.8</b> |
| 강원도   | 563 | 579 | 658 | 672 | 687 | (1,519,911)      |             | 37.4 | <b>45.2</b> | <b>7.8</b> |
| 전라남도  | 484 | 516 | 599 | 646 | 645 |                  | 전<br>라<br>권 | 25.0 | 33.9        | <b>8.9</b> |
| 광주광역시 | 319 | 305 | 406 | 442 | 384 | 1,723(5,215,250) |             | 22.6 | 26.5        | 3.9        |
| 전라북도  | 593 | 566 | 663 | 615 | 694 |                  |             | 31.8 | 37.3        | 5.5        |
| 제주도   | 139 | 162 | 183 | 177 | 176 | (567,741)        |             | 24.9 | 31.0        | 6.1        |

## 7. 자살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 현 황                                                                      | 대안                                                                                  | 정책 과제                                                                                                                                                                                        | 예산            |
|--------------------------------------------------------------------------|-------------------------------------------------------------------------------------|----------------------------------------------------------------------------------------------------------------------------------------------------------------------------------------------|---------------|
| 일반 아동 청소년<br>자살 계획자 예방<br>청소년 5명 중 1명<br>자살 계획<br>(청소년19.5%<br>자살 계획 세움) | UN CRC 우울 자살문제<br>권고조치 정책과제<br><br>학교폭력, 왕따<br>품행장애아동<br>아동 청소년 게임중독 분<br>노 및 우울증치료 | ○ 학생 정신건강 조사 실시 정책<br>개발 및 시스템 구축(CRC권<br>고사항) ; 20억<br>○ 노는 토요일 우울, 비행, 가<br>출, 자살예방 아동중심 참여<br>문화 및 체험활동지원:800억 <sup>1)</sup><br>○ 정신건강 보건센터(163개소)<br>아동청소년 담당 임상심리사<br>배치 : 391억(월200만원) | 1,211억        |
|                                                                          |                                                                                     | 학교 내 학교사회복지사 배치<br>(초 중 고 1만개 : 월200만원)                                                                                                                                                      | 2,400억        |
| 빈곤아동청소년<br>자살예방<br>자살계획 청소년 중<br>18.5%가 빈곤문제로<br>자살계획수립                  | 빈곤지역사회 내 사각지<br>대 정신건강 사례관리 및<br>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지<br>역사회복지사 파견                         | 4000개 빈곤지역에 지역사회복지사<br>4000명파견 x 12개월 x 200만원                                                                                                                                                | 960억          |
| 생활고비관 자녀살해<br>및 가족동반자살 예방                                                | 빈곤아동수당지급                                                                            | 월10만원부터 시작 (137만명)<br>6-18세미만 아동 청소년 중 6-9세<br>미만 부터 단계적 지급                                                                                                                                  | 1,440억        |
| 아동양육이 힘겨워<br>자녀살해 및 자살                                                   | 아동양육 지원센터                                                                           | 서울시를 제외한 15개시도<br>매년 설립(2013년도예산)                                                                                                                                                            | 30억           |
| 소계                                                                       |                                                                                     |                                                                                                                                                                                              | <b>6,041억</b> |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세부 계획안

### 학 생

#### ① 지역아동센터 3,989개소 지원

- 지역아동센터(3,742 → 3,989개) 및 드림스타트\*(211 → 220개) 확대 등을 통해 저소득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
  - \*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 기초학습 지원, 사회정서 증진 등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 취약 계층·지역을 중심으로 **오후 돌봄교실(~오후5시), 온종일 돌봄교실(~오후10시)** 지속 지원(교육교부금)

#### ② 고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비 부담 경감

- 소득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2.8 → 3.2조원), 셋째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신규 1,225억원) 등을 통해 **대학생 등록금 부담 경감**
  - \* ('13) 연 67.5~450만원 → ('14안) 연 90~450만원(연 22.5~180만원 증액)
- 군복무자 중에서 **학자금(ICL, 일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53.1 → 84.9천명)에 대해 복무기간 동안의 **이자 면제**
  - \* '12년 ICL 대출자 면제, '13.5월부터 ICL과 일반학자금 대출자 모두 면제
- **대학생근로장학금** 확대(1,431 → 1,943억원)를 통해 **대학생**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완화**
  - \* 대학생근로장학생 지원 : ('13) 7.2 → ('14안) 10만명
- 장애·다문화·탈북학생 등 **취약계층 교육지원 강화**
  - \* 장애대학생 학습도우미 확충 : ('13) 2,500 → ('14안) 2,600명
  - \*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강화 : ('13) 68 → ('14안) 135억원

### 장년·어르신

#### ① 기초연금 도입으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및 빈곤 완화

- 65세 이상(소득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월 10만원 →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舊 기초노령연금) 지급('14년 하반기 시행)
  - \* 기초노령연금 지급 : ('13) 32,097 → ('14안) 52,002억원
- 소득하위 70% 어르신에 대한 실질적인 1인 1연금 실현 및 연금 지급액 2배 수준 대폭 인상으로 노후소득 보장 강화
  - \* 소득하위 70% 어르신 대부분에게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인 월 20만원을 지급하여 노인빈곤 해소와 예방에 기여

## ② 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통해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치매 어르신에 대한 요양서비스\* 신규 지원(+49천명)
  - \* 방문목욕, 방문간호, 방문요양, 시설입소 등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 목욕보조 등 돌봄종합서비스 지원 규모를 4.1만명으로 확대(32 → 41천명)
- 독거 어르신 대상 돌봄기본서비스(안부 확인, 가정방문 등) 지원 규모를 20만명으로 확대(172 → 200천명)

## ③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 제도로 전환('14.10월)하여 지급대상 확대, 임대료 지원기능 강화(73 → 94.4만 가구, 8 → 11만원)
  - \* 주택바우처 : 기준임대료를 토대로 소득, 가구원수, 임대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1.7조원 증액
  - \* 주택구입·전세자금 : ('13) 7.7 → ('14안) 9.4조원
- 원활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공급을 위해 지원단가 인상
  - \* 다가구매입임대 지원단가 : ('13) 85 → ('14안) 90백만원/호

## 저소득층

### 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제로 전환

-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합급여에서 개별급여체제\*로 전환하여 욕구별 맞춤형 지원 강화
  -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로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차별화
- 기초생보 수급자는 83만 → 약 110만 가구 수준으로 30% 증가

### 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12만명을 추가 보호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 수급자 최저생계비)

- 제도 개편 결과로 수급 탈락·급여 감소가 발생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이행기 급여 지원

### ③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지원 확대

- 저소득층(85만여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1,770개)에 대한 LED 조명기기 지원 확대
  -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 ('13) 246 → ('14안) 356억원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강화
  -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 ('13) 411 → ('14안) 596억원

## 장애인

### ① 장애인 연금 2배 확대(월 20만원)

- 기초연금 도입과 연계하여 장애인 연금을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14년 하반기 시행)
  - \* 장애인연금 : ('13) 3,440 → ('14안) 4,460억원
- 장애인 연금 부가급여('14 하반기 : 월 2~28만원)를 지속 지원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고, 가족의 부담도 경감

### ② 장애인 심사 관련 '서류 발급 대행 서비스' 신규 추진

- 장애인 심사·등록, 재판정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 발급을 대행하는 서비스\* 신규 시행 (49천건)
  - \* 장애인 등록 신청인이 장애인 등록 서류 발급을 위해 병원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일 방지
- 장애등록 단계에서부터 수요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체계 구축

### ③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5.4만명으로 확대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5.4만명으로 늘리고(4.8→5.4만명), 취약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응급안전시스템 1만개 구축
- 장애아 양육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연 320 → 480시간으로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4.0→4.2만명)
- 장애대학생 학업지원 도우미 추가 확충(2,500→2,600명)

## 농어업인

### ①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 신설, 수산직불제 확대 시행

- 겨울철 논에 보리·호밀 등을 이모작 재배시 밭직불금 신규지급

- \* 논 22.6만ha를 대상으로 1ha당 20만원 매년 지급
- 도서지역(육지로부터 8km 이상, 제주본도 제외) 거주 어업인에게 수산직불금 지급(29 → 99억원)
- \* 연간 60일 이상 조업,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어가당 연 49만원 지급

## ② 농어민을 재해·노후 위험으로부터 보호

- 농어업 재해공제 보장한도 인상(최대 1억원), 재해보험 가입품목 확대(71 → 77개)를 통해 재해 대비 안전망 확충
-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농지연금 보장성 강화
  - \* 농지담보가치 10%p 인상, 가입비 폐지, 상환이자율 인하(4 → 3%) 등

## ③ 도서민 교통편의 제공 및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 도서민(제주 본도 제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항 여객선 이용 도서민의 여객·차량 운임의 20% 지원(국비 10%, 지방비 10%)
  - \* ('13년) 여객운임만 지원 → ('14년) 여객 + 차량운임 지원
- 농어촌마을에 LPG 공동저장탱크 보급(신규, 시범 9개소) 및 영농 폐비닐 수거시설 설치 지원('14년 1,000개소)

# 다문화가족 · 이탈주민

## ①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신설 배치

- 다문화가족 생활지도사 신설·배치(0 → 50명), 결혼이민자 멘토링 서비스 신설 등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 지원체제로 개편
  - \* 국제결혼 실태조사(신규 1.5억원),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시범조사(3.4억원)

## ② 북한이탈 여성·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 북한이탈 여성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상담·치유 프로그램 운영 및 북한이탈 청소년 교육시설 지원

# 일-복지 연계로 자활·자립 지원

## ① 차상위 1만 가구 자산형성 신규 지원

- 자산형성지원 사업(희망키움통장\*)을 취업·창업 수급자 (3.2 → 3.7만 가구) 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신규, 1만 가구)까지 확대
  - \* 일하는 수급자가 매달 일정금액을 저축할 경우,

탈수급을 요건으로 정부지원 등 매칭금을 지원하여 자산형성 지원

## ② 상담·사례관리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의 지원인원을 확대(22 → 25만명)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사전 상담단계를 신설하고 참여수당을 지급(신규, 10만원)
- 희망리본사업\* 지원인원을 확대(10 → 12천명)하여 수급자 대상으로 상담, 1:1 밀착 사례관리 등을 통해 일자리 알선
  - \* 저소득층 취·창업 지원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성과(취업률 등)에 따라 수행기관에 성과예산 지원

## ③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사각지대 해소
  - \* 지원요건(월평균 임금 기준) : ('13) 130만원 → ('14년) 135만원 이하

# 전달체계 개편으로 복지 체감도 제고

## ① 사회복지직 공무원 1,177명 신규 총원

-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을 1,177명 확충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서비스 품질을 제고
- 기초연금·기초생보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신규 수급자 발굴·지원 등 행정업무 보조인력(3,487명) 한시 지원

## ②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 사회복지통합정보망 고도화\*(166 → 289억원)를 통해 복지급여 부적정 수급 방지
  - \* 부처간 정보 공유·연계 강화, 관리 기능개선 등
- 복지 행정서비스 체계의 효율적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 \* ('14년) 도시지역 : 주민센터 복지허브화 시범사업(6개 지역),  
농촌지역 : 郡 희망복지지원단 강화 시범사업(4개 지역)
- 복지·일자리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일행복지원단' 설치
  - \* ('14년) 5개 시·군·구 시범사업 실시

## ③ 민간복지 자원 활용 강화

- 민간 복지자원의 활용 촉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 시스템 구축 및 기부식품 유통기한 관리시스템 도입(신규, 16억원)
- 풀뿌리 복지공동체 확산 등을 위한 민관협력 시범사업 실시
  - \* ('14년) 공공주도형 5개 지역, 민간주도형 5개 지역

- 지역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고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

\* ('14년) 지역자원봉사대 10개소 추가 지원(40 → 50개소)

참고자료2. (강명순 18대 국회의원 국정 과제 정책 자료집에서 발췌함)

## '공급 관리자 중심의 한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와 개선방향'

### 1.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를 엄격하게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곤층이 근로를 통해 수급자 지위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급권자로 머물러있는 것보다는 탈수급하는 것이 생활하는데 더 낫도록 유도하는 유인체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 수당 등이 성격과 대상에 따라 신청과 지급처가 제각각이다. 120여 가지가 넘는 복지 급여를 서로 다른 행정 주체가 상이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방법과 경로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부정, 중복수급 문제가 제기되었고 소위 '갈때기 현상'(지자체 일선 행정조직에 업무가 집중되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 전달체계 상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어왔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행복e음'으로 명명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복지 수급자들의 전산 이력관리를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하였고 '행복e음'은 이제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관리구조를 수요자 중심의 관리구조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복지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복지수급자의 편의성만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탈복지·탈수급을 통해 복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충분히 이행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부정·중복 수급 문제의 차단이나 일선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사례관리와 같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현장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은 아직도 요원하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제부터는 수급대상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입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야만 한다.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연령뿐 아니라 건강상태·근로능력·근로이익 등 다양한 욕구와 여건, 상황, 그리고 지역과 시기에 따라 서비스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 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유능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수요자 입장에서 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인 배분과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효율적인 전달조직이 갖추어져야 맞춤형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2. 호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변화 - 센터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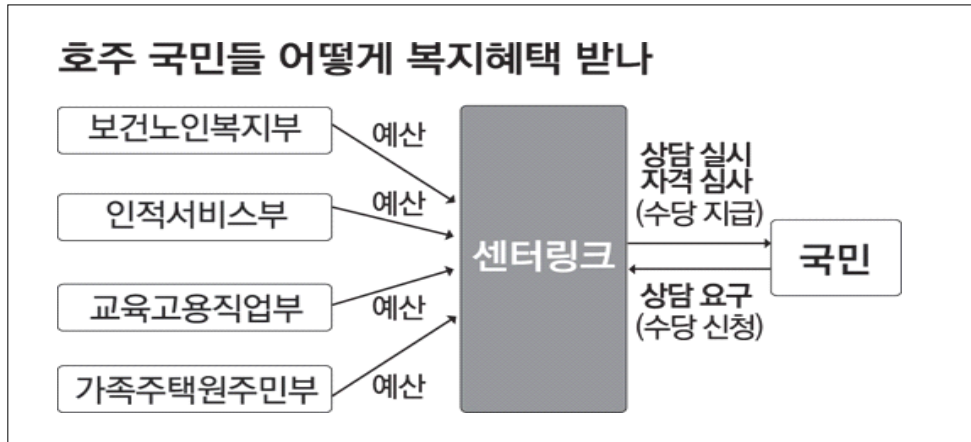
호주 센터링크(Centrelink)는 호주 휴먼 서비스 포트폴리오(Human service portfolio) 산하의 정부조직으로서, 연방정부 예산의 30%(연간 \$636억)를 지원받아 27,000명 직원이 1,000개의 서비스 거점센터(delivery points)와 360개 office를 통해 120가지의 현금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되 지방정부에서 중복급여가 지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센터링크가 운영하는 통합전산망은 세계 8위로 전국 어디서나 이용이 가능하여 47만 명이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8천6백만 명의 방문객이 편지를 보내온다. 16개 콜센터에는 150~250명의 직원이 200개의 언어로 전화 상담을 받으며 매달 65만 명을 상담하는 것 외에 연간 4백만 명을 대상으로 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보조할 뿐 만 아니라 노동연령의 인구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장애 발생의 위기를 겪거나 퇴직을 앞두고 있는 등 생애에서 특별 보조가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일을 담당한다.

적절한 현금급여와 서비스 옵션에 관해 상담을 제공하며 고용서비스 제공자(employment service providers)에게 연결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학업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업에 대한 자신감과 기술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사회 일을 수행하도록 보조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는 수급자 혹은 고객이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전문가와 다른 부처나 기관으로 연결해 줄 수도 있다. 호주의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센터링크의 직원 2만7천여 명이 다음과 같은 일을 총괄하고 있다.

구직수당, 청소년수당, 양육지급금이나 특별급여를 받는 보호자의 경우 6세가 된 아동을 위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과 구직활동 서약서, 재취업을 위한 구직자의 교육과 훈련지침, 지역사회 개발고용 프로젝트, 가정폭력이나 자연재해 시에 겪는 위기수당, 장애고용 서비스, 가뭄대책, 특별 구호급여, 가족세금 감면 혜택, 장애인 고용보조, 청년직업 관련 정보 및 자원제공, 직업 능력 평가, 사회복지 훈련, 연금수급, 지역사회지원 프로젝트,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이 생길 때 센터링크 급여를 유지하는 근로크레딧, 12세 이하 아동이 교육 훈련 기회를 받지 못할 때 지원하는 청소년 커넥션, 고령수당, 간병인 보호급여 및 수당, 장애지원연금, 아동지원수당, 군인소득 보조수당, 사별급여, 고아연금 등등 이다.

[그림1] 호주 센터링크의 복지급여 지급 방식



출처: 매경이코노미 2011.3.31.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복잡한 복지시스템과 수당, 서비스의 전달체계 문제를 겪었고 호주 역시 센터링크가 생기기 전에는 복지시스템이 복잡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지금도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교육·고용·직업부, 인적서비스부, 보건·노인복지부, 가족·주택·원주민부 등 5개가 넘고 정책수립과 집행을 하는 행정체계가 어느 나라 못지않게 복잡하다. 그래서 이전에는 복지 수혜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부처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또 신청을 해야 하는지 프로세스도 복잡하고 접근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센터링크가 생긴 후에는 이와 같이 소관부처가 어디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 필요가 없다. 가까운 센터링크 한 곳만 방문하면 모든 복지 전달체계가 센터링크로 일원화되어 있어서 해당되는 모든 복지혜택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상담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한 정보는 물론 수당 신청까지 즉석에서 윈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센터링크에 전화 한 통화로 수급 내용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내용도 27가지이다. 일반 가정의 유선 전화는 상담 시 무료이다. 또 방문이나 서면으로, 온라인 셀프 서비스로 120가지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전화 서비스로 가능한 경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은퇴하기 직전이나 은퇴한 후
- 구직 중인 경우(21세 이상)
- 학업이나 훈련
- 오지 아동보조
- 사기신고전화
- 센터링크 업무 핫라인
- 가뭄 지원
- 해외소득관련전화
- 소득관리전화
- 센터링크 외국어 지원 서비스
- 질병, 사고, 장애 관련 간병자인 경우
- 부모나 보호자
- ABSTUDY
- 호주정부서비스
- 베이직카드(BasicsCard) 계좌 체크
- 고객관계
- 재정정보서비스
- 원주민 콜센터
- 호주 견습생제도 급여
- 청각언어장애 전용 전화 및 전문서비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 민원을 받고 상담을 하는 공무원이 있지만 호주에서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베테랑 전담 직원들이 치해있는 상황과 여건, 소득과 자산, 직업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빠르고 정확하게 맞춤형 상담을 해주기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각종 연금부터 정부가 주는 다양한 수당 지급이 모두 센터링크로 일원화되어 있다. 이처럼 센터링크는 연금과 수당부터 이민, 교육, 구직, 질병, 재난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처리를 통합적으로 진행한다. 절차가 간편한 대신 지급 결정과 사후관리는 까다롭게 심사한다.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토대로 수많은 수당과 각종 연금 중에서 어느 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심의한다.

[표1] 호주 정부의 센터링크(Centrelink) 조직 현황

| 차 원  | 내 용             | 2004년        | 2010년     |
|------|-----------------|--------------|-----------|
| 조 직  | 서비스 전달 지점       | 전국 1,000곳 이상 | 1,000곳 이상 |
|      | 직원 수            | 25,448명      | 27,954명   |
|      | 클라이언트 기관        | 25개 정부부처     |           |
| 고 객  | 고객 수            | 650만명        | 684만명     |
|      | 고객에 대한 서한 발송    | 9,060만건      | 1억 950만건  |
|      | 가정방문심사          | 9,280건       |           |
|      | 신규지급 건수         | 280만건        |           |
|      | 전화 통화 성공        | 2,800만건      | 3,370만건   |
| 네트워크 | 고객 서비스센터(CSC)   | 321개소        |           |
|      | 센터링크 대리인(Agent) | 349명(개소)     |           |
|      | 전문서비스센터         | 29개소         |           |
|      | 콜센터             | 26개소         |           |
|      | 지역 지원사무소        | 15개소         |           |
|      | 전국 지원 사무소       | 1개소          |           |
|      | 벽지 서비스센터        | 6개소          |           |

\* 자료: 2010.8월 호주 센터링크 방문 후 제공받은 자료를 의원실에서 재구성 함

하지만 가능한 서비스가 확인되어도 일괄적으로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이 기준보다 높으면 탈락하고, 통과하더라도 기준보다 낮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지며 개인이 처한 상태에 따라 정부가 제시하는 고용프로그램을 따른다는 조건에 반드시 서명해야 한다. 독신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도 획일적이지 않다. 결혼을 했는지, 자녀가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나 있는지, 직업 상황은 어떤지 등에 따라 등급이 십여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처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가 되면 관련 급여들을 한꺼번에 받고 탈락하면 아무 것도 받지 못해서 수급자보다 더 빈곤해지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은 매우 엄격하기도 하지만 수요자의 상태에 따라 맞춤형으로 적용된다. 신청자가 부동산 등 자산이 많거나 별도의 소득이 있다면 정해진 기본 지급액에서 연금이나 수당의 지급 수준이 일정 비율로 낮아진다. 또한 매년 자산조사와 소득조사를 실시해 그에 따라 변동사항을

반영한다.

호주 센터링크가 지급하는 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은 가족, 근로, 자산, 거주지, 간병, 상황 등 7개의 큰 주제 내의 변동 세부사항 점검 지표 수는 모두 52개(40페이지 참고)이다. 52개의 변동 사항이 생긴다면 센터링크나 가족지원국에 가능한 한 빨리 알려야 한다. 적절한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일부나 모두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센터링크는 호주, 국세청 호주 이민성, 정부 부처, 여러 기관들과 개인의 정보를 확인하기 때문에 급여가 초과 지불된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고의적으로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한 경우는 기소되어 벌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를 떠날 경우, 최소 출발 6주전 알려야 지급액이 조정되며 급하게 떠날 경우 최대한 빨리 통보하고 대부분의 급여는 일시적 부재시에도 13주 지급되고 고령 연금은 13주보다 더 오랜 기간 지불되며 영구적으로 떠나면 낮은 금액으로 지불된다. 구직 수당의 경우 특정 상황 시 해외에 있어도 지불되고,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수당 중 가족혜택 B는 13주 이하 지불되고, A는 13주 동안 기초 금액보다 더 지급되며 출국일로부터 3년 간 기본액이 지불된다.

출국 전에 센터링크와 상담하는 게 좋고 출국을 알리지 않은 부정수급자는 반환해야 한다. 노동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자동차 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 보장이거나 일시 보상금인 보상급여를 받으면 센터링크에서 급여도 일시 중지된다.

다시 말하면, 센터링크의 강점은 바로 자격 변동이 생길 때 52가지 가족 내의 변화에 대해 고려하고 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격변동이 생기면 퇴출시키는 쪽으로만 통보를 하고 탈락을 시키지만 호주의 경우 오히려 여건의 변화로 더 받을 수 있는 수당 등이 생겼을 경우에도 통보를 해서 신청을 하도록 안내를 한다.

#### 특히 센터링크 전달체계의 강점은,

- 1) 서비스 현장은 서비스전달(제공)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고객에 집중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의 표준으로 삼고
- 2)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고
- 3) 고객의 책임을 강조하고
- 4) 불만족한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전달하는 데 정기적인 조사와 고객 의견 청취를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내용을 지역사회조직, 다른 정부부처 및 부처 산하기관들과 공유한다. 또한 홈페이지와 정기연도보고서에 매 분기마다의 결과를 출판하고 이를 서비스개선에 지속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 5) 철저히 개인정보보호를 하도록 사생활보호법(Privacy Act 1998)에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다음을 가능하게 한다.

- ①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이에게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법적인 사유가 있을 때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③ 개인 정보 수집 대상자는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열람할 권리가 있다.
- ④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다.
- ⑤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경우 센터링크에 항의할 수 있다.
- 6) 다문화 서비스와 원주민 콜센터 등 15가지의 전문 서비스와

- 7) 아동보호를 위한 35가지의 구체적인 수당과 양육지급금등이 있다. 청소년 수당과 한부모 가정이 되었을 때 주어지는 양육수당 청소년 치과 진료와 12-18세의 가출했거나 노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이 눈에 띈다.
- 8) 다출산 가정의 지원과 사별 수당 등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
- 9) 가스, 전기, 수도세, 공과금 전화세 등을 센터페이나 유틸리티 보조 수당을 통해서 각종 사회보장 급여를 수급받고 있어도 매 4분기마다 자동 지급되는 기타 보충 급여 제도도 큰 특징이다.
- 10) 특히 2011년 7월에 육아 휴직 수당과 간병인 조정급여 노숙인 지원서비스가 보장되었다.

호주에는 현재 모두 1,000여 곳의 센터링크가 있고, 전담 직원만 2만 7,954명이다. 센터링크가 2010년 한 해 동안 처리한 업무내용을 보면 그야 말로 경이적이다. 연간 방문자가 684만 명에 이르며, 안내편지를 발송한 건수가 1억 950만 통, 전화 상담건수가 3,370만 건, 인터넷 상담 건수가 2,400만 건, 직접 대면접촉으로 상담한 건수는 65만 번이 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2] 보건복지콜센터의 상담유형별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2010년     | 2011.8월 |
|-----------|-----------|---------|
| 계         | 1,160,204 | 778,412 |
| 일반 상담     | 1,149,058 | 770,294 |
| 전문 상담     | 8,910     | 6,923   |
| 인터넷 채팅    | 2,064     | 1,125   |
| 수화 상담     | 172       | 70      |
| 유관기관 이관건수 | 5,491     | 4,145   |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호주의 센터링크를 벤치마킹 했다고 하는 보건복지콜센터의 2010년 실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전화상담 건수가 1백16만 건인데 주로 문의에 대한 1차 상담이 대부분이며 전문상담이 8,910건, 인터넷 상담 2,064건, 유관기관 이관건수가 5,491건이다. 직접 방문이나 대면접촉 상담, 안내편지 발송 같은 기능은 전혀 없다. 대상자 발굴보다는 정보 안내에 가까운 수준이다. 민원접수 외에는 해결능력이 부족하며 다른 기관과의 연계기능도 통합적인 서비스로 이어지기에는 너무도 미약하다.

### 참고자료 3 빈곤상황 및 인터넷에 발표된 자살관련 자료 분석 :

(2013 삶의 질 향상과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다리 희망사다리에서 발췌함)

#### 1 빈곤아동 청소년 상황

1) 2010년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한 아이들은 초등학교 11,634명, 중학교 15,763명, 고등학교 34,523명으로 총 61,920명이다. 숫자로는 61,920명이 그리 많은 숫자로 여겨지지 않지만, 가난한 동네 안에서 61,920명이 의미하는 것은 한 집 걸러 한 명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의 전체 학생 수는 723만 6천명이다. 그 중에서 61,920명은 0.86%이다. 이 중 20%의 학교 중단 아동청소년들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는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22.5%), 성적이 좋지 못함(17.0%)이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한 학급 당 학업중단자 수는 26.8명으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15.3명, 중학교 10.8명, 초등학교 6.8명이다. 한 학급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동네에서 범죄에 가담하거나 가출하여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면 경계선 상에 있는 빈곤아동청소년들은 틀림없이 영향을 받는다.

2) 자살충동, 인터넷 중독, 청소년 범죄, 결손가정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130만명이며 고위험군 아동청소년은 33만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3)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매년 1년 동안 고의적 자해(자살)자가 1만5천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19세미만 아동청소년의 자살도 2009년 450명, 2010년 353명 2011 373명이다. 지난 3년 동안 1,176명의 아동청소년이 자살을 했다.

4)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 언론과 인터넷에 보도되어 2013년 1월 기준으로 검색된 자료는 37건으로 발생한 동반자살 사건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자녀를 살해한 이유는 주로 생활고 비관 유형이 가장 많은 25건(67.6%)으로 생활고를 비관한 25건 중 48%인 12건이 자녀를 살해하였다.

5) 언론에 보도된 영아 살해사건 48건이 생활, 양육 능력 부족, 게임중독, 가정불화 등 정신적인 빈곤이나 가족기능의 약화로 인한 영유아 살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사례관리와 부모교육 빈곤층 의식교육, 문화적 접근을 통한 심리적 빈곤완화 등이 시급하게 강화되어야 한다.

경찰청통계에 따르면 강력범의 70%가 살인강도 성폭행 흉악범죄자가 빈곤층이라고 한다. 빈곤 지역에서 살인자와 강력범죄자가 함께 살고 있으면 안정망이나 지원체계가 취약한 빈곤아동청소년이 범죄의 표적이 되어 죽어가고 있다. 가해자와 재범방지, 10대 범죄 증가 등을 조속히 예방해야 한다.

6) 복지부의 2009년 아동 청소년 종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만 6-12세 아동 중 평일 방과 후 3시간 이상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아동이 54만 9,693명에 달했다. 각종 살인 성범죄 등으로 살해되고 있다. 빈곤아동 청소년의 안전망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7) 최근 1년간 자살 계획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19.5%나 됐다. 15-24세 청소년들이 자살 충동을 느낀 이유 중에서 경제적 빈곤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8.5%나 된다. 우울증과 빈곤 상황이

자살로 이끌어 간다. 빈곤층 복지대책이 통합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8) 2013 5월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청소년 자살에 미치는 지역적 위험요인 연구'에 의하면 만 12-18세 청소년의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가정형편 스트레스가 성적스트레스의 영향력보다 3.2배 높고, 자살의 가장 큰 요인인 우울감에 끼치는 영향은 성적 스트레스의 1.9배 였다. 또 교우관계와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시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적 스트레스보다 각각 2.4배, 2.3배 높았다. 뿐만아니라 선생님과의 갈등 및 외모 등이 우울감, 자살생각, 자살 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원인으로 파악 되었으며 건강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성적 스트레스보다 낮았다.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하여 연령대별 원인별 예방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 2. 생활고로 아동 청소년을 살해하고 부모가 동반자살한 사건 (2013.5-2009.3)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일반 언론과 인터넷에 보도되어 2013년 6월 기준으로 검색된 자료는 37건으로 발생한 동반자살 사건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직면하게 된다.

1) 전체 37건 중 아버지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는 10건이고 어머니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한 경우는 10건으로 자녀를 부모가 살해한 경우는 20건(54.1%)이고 자녀를 살해하지 않고 자녀와 부모가 같이 번개탄 혹은 연탄을 피워 동반자살 한 경우는 12건 (32.4%) 동반 투신 4건, 동반 음독 3건,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동반자살이 1건이었다.

2) 자녀를 살해한 이유는 주로 생활고 비관 유형이 가장 많은 24건(64.9%)이다. 경상도 부산 지역의 경우 13건 중에서 8건(61.5%)가 생활고를 비관하였고, 경상권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24건 중에서 생활고를 비관한경우가 16건으로 66.7%에 이른다. 동반자살의 경우 부산지역은 생활고 비관보다 가정불화가 더 많다.

3) 사건 발생지역은 서울(6), 대구(5), 부산(3), 경기(5), 충청(3), 강원(2), 전남북(8), 경남북(5)으로 경상이 13건이고 서울 경기가 11건으로 사건 발생 비율이 높다.

| 년    | No | 날짜   | 지역    | 생활비관 동반자살자(연령) |    |    |   |        | 사유                                                  | 장소 | 비고   |
|------|----|------|-------|----------------|----|----|---|--------|-----------------------------------------------------|----|------|
|      |    |      |       | 부              | 모  | 자  | 녀 | 기타     |                                                     |    |      |
| 2013 | 1  | 5.26 | 충남 아산 |                | 37 | 11 | 8 |        | 남편이 우울증으로 자살한 이후 아내가 우울증 신병 비관하여 자녀들과 번개탄으로 자살      | 집  | 네이버  |
|      | 2  | 4.24 | 대구    | 40대            |    |    |   | 초등 쌍둥이 | 실직과 아내 뇌졸중 치료비 부담으로 생활고를 비관하여 연탄불을 피고 쌍둥이와 아버지가 자살함 | 집  | 한국일보 |
|      | 3  | 3.12 | 광주    |                | 42 | 9  | 4 |        | 우울증과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녀들과 함께 동반자살                         | 집  | 뉴시스  |

| 년    | No | 날짜   | 지역       | 생활비관 동반자살자(연령) |     |          |    |                      | 사유                                                                                                                   | 장소            | 비고   |
|------|----|------|----------|----------------|-----|----------|----|----------------------|----------------------------------------------------------------------------------------------------------------------|---------------|------|
|      |    |      |          | 부              | 모   | 자        | 녀  | 기타                   |                                                                                                                      |               |      |
| 2012 | 4  | 8.25 | 대구       | -              | 40대 | 43       | -  | -                    | 두 아들의 건강악화를 비관<br>최근 우울증세 발병                                                                                         | 집             | 연합뉴스 |
|      | 5  | 8.14 | 대구       | 43             | -   | 10       | -  | -                    | 이혼 후 가구점 부도 생활<br>고 비관 아들 목 졸라 숨지<br>게 한 후 복부 찔러 자살기<br>도 미수                                                         | 집             | 노컷뉴스 |
|      | 6  | 8.1  | 전주       | -              | 31  | 86       | -  | -                    | 두 달 전 남편이 가정불화<br>때문에 자살한 후 경제적인<br>압박에 시달림. 두 아들 살<br>해 후 독극물음독자살                                                   | 집             | MBN  |
|      | 7  | 6.27 | 강원<br>양양 | 36             | -   | 10<br>개월 | -  | -                    | 극약 음독자살                                                                                                              | 모텔            | 뉴시스  |
|      | 8  | 6.8  | 부산       | -              | 39  | -        | 76 | -                    | 8년 전 이혼 두 딸 살해 후<br>자살                                                                                               | 모텔            | MBN  |
|      | 9  | 2.21 | 경기<br>산본 | 42             | -   | -        | 6  | -                    | 부인 가출 비관 연탄불 자<br>살시도 딸은 죽고 부는 중<br>태                                                                                | 집             | 뉴시스  |
|      | 10 | 1.31 | 서울       | -              | 40  | 6        | 7  | -                    | 엄마 우울증, 번개탄으로<br>동반자살                                                                                                |               |      |
|      | 11 | 1.26 | 당진       | 40             | 41  | 9        | -  | 조부<br>74<br>조모<br>71 | 2008년 사업실패 2억7천7<br>백 만 원 빚 일거리 없어<br>생활고 비관 부인, 아들, 부<br>모 살해 후 시신에 휘발유<br>뿌린 뒤 불 질러 자살                             | 당진<br>부모<br>집 | 연합뉴스 |
| 2011 | 12 | 1.21 | 부산       | 40             | 37  | -        | -  | 자녀<br>3명             | 10세, 9세, 4세 동반자살                                                                                                     | 집             | 문화   |
|      | 13 | 9.24 | 전남       | -              | 39  | 2        | -  | -                    | 포항모텔에 투숙하여 2세<br>아들 살해 후 인근 아파트<br>15층에서 투신자살                                                                        | 포항<br>아파<br>트 | 뉴시스  |
|      | 14 | 6.17 | 수원       | 52             | 49  | 14       | 12 | -                    | 보증금 2천 월세 70만원<br>생활고로 월세 내지 못함<br>비관 연탄불 피움                                                                         | 집             | 경향   |
|      | 15 | 4.12 | 광주       | 33             | 36  | 4        | 2  | -                    | 실직비관 생활고, 동반자살                                                                                                       | 집             | 노컷뉴스 |
|      | 16 | 2.25 | 동두천      | -              | 45  | 10       | 13 | -                    | 생활고 비관 자녀 2명 목졸<br>라 살해 후 목매자살                                                                                       | 홍천<br>콘도      | 뉴시스  |
|      | 17 | 2.21 | 경주       | -              | 42  | 9        | 14 | -                    | 자녀 살해 후 모 목매자살                                                                                                       | 집             | 매일경제 |
|      | 18 | 1.11 | 서울       | 44             | -   | -        | 17 | 노모<br>82             | 사채 빚더미 비관 탈선한<br>딸 살해 후 4년 동안 치매<br>중인 노모 흥기로 때려죽<br>임. 부는 징역2년 출소 후<br>식당음식찌꺼기 먹으며 노<br>숙자 생활하다가 10평APT<br>사는 자녀 살해 | 집             | 일요서울 |

| 년    | No | 날짜    | 지역    | 생활비관 동반자살자(연령) |     |     |    |     | 사유                                                                            | 장소              | 비고      |
|------|----|-------|-------|----------------|-----|-----|----|-----|-------------------------------------------------------------------------------|-----------------|---------|
|      |    |       |       | 부              | 모   | 자   | 녀  | 기타  |                                                                               |                 |         |
| 2010 | 19 | 10.20 | 전주    | 31             | 31  | 109 | -  | -   | 아들살해 후 인근에서 목매자살 실직 후 막노동하였으나 두 달째 월세, 아들급식비, 학원비 몇 개월 밀림 생활고 비관              | 집               | 서울      |
|      | 20 | 8.9   | 정읍    | 35             | 33  | 2   | 3  | -   | 산후우울증후 2세 아들 살해하고 일가족 자살 청소년 자살예방 공무원, 우체국 공무원이었으나 극심한 우울증 동반자살 선택            | 인근 아파트 18층에서 투신 | 브레이크 뉴스 |
|      | 21 | 6.3   | 강원 고성 | 41             | -   | 6   | -  | -   | 가정불화 비관하여 연탄 동반자살                                                             |                 | 서울      |
|      | 22 | 5.15  | 서울    | -              | 34  | -   | 75 | -   | 가난 때문에 남편과 합의 이혼예정이었으나 법원에 나타나지 않고 아이들 데리고 진도대교에서 투신자살                        | 전남 진도대교         | 문화      |
|      | 23 | 3.26  | 의정부   | -              | 36  | 15  | -  | 여동생 | 남편 사망 1개월 후 경제적 어려움 비관 연탄불 피워 놓고 동반자살                                         | 집               | 뉴시스     |
|      | 24 | 3.5   | 대구    | -              | 41  | 15  | 17 | -   | 사업실패 생활고 600만 원 짜리 사글세 딸과 자살방법 사전논의, 구이용그릴 화덕                                 | 집               | 매일      |
|      | 25 | 1.16  | 경남 양산 | -              | 40대 | -   | -  | 세딸  | 카드빚 월세 아파트 월세 밀림. 위장이혼 생활고                                                    | 집               | SBS     |
|      | 26 | 1.12  | 서울    | 42             | 39  | -   | 3  | -   | 생활고 비관 부인과 딸을 목 졸라 살해 후 남편 동맥 끊고 목매자살                                         | 대천해수욕장 민박       | 폴리뉴스    |
| 2009 | 27 | 11.26 | 안양    | 52             | 46  | 10  | -  | -   | 단독주택 지하 월세 방에서 연탄가스 동반자살 생활고로 대부업자 빚 때문에                                      | 집               | 연합뉴스    |
|      | 28 | 11.20 | 부산    | -              | 42  | 125 | -  | -   | 아들 둘 손발 묶이고 목이 졸린 흔적 있음. 아들 둘 살해 후 자살 가정 생활 비관. 이혼소송 중 우울증 신병비관               | 집               | MBC     |
|      | 29 | 10.1  | 대구    | 54             | 41  | 17  | -  | -   | 수면제를 감기약이라고 먹이고 아들살해. 남편 연탄 화로로 숨지고 부인 살아남. 7천만 원 부채비관 카드돌려막기로 생활 유지함. 생활고 비관 | 집               | 연합      |
|      | 30 | 8.3   | 함안    | 48             | 38  | -   | -  | 아들  | 생활고 비관 살충제 음독사                                                                | 부산 강서체육공원 풀밭    | 뉴시스     |

| 년 | No | 날짜   | 지역    | 생활비관 동반자살자(연령) |     |        |         |    | 사유                                                             | 장소        | 비고   |
|---|----|------|-------|----------------|-----|--------|---------|----|----------------------------------------------------------------|-----------|------|
|   |    |      |       | 부              | 모   | 자      | 녀       | 기타 |                                                                |           |      |
|   | 31 | 7.29 | 광주    | -              | 30  | -      | 4개월     | -  | 우울증으로 자녀 동반투신 자살                                               | 친정 부근 아파트 | 뉴시스  |
|   | 32 | 7.22 | 청주    | -              | 26  | -      | 5       | -  | 생활고 비관과 우울증으로 번개탄 피워 자살하려다 미수                                  | 집         | 연합뉴스 |
|   | 33 | 7.20 | 서울    | 39             | -   | 10     | 12      | -  | 사업실패 부도로 7억3천만 원 채무비관 아들딸 살해 후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 집         | 연합뉴스 |
|   | 34 | 5.11 | 경남 창원 | 43             | 37  | -      | 15<br>4 | -  | 아내와 두 딸 살해 후 자살함 사유 가정불화                                       | 집         | 노컷뉴스 |
|   | 35 | 4.2  | 경남 김해 | -              | 30대 | 6<br>4 | -       | -  | 6살, 4살 두 아들 목 졸라 살해 손목 그어 자살기도 미수, 부채비관                        | 집         | 노컷뉴스 |
|   | 36 | 4.3  | 전남 해남 | 40             | 부인  | 9      | -       | -  | 보쌈집운영 인테리어 비용 1억 2천만 원 빚 문제로 연탄 화덕 방한 동반자살                     | 집         | 연합뉴스 |
|   | 37 | 3.18 | 서울 홍제 | 53             | -   | 20대    | -       | 장애 | 5년 전 사업부도 실직 중. 아들 4년 전 간질증세 발작 비관하여 음독 살해하고 자신은 농약 먹고 자살시도 미수 | 집         | 노컷뉴스 |

### 3. 언론에 보도 된 중 . 고생 자살 (2009.6-2013.6)

45건의 중고생 자살 원인은 학교폭력, 성적, 진로 교사와의 갈등이 21건, 가정 환경 부모 이혼, 부모갈등이 12건이며 질병 우울증 7건, 이성 선택관련 3건, 범죄 교통사고 관련 2건이다

| 년    | No | 일    | 지역   | 구분  | 나이 | 성별 | 내용                            | 비고     |
|------|----|------|------|-----|----|----|-------------------------------|--------|
| 2013 | 1  | 6.3  | 광주   | 고1  | 16 | 여  | 여고생 두명이 가정환경 비관하여 아파트 투신 동반자살 | 조선일보   |
|      | 2  | 5.19 | 부산진구 | 고1  | 16 | 남  | 진로문제 고민 아파트 투신                | 국제신문   |
|      | 3  | 5.18 | 천안   | 중3  | 14 | 남  | 학교성적부진 부모 꾸지람 아파트 투신          | 경향신문   |
|      | 4  | 5.17 | 경기시흥 | 고1  | 15 | 남  | 성남에 있는 교교의 야구부코치와 선택 무섭다 유서   | 경향신문   |
|      | 5  | 5.2  | 경기화성 | 교교생 |    | 남  | 부모이혼 저수지 투신                   | 화성신문   |
|      | 6  | 4.29 | 광주   | 중3  | 15 | 남  | 성적 스트레스 평소 공부 때문에 죽고싶다며 아파트투신 | 노컷뉴스   |
|      | 7  | 4.18 | 영주   | 중2  | 14 | 남  | 학교친구 4명이 20일동안 구타와 집단괴롭힘으로 투신 | 문화일보   |
|      | 8  | 3.12 | 경산   | 고1  | 16 | 남  | 학교폭력 2년간 집단 따돌림 왕따 집단폭행 아파트투신 | MBC TV |

| 년    | No | 일     | 지역   | 구<br>분 | 나<br>이 | 성<br>별 | 내용                                          | 비고       |
|------|----|-------|------|--------|--------|--------|---------------------------------------------|----------|
|      | 9  | 3.2   | 대구   | 고1     | 16     | 남      | 중학교부터 3년간 집단괴롭힘 당함, 아파트 옥상 투신               | 조선일보     |
|      | 10 | 1.4   | 전주   | 고2     | 17     | 남      | 집안문제 평소 우울함                                 | 연합뉴스     |
| 2012 | 11 | 10.11 | 대구   | 고1     | 16     | 여      | 성적비관, 학교폭력으로 아파트에서 투신                       | 한겨레      |
|      | 12 | 9.3   | 울산   | 고2     | 17     | 여      | “먼저 가서 가족과 친구에게 미안하다”유서 남기고 투신자살            | 한국일보     |
|      | 13 | 9.2   | 서울   | 고3     | 18     | 여      | 진로문제로 가족과 갈등 투신자살                           | 문화일보     |
|      | 14 | 9.1   | 대구   | 고1     | 16     | 여      | 교사, 부모와 성적, 학교생활 갈등 투신자살                    | 경향       |
|      | 15 | 8.21  | 경기분당 | 고3     | 19     | 남      | 성적비관 목매서 자살                                 | 뉴시스      |
|      | 16 | 8.14  | 서울송파 | 고1     | 16     | 여      | 카톡 집단욕설들은 후아파트 투신                           | 경향       |
|      | 17 | 6.28  | 평택   | 고2     | 17     | 남      | 성적우수 투신자살                                   | 조선       |
|      | 18 | 6.7   | 충북청주 | 고1     | 16     | 여      | 우울증으로 투신                                    | 연합뉴스     |
|      | 19 | 6.2   | 대구   | 중3     | 15     | 남      | 동아리내 폭력으로 투신                                | 서울신문     |
|      | 20 | 5.26  | 부산사상 | 중3     | 15     | 남      | 투신                                          | 부산시정     |
|      | 21 | 4.29  | 대구   | 고1     | 17     | 여      | 지병 등으로 투신                                   | 서울신문     |
|      | 22 | 4.28  | 대구   | 중3     | 15     | 여      | 가정문제로 투신                                    |          |
|      | 23 | 4.23  | 충북청원 | 고1     |        | 남      | 목매서 자살                                      | 헤럴드경제    |
|      | 24 | 4.22  | 경북상주 | 고2     | 17     | 남      | 7년 사귀 여자친구 이 별, 아버지 지체장애 인, 어머니 7년전 사망.목매자살 | 뉴시스      |
|      | 25 | 3.30  | 대구   | 중1     | 13     | 남      | 지병으로 투신                                     | 서울신문     |
|      | 26 | 2.18  | 대구   | 중2     | 14     | 여      | 가정문제로 투신                                    |          |
|      | 27 | 1.27  | 대구   | 고1     | 16     | 남      | 성적비관으로 투신                                   |          |
| 2011 | 28 | 12.24 | 대구   | 고1     | 16     | 여      | 우울증으로 투신                                    | 서울신문     |
|      | 29 | 12.20 | 대구   | 중3     | 14     | 남      | 학교폭력으로 투신                                   |          |
|      | 30 | 4.16  | 전북정읍 | 중3     | 14     | 남      | 절도 후 목매서 자살                                 | 연합뉴스     |
|      | 31 | 3.10  | 광주   | 중3     | 15     | 여      | 가정폭력 투신자살                                   | 광주CBS    |
|      | 32 | 1.10  | 울산   | 고1     | 17     | 여      | 아버지의 죽음 후 투신자살                              | 울산CBS    |
|      | 33 | 1.09  | 부산진구 | 중3     | 15     | 남      | 아버지와 말다툼 후 투신자살                             | 뉴시스      |
| 2010 | 34 | 12.13 | 부산사상 | 고1     | 17     | 남      | 선배 살해 후 투신자살                                | 메디컬 투데이  |
|      | 35 | 11.16 | 부산남구 | 중3     | 15     | 남      | 어머니 살해 후 투신자살                               | 헤럴드 생생뉴스 |
|      | 36 | 10.19 | 경남창원 | 고1     | 16     | 남      |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낸 후 투신자살                        | 동아       |
|      | 37 | 8.22  | 대구   | 중3     | 16     | 여      | 우울증으로 열차로 뛰어듦.                              | 서울신문     |

| 년    | No | 일    | 지역        | 구분       | 나이       | 성별     | 내용                 | 비고         |
|------|----|------|-----------|----------|----------|--------|--------------------|------------|
|      | 38 | 8.19 | 충남논산      | 중2       | 14       | 여      | 따돌림으로 아파트 투신       |            |
|      | 39 | 8.19 | 부산        | 중3       | 15       | 여      |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아파트 투신 |            |
|      | 40 | 8.19 | 부산        | 중1       | 13       | 남      | 아버지의 꾸지람 후 투신      |            |
|      | 41 | 8.19 | 부산        | 중3       | 16       | 남      | 우울증 투신             |            |
|      | 42 | 7.27 | 경남밀양      | 고3<br>중3 | 18<br>15 | 남<br>여 | 투신자살               | 프라임경제      |
| 2009 | 43 | 9.29 | 부산<br>사하구 | 중3<br>중3 | 15<br>15 | 여<br>여 | 성적 비관 투신 동반 자살     | 메디컬<br>투데이 |
|      | 44 | 6.16 | 광주동구      | 초5       | 11       | 여      | 투신자살               | 광주일보       |
|      | 45 | 6.12 | 전남화순      | 고1       | 17       | 여      | 집단 괴롭힘 목을 매 자살     | 광주일보       |

#### 4 언론에 보도 된 중. 고생 성범죄 통계(2010-2013.5)

중고생 의 성폭행 범죄에 지적 장애 아동 청소년이 표적이 되고 희생되고 있다.  
집단 성폭행이 증가하면서 더욱 심각해지는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해야한다.  
특히 빈곤과 장애가 중복될 경우 장애엄마와 장애 딸도 안전하지 못하다.

| 년    | No | 일시    | 지역    | 구분             | 나이 | 성별 | 내 용                                                                                                                                                      | 비고   |
|------|----|-------|-------|----------------|----|----|----------------------------------------------------------------------------------------------------------------------------------------------------------|------|
| 2013 | 1  | 5.15  | 경북구미  | 고교생3명<br>중학생1명 |    | 남  | 10대 지적장애인인 친구의 누나를 5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집단성폭행함                                                                                                                   | MBN  |
|      | 2  | 5.10  | 수원    | 중3             | 16 | 남  | 16세 중학생 2명이 14세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2명이 성폭행함                                                                                                                    | YTN  |
|      | 3  | 4.11  | 인천    | 중3             | 16 | 남  | 지적장애인 12세 초등학생을 강제로 끌고 납치하여 건물 지하에서 성폭행시도하려다 완강히 반항하자 산으로 가 흠 놀이하자고 문방구에서 삼을 사서 구덩이 파서 놓고 가방으로 질식시키고 암매장 함 초등학교 때부터 품행장애 아들이었고 조손가정 아버지는 지방에서 일하고 엄마는 없음 | 연합뉴스 |
|      | 4  | 1.10  | 피해자제보 | 고2             | 18 | 남  | 남자 친구, 알바 사장, 삼촌에게 3차례 성폭행,성추행 당함                                                                                                                        | 네이버  |
|      | 5  | 1.10  | 대전 중구 | 고1             | 17 | 남  | 고교생2명이 12살 초등생 화장실에서 성폭행                                                                                                                                 | 네이트  |
| 20   | 6  | 12.29 | 친오빠   | 고2             |    | 남  | 초등 4년때부터 3년간 친여동생을 성폭행함                                                                                                                                  | 네이버  |
|      | 7  | 9.4   | 충남천안  | 고1             | 17 | 남  | 2시간 차이로 하루에 중학생 A양(16),초등                                                                                                                                | 중앙일보 |

| 년                | No | 일시    | 지역    | 구분      | 나이 | 성별 | 내 용                                           | 비고     |
|------------------|----|-------|-------|---------|----|----|-----------------------------------------------|--------|
| 1<br>2           |    |       |       |         |    |    | 학생 B양(11) 성폭행                                 |        |
|                  | 8  | 8.29  | 광주    | 고1      | 16 | 남  | 광주서부경찰서 13세 여중생 4차례 성폭행                       | 경향신문   |
|                  | 9  | 7.20  | 충북청주  | 고3      | 19 | 남  | 21세 A씨를 성폭행 시도                                | YTN    |
|                  | 10 | 6.27  | 대구중구  | 고1      | 17 | 남  | 25세 여성 절도 후 성폭행                               | 뉴시스    |
|                  | 11 | 3.31  | 대구    | 고1      | 17 | 남  | 모텔에서 17세 3명이 성폭행 후 절도                         | 아시아투데이 |
|                  | 12 | 2.15  | 서울    | 고3      | 19 | 남  |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                           | 한겨레    |
|                  | 13 | 2.9   | 전남    | 고교생     |    | 남  | 지적장애 B양을 성폭행 임신 낙태                            | 동아일보   |
|                  | 14 | 2.2   | 서울    | 고1      | 17 | 남  | 알고 지낸 중학생 성폭행                                 | 머니투데이  |
| 2<br>0<br>1<br>1 | 15 | 12.12 | 충북청주  | 고1      | 17 | 남  |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성폭행시도                              | 연합뉴스   |
|                  | 16 | 9.22  | 충북청주  | 중2      | 15 | 남  | 여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                           | 뉴시스    |
|                  | 17 | 3.17  | 천안    | 고1      | 17 | 남  | 17세 고교생 5명이 원룸으로 끌고 가 가출 여중생집단 성폭행            | 네이트    |
|                  | 18 | 3.3   | 경북포항  | 고3      | 18 | 남  | 여중생 술 먹이고 성폭행                                 | 조선일보   |
|                  | 19 | 1.25  | 대전    | 고교생 16명 |    | 남  | 15세 지적장애여중생 집단으로 성폭행 보호 처분 선고 내려 (2011.12.27) | 연합뉴스   |
|                  | 20 | 1.5   | 여주    | 중3      | 15 | 남  | 여중생 성폭행                                       | 네이버    |
| 2<br>0<br>1<br>0 | 21 | 12.14 | 울산    | 중3      | 16 | 남  | 중1 (14세)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 함                        | 중앙일보   |
|                  | 22 | 9.26  | 피해자제보 | 고교생 3명  |    | 남  | 중2여학생을 여학생이 거주하는 아파트 윗 층으로 유인 집단성폭행           | 네이버    |
|                  | 23 | 5.13  |       | 고교생     |    | 남  | 고교생 2명이 여중생 1명 집단 성폭행                         | 네이트    |

##### 5. 인터넷에 보도된 자살, 동반자살 및 성범죄 사건 지역별 분류 (2009-2013)

| 구분            | 강원<br>2 |    | 전라(19명) |    |      |    |    | 충청(17명) |    |    |    |    |    | 서울<br>10 | 경기<br>10 | 인천<br>1 | 제주<br>1 |    |
|---------------|---------|----|---------|----|------|----|----|---------|----|----|----|----|----|----------|----------|---------|---------|----|
|               | 고성      | 양양 | 전주      | 광주 | 해남   | 화순 | 정읍 | 대전      | 천안 | 청주 | 청원 | 당진 | 논산 | 아산       | 서울       | 경기      | 인천      | 제주 |
| 성범죄           |         |    |         | 1  | 전남 1 |    |    | 3       | 1  | 2  |    |    |    |          | 2        | 1       | 1       |    |
| 청소년자살         |         |    | 2       | 4  |      | 1  | 1  |         | 1  | 1  | 1  |    | 1  |          | 2        | 4       |         |    |
| 자녀살해후<br>동반자살 |         |    | 전남 1    |    |      |    |    |         |    |    |    |    |    |          |          |         |         |    |
|               |         |    | 2       |    |      | 1  | 1  |         |    |    |    | 1  |    |          | 3        | 1       |         |    |
| 동반자살          | 1       | 1  |         | 3  | 1    |    |    | 4       |    | 1  |    |    |    | 1        | 3        | 4       |         | 1  |
| 합계            | 1       | 1  | 4       | 8  | 1    | 2  | 2  | 7       | 2  | 4  | 1  | 1  | 1  | 1        | 10       | 10      | 1       | 1  |

| 구분            | 부산<br>13 | 경상권 (18명) |    |    |    |    |    |    |    |     |    |    |    |    | 대구<br>19 |
|---------------|----------|-----------|----|----|----|----|----|----|----|-----|----|----|----|----|----------|
|               | 부산       | 마산        | 함안 | 김해 | 창원 | 밀양 | 양산 | 경주 | 울산 | 포항  | 상주 | 경산 | 영주 | 구미 | 대구       |
| 성범죄           |          |           |    |    |    |    |    |    |    | 1   |    |    |    | 1  | 2        |
| 청소년자살         | 10       |           |    |    | 1  | 2  |    |    | 2  |     | 1  | 1  | 1  |    | 11       |
| 자녀살해후<br>동반자살 | 2        |           |    | 1  | 1  |    |    | 2  |    | 경남1 |    |    |    |    | 2        |
| 동반자살          | 1        |           | 1  |    |    |    | 1  |    |    |     |    |    |    |    | 4        |
| 합계            | 13       | 1         | 1  | 1  | 2  | 2  | 1  | 2  | 2  | 1   | 1  | 1  | 1  | 1  | 19       |



# 토 론 문

박 병 현 교 수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먼저 우리나라의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발표해 주신 강명순 이사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명순 이사장님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때 우리나라 빈곤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는 2014년 예산안을 통해서 본 복지사각지대 빈곤층의 정책과제에 관한 내용으로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기로에 서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내용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토론자로서 강명순 이사장님의 발표에 대해 두 가지 내용을 첨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국가예산 투입의 ‘선택과 집중’ 문제입니다. 복지를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단기간에 충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어느 곳에 먼저 투입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 확대와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우선인가 아니면 아동이나 청소년의 복지 확대가 우선인가 하는 것입니다. 강명순 이사장님의 발표에 의하면, 대학생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이 2013년에 2조 7,750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 2014년에는 3조 1,8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인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으로 2013년에 3조 2,097억 원이 지출되고, 기초연금법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지만 내년 2014년에는 기초연금으로 5조 2,002억 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강명순 이사장님께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정책과제로 제시한 ‘빈곤위기청소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빈곤위기 청소년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 확대, 청소년쉼터의 인력 확충, 등)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이 다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현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고 학령인구(6-17세)는 680만 1천명으로, 총 인구의 13.6%입니다. 1980년에 10,769명으로 총 인구의 28.2%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동·청소년의 인구는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보통 어느 특정 인구집단의 수가 감소하면 그 인구집단은 양질의 보호를 받거나 특혜를 받는 경우가 많아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출생률이 격감했던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출생했던 아동들은 태어날 때 최고의 서비스를 받았으며,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당 교사 수도 많고 건물도 넓고 좋았으며 최고의 교사진으로부터 양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들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아동빈곤은 매우 심각합니다. 통계청(2012) 자료에 따르면 아동의 빈곤율은 매년 10%정도로 약 120만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보호받는 아동은 약 37만명으로 상당수의 빈곤아동은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빈곤아동이 속해 있는 가구의 특징은 ① 자녀수가 많으며, ② 한부모 가구, 특히 모자

가구인 경우 아동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③세대주의 연령이 30-40대이며, ④ 세대주의 직업이 전업주부/무직, 학생, 서비스, 생산/운수/노무, 그리고 농어업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농어업인 경우 아동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구의 빈곤으로 인해 빈곤 아동들은 ① 충분하지 못한 영양 상태, ② 불안정한 주거, ③ 낮은 질의 학습, ④ 유해환경 노출(폭력, 노숙, 위험한 거리 등), ⑤ 서비스로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자녀들의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즉, 빈곤은 아동의 삶의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빈곤문제 뿐만 아니라 방임문제, 학교폭력, 자살 문제 등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박사가 연구한 ‘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2013)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지출은 GDP대비 9.3%(2012년 기준) 수준입니다. 사회지출 수준은 OECD 국가 중 멕시코(7.7%)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가 그 다음으로 낮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지출 수준은 OECD 평균인 21.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특히 한국의 아동가족 지출은 2009년 GDP대비 0.8%로 OECD 국가 평균 2.3%비해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OECD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중 2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가족복지지출이 전혀 없는 터키(0.0%)와 미국(0.7%)입니다.

한국의 2013년 중앙정부예산을 대상자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이 48%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 37%, 장애인 11%, 아동 3%, 청소년 1%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 동안의 기간 동안 전체 사회복지예산은 약 4.3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동일기간 동안 아동정책 예산(보육제외)은 2007년(695억원)에서 2012년(2,084억원)로 약 3배 정도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회복지 대상자별 1인당 정부지원액을 살펴보면, 영유아 집단에게 1년간 지원한 금액이 평균 약 100만원 정도로 가장 높은 데 비해, 아동은 약 3만원, 청소년은 약 1만원 정도로 1인당 정부예산 규모가 영유아 집단 대비 아동은 35배, 청소년은 120배로 크게 차이가 납니다. 특히 학교폭력, 방임, 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부지원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노인, 장애인과 비교할 때도 정부지원액이 미미한 수준입니다.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예산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이러한 정책노력은 영유아 보육지원이나, 노인 등에 자원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학령기 아동, 즉 아동 및 청소년은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는 이유인 높은 노인빈곤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OECD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노인 두 사람 중에서 한명이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있을까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빈곤 측정에서 문화적인 요인이 빈곤측정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요? 개인을 측정 단위로 하여 빈곤 상태 여부를 측정하면 미국의 노인들과 한국의 노인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의 노인들은 아직까지 효문화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 노인들과 비교하면 자녀와 더 단절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인들은 개인을 측정단위로 하여 빈곤을 측정하면 정확한 빈곤율이 추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개인을 대상으로 빈곤을 측정하면 정확한 빈곤율이 추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자녀 소유의 호화주택에 거주하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은 실제로 빈곤하지 않지만 통계에는 빈곤노인 범주에 들어갑니다.

일부 정치인들이 대학의 재정 상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표를 얻기 위해 내뿜은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기 어렵게 되자 그 대안으로 갑자기 등장한 ‘국가장학금’과 대통령 선거 때 노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 각 후보들이 앞 다투어 공약한 노인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우선순위인지 아니면 국가의 장래를 바라보고 아동·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자에 관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문제로서 요즘 갑자기 등장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수급자는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정수급자 문제를 확산시켜 이슈화하려는 보수언론들의 보도 태도입니다. 잠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관한 기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것인가 아니면 정체상태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보수 성향의 정부에서 복지논리가 경제논리에 밀려 뒷전으로 내몰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논리가 경제논리에 밀리게 되면 사회복지예산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미 보수 언론들은 사회복지에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선진사회복지연구회에서 복지예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토론회를 계속 개최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토 론 문

이 태 진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정책연구본부장)



한국 복지사각지대=빈곤층?

한국 복지정책의 범위=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대표적 공공부조제도, 빈곤정책)  
+ 최근 교육, 주거, 에너지, 문화 등 외연의 확대

복지정책변화와 빈곤정책의 위상?

빈곤정책의 성과 진단을 통한 빈곤정책의 대상 및 범위 논의 필요

본 발표원고에서의 2011년 2012년 2014년에 제안된 복지정책 과제 및 예산을 비교분석은 구체적인 정책내용까지 분류화, 분석하고 있어 기존 관련 연구 및 내부논의 자료에서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함. 이는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발전방향 관련 문제제기에 있어 매우 유용하리라 기대됨.

타당하고 합리적인 검토자료, 분석내용, 결과도출을 발표해주신 강이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빈곤퇴치를 위한 대안모색방안 제시에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함.

본 토론은 최근 복지정책환경 변화와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개편을 앞두고 있는 빈곤정책의 변화 나아가 혁신에 따른 현안과 당면과제를 살펴보고, 원인에 대한 진단과 경제적뿐만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추진정책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빈곤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음.

- 첫째는 빈곤상태에 놓인 국민의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는 이미 빈곤상태에 있는 빈민에 대해 소득이전을 통해 즉각적인 생활고를 해결해주는 가장 오래되고 전통적인 빈민구제 정책으로, 빈곤정책 중 가장 핵심적이지만 소극적이고 사후적이며 협의적 개념의 빈곤정책이라 할 수 있음. 둘째는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립하려는 노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탈빈곤을 위해 자립노력을 하도록 지원하는 당근(pull 정책)과 채찍(push 정책)의 다양한 자립지원정책들도 빈곤구제 정책만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복지국가 위기 이후 더욱 강조되고 더욱 정교해진 일련의 근로연계복지(workfare) 정책들이 이러한 빈곤층 자립정책의 핵심임. 셋째는 빈곤상태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잠재적 빈곤집단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통하여 빈곤의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으로 이는 잠재적 빈곤위험 집단에 대한 표적화된 정책(예컨대, 과다의료지출 집단에 대한 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질병, 재해, 노령, 실업, 장애 등 소득상실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1차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는 것을 포함. 사회보장정책, 사회서비스정책, 나아가 노동시장정책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광의의 사회정책임.

향후 비수급 빈곤층 규모 증가와 지속화 될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높은 노인빈곤율과 근로빈곤층이 증가할 것임. 따라서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우려와 함께 빈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근로연령세대에 투자로의 빈곤정책 방향모색 그리고 기존 탈수급 강조에서 빈곤전략 및 장기화의 예방기능 강화로 중심점 이동

※사회부조체계의 3단계 과정이 빈곤 예방의 효과성 결정(Behrendt(2000)):대상자가 실제로 사회부조 수혜 자격을 갖는가(eligibility), 급여가 가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충분한가(adequacy), 빈곤 가구가 실제로 급여를 요청하는가(take-up)

정책방향 모색에서 고려해야하는 전제는?

- 재정적 건정성 및 안전성 담보(비수급 빈곤층 대상의 대폭적 지출확대 곤란)
- 정책기조는 사회적 합의 고려하여 권리와 의무의 조화가 강조
- 정책대응속도를 넘어서는 경제 및 노동여건 변화에 고려
- 빈곤전략 및 고착화 방지를 위한 빈곤정책방향은 빈곤화 원인에서 모색
- 외국 사회보장제도의 지출과 비교하여 주거급여, 가족수당, ALMP 등의 우선확대,
- 타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복지부의 명확하고 적극적인 역할 필요
- 한국형 빈곤정책 연구 발전은 세부적 검토로 타당성을 확보하되, 제도운영은 간편하게

-----현안과 개선방안 모색

#### □ 현안) 복지급여 집중과 누락

- 저소득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의 대상 집중과, 빈곤층의 제도권 밖으로의 누락 문제가 공존자원 동원의 제약이 있는 현실에서 집중도 문제. 유사 정책 등 각종 정책의 정책목표에 대한 수급자의 인식이 취약해지고 자원이 집중되는 수급자 외 다른 빈곤층의 어려움에 대한 자원투자를 제한하게 될 위험

※ '중복'은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목적의 프로그램이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 목적이 다른 여러 정책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표적화를 하는 경우는 집중으로 보는 것이 타당

##### ○ 원인에 대한 검토

- 제도의 기준, 즉 적용되는 각 지원제도의 기준을 보면 소득인정액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임. 기준을 보아도 최저생계비의 100%와 130% 정도의 수준에서 노치(notch)현상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가능
- 행정의 집중, 기준의 획일적 적용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소득인정액의 산출이 용이한 행정주체, 시군구·읍면동으로의 행정업무의 집중도 초래, 결국 일선에서 복지대상에 대한 개별적 관리를 위한 여건을 확보하기 어렵게 함.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92개 중앙부처의 복지사업 중 61%의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에서 전달된다고 기술, 하지만 다른 특별행정기관 등에서 전달하는 사업 중 일부는 조사, 선정, 자격확인 등을 의뢰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일선 사무소의 업무 집중은 더 심각할 위험

##### ○ 개선방안

- 빈곤예방 강화를 위해 잠재적 빈곤문제에 대한 사전적 체계 강화
  -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타 사회부조성 급여 간의 우선순위 조정
  - 생계성 급여 지양하되, 현물 및 사회서비스 확대와 형평성 제고
- 가구특성별(주거점유형태별/근로능력별/학생유무별) 필요한 급여를 조합한 맞춤형 지원으로 보장성의 합리화 확보

※ 예를 들면, 과도한 의료비부담에 대한 지원(보장성 강화와 급여-보험의 체계 통합), 주거급여, 임대주택 등 지원 형태에 따라 차등적 지원 및 선정기준 체계화, 교육은 궁극적으로 전국민 무상지원(부처간 사업 통합 및 연계)

-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대한 급여의 목표 달성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하여 관련 복지제도와 연계성 강화
- 제도의 영향분산 효과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준 보편제도의 도입에 대한 고민
- 소액 현금 급여 등 통합, 지방배정
  - 소액의 현금급여-소액의 현금 급여들에 대해서는 수급을 받는 가구에서도 그 효과인식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확인과 조정 작업을 시도하여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사업 여건을 확보, 지역별 차별화된 제도 기반 강화
- 시도의 역할 강화, 현재 시도는 복지정책의 기획 및 집행에서 그 역할이 미비, 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일선 시군구의 업무하중을 완화하기 위하여 준보편 현금급여(기초노령연금 등)에 대하여 시도로 이전, 시도는 이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얻어진 지역의 주민 형편 등을 고려 지역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획력을 제고할 기회 확보
- 전산망의 접근성 공유
  - 각 제도들이 필요한 공적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적자료를 활용한 다양한 기준을 별도의 행정적 협력 없이 업무량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수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의 전산망 접근성 확장(보건소의 담당직원의 접근, 고용의 work-net과의 소통원활 지원 등)
  - 시도의 역할 조정에 있어 시도가 준보편적 급여업무를 담당할 경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에 대한 접근성 확보도 필요

#### □ 현안) 부정 수급과 사각지대 발생

- 지난 10년 동안 다양한 복지사업이 확대·도입되면서 복지대상 규모 및 복지재정 급증. 반면 재정의 효율적 집행 및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는 구축되지 못함
- 급격히 증가한 복지정책과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 특히 복지대상 증가 및 변동에 대응 필요
- 현재 행복e음 구축 및 운영을 계기로 복지급여와 서비스 제공 관련 정부의 사후관리 가능성이 제고되었으나, 공적 행정자료로 관리되지 않는 사항, 고의적 부정수급 예방·관리 등 사후관리 미흡. 이와 더불어, 사각지대 발굴 및 신청탈락자 재조사 및 이의신청 일원화,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환류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 활동 추진 필요
-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보험과 달리 수급자 기여없이 예산으로 지원되므로 수급

자 선정 및 급여지급의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신뢰성과 건전성 확보가 제도의 성공적 운영과 복지재정 확대의 전제조건임

○ 원인분석

- 복지급여 사후관리 업무의 분절적 수행 : 현재 복지정책별로 담당 사업부서마다 분절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거나, 일부 제도는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음
  - 사후관리에 투입하고 있는 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러한 인력 역시 분절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업부서별로 유사한 업무내용을 대상만 달리하여 중복적으로 수행, 복지정책별 담당 사업부서에서는 부적정 급여 및 사각지대로 인한 사건 및 감사 또는 언론 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적, 임시변통적, 수동적 사후관리 방식을 넘어서는데 한계가 있음, 현행 지자체가 1차적으로 사후관리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치행정구조(선거의식, 민원무마 요구) 하에서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한계

○ 개선방안 : 복지급여 통합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효율적 운영

- 통합 사후관리 체계(법률 - 전담조직 - 정보인프라)의 발전 : 복지급여 및 서비스(현금급여, 보육·사회서비스 바우처, 사회복지시설 지원)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후관리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한 IT 기반 data matching 및 risk profiling에 의한 부적정 급여대상 관리, 체계적 현장조사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선제적·예방적으로 통합 사후관리 수행 체계를 구축
- 통합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의 성패는, 정책영역별 보건복지부 내 담당 사업부서, 사후관리 전담조직 내 정책영역별 담당팀, 정보인프라 구축과 운영 및 현장조사 지원기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가칭)사후관리운영본부 및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급여 모니터링 평가지원센터), 지자체 통합(조사)관리팀과 사업팀간의 효율적인 연계 구조에 달려 있음
  - 타 부처 연계 복지사업의 경우 수급자격 등 부적정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담조직이 담당하며, 해당 부처 사업부서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사후관리 결과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는 해당 부처가 담당함
- 이와 함께, 복지정책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부정수급 및 권리구제 신고센터의 Hotline을 통합 운영하여 기능을 강화함
- 외국 사후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 법률 사례를 바탕으로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통합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로 개별 법률(가칭, 복지급여 사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하여 각종 개별 법률에 부분적으로 명시된 확인조사 및 사후관리, 처벌 관련 규정들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별 법률안 제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2011.8.제정)병합 조정

(참고)영국의 사회부조 모니터링: 자산조사와 부정수급 방지노력

엄격한 자산조사 청구신청서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사회보장 부정수급 비용은 매년 최소 £20억 (전체 사회보장예산의 약 2%)<sup>2)</sup>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러한 부정수급 중 약 60%는 소득보조(IS), 구직자금여(JSA), 주택급여(HB)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노동연금성(DWP)는 모든 유형의 부정수급을 막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IS, JSA 그리고 주택급여에서의 부정수급과 오류 건수를 줄이는데 특별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첫째, 예방(prevention)으로, 이는 IS와 JSA의 새로운 신청자가 처음 신청할 때 더욱 엄격하게 급여를 통제하는 것임. 둘째, 검토(checking)로, 이는 신청과정에서 자격조건(entitlement)을 검토하기 위해 더 엄밀한 조사를 수행하는 것임. 셋째, 탐지(detection)로, 이는 더 많은 부정수급자를 포착하기 위해 향상된 자료 수집능력과 전문적 능력을 사용하는 것임. 마지막으로, 처벌(punishments)로, 사회보장부정수급방지법(Social Security Fraud Act, 2001)에서 규정하는 있는 새로운 권한을 통해, 부정수급자에 대해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는 것임.

부정수급 모니터링 담당부서: IS와 JSA는 영국의 대표적인 사회부조급여로서 중앙정부의 DWP에 의해 운영됨. 이에 비해, 주택급여와 지방세공제제도 등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됨. 이러한 차이로 인해, IS와 JSA는 주로 DWP 산하의 부정수급전담 모니터링 기관이라 할 수 있는 부정수급방지조사부서(Counter-Fraud Investigation Division)에서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으며, 주택급여와 지방세공제제도 등은 DWP의 독립적인 부서인 부정수급조사기관(Benefit Fraud Inspectorate: BFI)에서 부정수급 모니터링 업무를 전담하고 있음.

법률적 뒷받침: 부정수급 방지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2001년에는 사회보장부정수급방지법(Social Security Fraud Act, 2001)을 제정하였음. 이 법에서는 부정수급 조사를 향상시킬 권한을 제공하고, 반복적인 위반자들에 대한 더 엄격한 처벌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국부정수급신고전화(The 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 운영: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신고전화로서 전국부정수급신고전화(The National Benefit Fraud Hotline)을 운영하고 있음. 이 핫라인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급여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도 포함됨.

부정수급(fraud)과 오류(error)에 대한 매년 표본추출 조사: 지역별 급여조사(Area Benefit Review)에서 우선 지방정부(Area Directorates)내의 모든 지구사무소(districts office) 중에서 5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 지구사무소의 IS와 JSA 수급자 중에서 집단별로 (IS는 3집단; 한 부모, 연금 수급자와 장애인/기타, JSA는 1집단; 자산조사사기초 JSA와 기여기초 JSA로 구성) 각 10명의 수급자를 무작위로 표본추출하여 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13개의 지방정부에서 매달 반복하여 해마다 31,200사례). 이와함께 공무원의 오류점검: 기술지원팀(Quality Support Team)에서 6개월 단위로 모든 급여행정지구(Benefit Agency districts, 현재 총 130개)를 무작위로 방문하여, 방문한 급여행정지구에서 IS의 경우 무작위로 선정된 3개월 동안의 사례 중 100개, JSA는 1개월 동안의 사례 중 100개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됨(매년 26,000사례).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의 주요 목표: 부처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확보

(정책패키지 시범적 추진)

1)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직업교육체제와 연계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구조화 필요(덴마크의 복지-고용-학습 연계 모형 참조)

— 저소득층의 자활에 가장 큰 걸림돌은 낮은 학력으로 취업 가능 업종이 제한되고 이로 인

2)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를 포함할 경우 전체 사회보장예산의 약 7%인 £70억에 이룸(1998)

해 낮은 보수로 이어지는 악순환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에 상급 졸업장 취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문대학이나 대학의 학위 취득이 장기적으로 자활을 보장할 것임. 고용 중에도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나 대학평생교육중심사업, 방송대학, 사이버대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함. 교육훈련은 현존하고 있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가능

-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곤란을 극복하게 되고 실업의 경우는 실업 수당의 조건으로 교육훈련에 필참 요구
-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실시: 전국에 산재해 있는 평생교육기관 (2,806개 소)을 활용하여 고용보험 미적용자(실업자·영세자영업자, 전업주부, 저학력 중 고령자 등)들을 위한 역량 개발 프로그램 운영. 이 공공 평생교육 투자에 빈곤층 등의 소외계층을 목표 대상으로 삼아 의무 쿼터를 만듦으로써 공공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음(독일의 평생교육기관들은 소외계층을 목표집단 target group으로 30% 이상 참여 의무가 있음) 호주의 TAFE(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college나 영국의 FE(Further Education) college, 미국의 community college 등은 단기대학의 수준을 가진 평생직업교육기관으로 공적 자금으로 직업역량을 키워는 공적 평생교육기관들임

## 2)복지-고용-주택 연계를 통한 탈빈곤 안정화

- 주거급여(주택바우처)는 수요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의 정책으로 주거비 경감에 따른 소득증대효과를 인정, 물적 자원의 축적인 사회적 투자로 이끌어야함. 따라서 주택바우처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 주거지원제도 뿐만 아니라 자립촉진제도와의 연계가 필수적임. 자립촉진제도와의 연계는 경제적 자립 및 근로유인의 노동프로그램, 금융제도 등과의 연계를 뜻하는 것으로 수급자 스스로 주거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주거안정성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렇다 할 자립촉진제도가 없는 현실이나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자산축적, 근로유인 프로그램과 함께 정책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산축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및 행복키움통장 프로그램이 있으며, 근로유인 프로그램으로는 노동부, 보건복지부의 자활 및 고용촉진, 일자리 프로그램이 있음.
- 주거급여(주택바우처)와 연계하는 자립촉진제도: 미국의 가족자립프로그램(FSS) 및 개인 발전계좌(IRA)가 주택바우처와 연계 운영. 주택바우처 대상자는 소득이 높아지는 만큼

임대료가 올라가지만, 가족자립프로그램 참여자는 소득 상승분만큼을 계자에 적립하게 되어 자립이 촉진됨.

- 또한 미국의 근로연계프로그램(MTW), 영국의 청년고용지원프로그램(FOYER)이 주거지원과 연계되어 있음. 공공지원을 받으면서 주택바우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에게 사례관리 지원과 더불어 임대료 및 연금 재정보조 패키지를 제공함. 자녀가 있는 가정의 가장이 근로·구직중이거나 취업 및 직업훈련, 교육 혹은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바우처를 지급함. 청년층이 정부의 고용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거처를 지원함.



# 토 론 문

서 병 수 소장  
(한국빈곤문제 연구소)



# 빈곤화 성장의 극복

## 1. 머리말

○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양극화문제가 심각하다, 빈곤문제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다 동의하고 있다고 봄. 전문가나 학자들은 그 발생 원인에 대하여 세계화의 영향, 기술진보와 공장자동화 진전, 산업구조의 변화, 노령화와 저출산, 재벌위주의 성장정책, 신자유주의의 영향, 성장의 부진 등 여러 가지가 지적되고 있음. 그리고 복지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복지정책패러다임의 개혁, 복지제도의 개선과 도입 등 좋은 정책들이 많이 제안되고 있음. 특히 시민단체에서는 현행 복지제도의 비합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부처와 함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고, 정치인들은 문제점을 지적할 뿐 해소하려는 정책결정에서는 미적거림.

－ 예를 하나들어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핫이슈는 부양의무자기준 문제임. 자녀들 중에 한명이 일정 소득인정액 이상(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침)<sup>3)</sup> 이면 노인이 실제 생활이 어렵고 자녀들도 자기 살기에 힘들어 부양이 쉽지 않은 사정에 있다하더라도 그 노인은 수급자가 되지 못함. 이러한 노인수가 1백만명 이상임. 독일에서는 이를 ‘은폐된 빈곤’이라고 하였음.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하여 관련부처 책임자는 “잘 알고 있지만 7조원이 소요된다.” 또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 라는 간결한 답변으로 응하고, 각 정당들은 더 이상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음. 부양의무자기준의 불합리성은 잘 알고 있지만 막대한 복지재정을 소요하므로 그 방어기제로서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임.

－ 이것이 우리나라 복지체제의 현주소임. 우리나라는 아동수당을 빼면 선진국의 여러 복지제도를 다 구축하여 복지국가형성의 초기단계에 있다고 진단되는데 그 복지제도들은 복지지원을 제한하는 쪽으로 방어기제가 제도화되어 있는 ‘비복지성’이 특징임. 이것이 복지사각지대가 전 인구계층에 걸쳐 방대하게 제도적으로 형성된 원인임. 성장을 중시하여 복지는 낭비이니 주 변화하는 ‘생산주의 복지체제’가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많은 빈곤대책이 제안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빈곤율이 장기간 높아져 온 핵심원인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잘 세울 수 있고,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

## 2. 빈곤율은 왜 장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가?

○ 상대소득빈곤율(중위소득의 50%기준)<sup>4)</sup>은 1993년 이후 장기적으로 상승.

3) 우리와 같이 부양의무자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하여는 공공부조제도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다만 자녀(장애인의 경우 부모)의 모랄 헤저드를 경계하기 위해 10만유로(1억4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적용함.

-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동반하여 상승하고, 5분위 배율과 P90/P10분위수 배율로 본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음.

-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2000년 이후 최근까지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의 증가보다는 상대빈곤율의 증가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부터 상대소득빈곤율과 지니계수<sup>5)</sup>는 높은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

- 그러나 소득갭비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빈자들이 더욱 궁핍화되는 ‘빈곤의 심화’는 지속적으로 가중.

<그림 1> 한국 빈곤과 불평등의 변화



자료 : 유경준(2009)

4) 빈곤율은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농어가 제외)를 사용한다. 절대소득빈곤율의 빈곤선이 되는 최저생계비는 의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에 중위 소득 50%를 빈곤선으로 하는 상대소득빈곤율을 사용한다. 한편 한국복지패널조사에 의하면 상대소득빈곤율은 2005년 20.4%에서 2009년 18.4%로 점감추세를 시현하다 2010년 19.3%로 재상승하는 등 가계동향조사 결과와는 다른 추이를 보였고, 지니계수도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러한 지표간의 상이는 규명되지 않고 있다.

5)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국세청 자료 등을 이용해 2010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가 정부 공식 통계의 0.308에서 0.371로 크게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칠레·멕시코·터키·미국에 이어 다섯째로, OECD 평균 0.314보다 훨씬 높다.

<표 1>

분배지표와 빈곤지표 동향(시장소득 기준)

|                                   |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5분위 배율(배)                         | 통계청     | 6.65  | 7.09  | 7.38  | 7.70  | 7.74  | 7.86  |
|                                   | 보사연     | 6.08  | 6.44  | 6.69  | 6.88  | 6.87  | 6.82  |
| P90/P10분위수 배율(배):                 | 통계청     | 5.57  | 5.81  | 6.12  | 6.43  | 6.55  | 6.75  |
|                                   | 보사연     | 5.12  | 5.42  | 5.62  | 5.76  | 5.80  | 5.82  |
| 지니계수                              | 통계청     | 0.330 | 0.340 | 0.344 | 0.345 | 0.341 | 0.342 |
|                                   | 보사연     | 0.323 | 0.333 | 0.337 | 0.336 | 0.332 | —     |
| 엔겔계수(%)                           |         | 12.3  | 12.2  | 12.6  | 12.8  | 13.1  | 13.5  |
| 균등화 중위소득의 50%(천원)                 |         | 691.0 | 717.7 | 745.9 | 764.2 | 812.9 | 868.9 |
| 빈자들의 평균소득(천원)                     |         | 396.6 | 409.1 | 412.5 | 402.7 | 417.0 | 442.3 |
| 상대소득빈곤율<br>(중위 시장소득<br>50% 기준, %) | 통계청(개인) | 16.6  | 17.3  | 17.5  | 18.1  | 18.0  | 18.3  |
|                                   | 보사연(개인) | 16.1  | 16.7  | 16.7  | 17.3  | 17.0  | 17.0  |
|                                   | 보사연(가구) | 19.9  | 20.3  | 21.2  | 22.0  | 22.7  | 22.5  |
| 상대소득빈곤 소득갭비율(보사연)                 |         | 42.6  | 43.0  | 44.7  | 47.3  | 48.7  | 49.1  |

주 : 1)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계청의 통계는 전 가구에 1인 가구 및 농가를 포함함. 보사연의 통계는 전 가구에 1인 가구 포함, 농어가구 제외함.

2) 5분위 배율은 상위20% 점유율 / 하위 20% 점유율임.

3) 엔겔계수는 국내소비지출 중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품의 비중임. 국민계정에서 산출함

4) P90/P10 분위수 배율은 상위 10% 경계점 기준 / 하위 10% 경계점 기준임.

5) 빈자들의 평균소득은 (균등화 중위소득 50%)\*(1-소득갭비율)임.

자료 : 국가통계포털의 분배지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 1993년 이후 최근까지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낮아지지 않는 이유는 성장-분배-빈곤의 삼각관계에서 성장과 분배 양면에서 빈곤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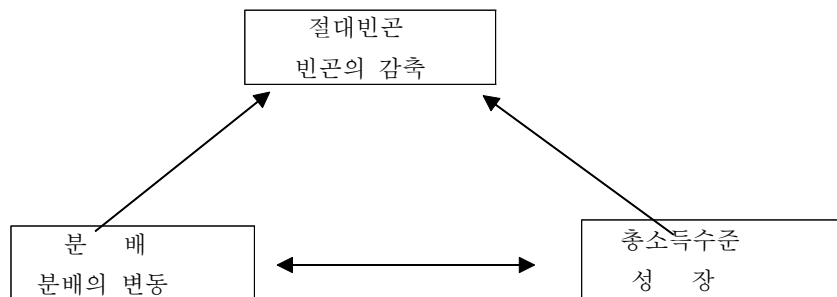
#### <참고> 성장-분배-빈곤의 삼각관계

○ 지난 60여 년 간 진행되어 온 성장-분배-빈곤의 삼각관계에 관한 논쟁은 이론에서만 아니라 철학, 윤리, 종교, 이념적 면에서도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결론을 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렴된 명제가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재발견된 발전경제학의 학자들과 당시의 대부분의 제 3세계의 정책결정자들은 고전경제학의 전통을 이은 신고전파 성장론에 기초하여 성장과 효율을 중시하고 성장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높은 이윤·저축율과 재분배는 상충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불균등과 빈곤은 경제성장을 위해 감수하여야 하거나 추후에 장기적으로 차츰 해소할 부차적 과제였다. ‘밀물이 오면 모든 배가 함께 뜬다.’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분배된다.), ‘파이를 나누기보다 먼저 키워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밑바닥까지 확산(trickle-down)된다고 강하게 선호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불평등의 문제와 빈곤의 원인과 차원에 대한 논의를 시발로 성장과 관련되어 재분배의 필요성이 논란 되면서 성장-분배-빈곤의 삼각관계에 대한 논의가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빈곤을 보는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보여 빈곤은 경제적 비경제적 요소로 이루어진 다차원적인 현상으로서 경제성장의 극대화만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크게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성장, 분배 및 빈곤의 상호 인과관계 즉 삼각관계를 간단히 살펴본다. 현 경제학의 발전수준에서

는 성장과 분배는 상호 작용하며 이 두 요인은 어떤 경로를 거쳐 빈곤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 경로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블랙박스로 가정하면 경제성장의 결과적 상황이 빈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빈곤이 심화되면 불평등이 심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면 빈곤이 심화되는 점에서 빈곤과 상대적 불평등(예를 들면, 지니계수)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빈곤감축 정책수립의 관점에서 보면 성장과 분배가 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작용 받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고, 이 두 요인이 빈곤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는 두 번째 질문이 된다.



○ 아직 분명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수립된 명제는 다음과 같다(Kanbur, 2004. 유경준 2006 및 2008).

첫째, 성장이 빈곤 감축에는 필요한 조건은 되나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둘째, 경제성장은 상대적 분배상태 또는 불평등상태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소득분배의 개선을 동반하는 성장은 빈곤감소를 더욱 촉진한다,

셋째, 높은 소득불평등도는 빈곤감소를 저해한다. 그리고 부의 재분배정책은 경제성장 지향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요약하면 빈곤감소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이 필요하나 성장한다고 빈곤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하더라도 빈곤이 반드시 감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높은 불평등은 빈곤의 성장탄력성 감소를 통해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장정책은 빈곤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배에도 유리한 ‘성장정책과 복지정책의 조합’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 한국에서는 성장-복지의 선후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성장과 복지의 동반과 상호긍정적 관계에 방점을 찍었지만 성장주의를 신념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이 국정의 중심이 되어 비즈니스플랜들리, 고평가 환율정책과 감세정책을 추진하여 소위 빈곤화성장정책을 내어 놓고 추진하여(그러나 국제금융위기를 당면하여 강하게 추진하지 못하였다) 사실상 성장-분배-빈곤의 논쟁을 제기한 셈이었다. 박근혜정부는 고용을 향상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지만 복지확대를 통한 빈곤감소정책을 적극 들어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인식의 근저에는 바로 성장-분배-빈곤의 관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입장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입장의 우산아래 기획재정부를 위시한 관료들의 의식은 생산주의·발전주의의 최소복지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한국은 여전히 성장-분배-빈곤이라는 삼각관계에 대한 논쟁의 와중에 있다고 하겠다.

-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합계비중은 80% 수준에서 고소득층은 20% 수준에서 안정적인데, 장기적으로 중산층은 줄어들고 저소득층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빈곤층화 또는 빈곤화의 진행을 볼 수 있음(뒤의 참고박스 양극화나 빈곤화나 참조).

<표 2> 저소득층 중산층 및 고소득층 가구(도시 2인 이상) 비중

단위 : %

|              | 1990 | 1995 | 2000 | 2005 | 2010 | 2012 |
|--------------|------|------|------|------|------|------|
| 중위소득 50% 미만  | 7.8  | 8.3  | 10.4 | 13.6 | 14.9 | 14.4 |
| 중위소득 50~150% | 73.7 | 73.5 | 69.7 | 66.6 | 63.7 | 65.5 |
| 중위소득 150%이상  | 18.5 | 18.1 | 19.9 | 19.8 | 21.5 | 20.1 |

자료 : 국가통계포털

- 1990년대에는 모든 계층에서 실질소득이 비교적 비슷한 크기로 늘어났으나, 2000년대에는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상승률이 연 0.6%로 침체되어 있는 반면 고소득층으로 분위가 높아질수록 실질소득 증가율은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격차는 늘어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소득격차는 더욱 심화.

<표 3> 분위별 실질 평균소득 및 평균증가율

단위 : 천원

|            | 1990  | 2000  | 2010  | 2012  | 평균증가율(%)  |           |
|------------|-------|-------|-------|-------|-----------|-----------|
|            |       |       |       |       | 1990-2000 | 2001-2012 |
| 1분위        | 464   | 624   | 600   | 663   | 3.8       | 0.6       |
| 2분위        | 722   | 1,064 | 1,284 | 1,374 | 4.4       | 2.2       |
| 3분위        | 912   | 1,378 | 1,720 | 1,854 | 4.6       | 2.5       |
| 4분위        | 1,153 | 1,774 | 2,258 | 2,415 | 4.7       | 2.6       |
| 5분위        | 1,823 | 2,747 | 3,610 | 3,816 | 4.4       | 2.8       |
| 3분위/1분위(배) | 2.0   | 2.2   | 2.9   | 2.8   | 1.2       | 4.2       |
| 5분위/1분위(배) | 3.9   | 4.4   | 6.0   | 5.8   | 1.2       | 4.7       |
| 5분위/3분위(배) | 2.0   | 2.0   | 2.1   | 2.1   | 0.96      | 1.1       |

주 : 국가통계포털의 분위별 도시근로자가구(2인 이상) 평균소득을 소비자물가로 실질화함.

- 이러한 빈곤층화의 진행은 가구소득의 큰 비중을 점하는 근로소득(가계동향자료 2010년 중 비중 70.7%)의 분산(즉 불평등도)이 심화되고 자영업 등 사업소득의 부진(동자료 : 1995년 32.2%→2010년 23.6%<sup>6)</sup>)에 주로 기인.

<표 4> 전일제 피고용자 총임금분산 비교

|             | 1990  | 2000  | 2010  |
|-------------|-------|-------|-------|
| D5/D1 (배)   | 1.83  | 2.02  | 2.09  |
| D9/D5 (배)   | 2.11  | 2.00  | 2.26  |
| D9/D1 (배)   | 3.86  | 4.04  | 4.72  |
| 저임금근로자비중(%) | 21.28 | 24.58 | 25.88 |

주 : 1) 저임금근로자비중은 총 근로자 중 중위임금의 2/3 이하를 버는 근로자의 비중

6) 최경수(2013)에서 인용

<참고>

양극화나 빈곤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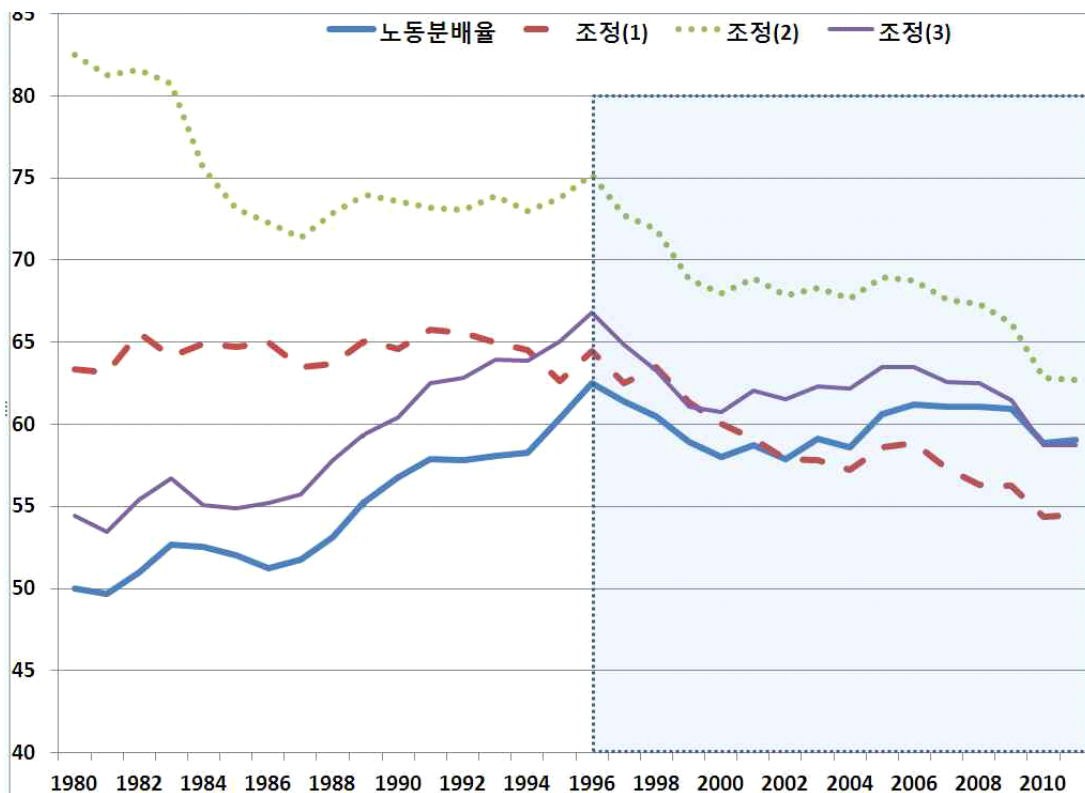
- 소득 또는 임금 등의 분포가 중간층에서 양 극단으로 이동하는 양극화 현상은 집단 간 이질성이 증가하거나 또는 집단 내 동질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심화됨.
  - 집단 간 이질성 증가 :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비중 즉 상위 10%(혹은 20%)와 하위 10% (혹은 20%)의 소득격차가 커지는 경우
  - 집단 내 동질성 증가 : 중산층이 얇아지면서 고소득층과 빈곤층의 비중이 더욱 커지는 경우
- 고소득층의 비중이나 소득점유율은 변동이 없는데 빈곤층 비중이 더욱 커지거나 소득 점유율이 더욱 낮아지는 경우는 양극화로서의 의미보다는 빈곤층화 또는 빈곤화로서의 의미가 더욱 강함. 그 결과 2000년대에 상대소득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곤화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양극화 지수나 소득점유율배율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안종범, 2006).

자료 : OECD Statistics

- 가구부문을 넘어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의 노동분배율(조정 후)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6년을 기점으로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자본소득이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킴.

<그림 2>

노동분배율 추이



자료 : 여경훈(2012)에서 전제

<참고>

### 노동분배율의 보정

한국은행이 피용자보수만 대상으로 작성한 노동분배율은 1970년 이래 꾸준히 상승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60%가까이에서 별다른 등락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한국의 경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이나 영세도소매업이 대부분 가족단위의 자영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영업잉여로 간주하여 노동분배율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됨. 노동소득분배율은 자영업자의 소득에서 얼마를 노동기여에 대한 대가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남.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자영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1980년대 초까지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임금근로자보다 많을 정도였음. 최근 자영업의 비중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용구조는 여전히 자영업 비중이 높은 것(2013년 4월 22.8%)을 특징으로 함.

자영업 소득에 해당하는 '비법인 개인기업의 영업잉여'는 한국은행 국민계정체계 상 제도부문별 소득계정의 '개인 및 비영리단체(원천)의 영업잉여'에 해당되고 있음.

<보정 1방식> 자영업 소득을 모두 노동소득으로 간주

<보정 2방식> 자영업자의 1인당 평균소득이 임금근로자 1인당 평균소득과 같다고 가정  
자영업 소득을  $(\text{피용자보수}/\text{임금근로자수}) \times \text{자영업자수}$

<보정3방식> 자영업자 소득의 일부를 노동소득, 나머지를 자본소득으로 간주하되, 자영업자 소득이 해당 기의 임금소득/자본소득 비율대로 구분된다고 가정  
(아래 그림에서는 취업자에서 농업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것임)

조정된 노동분배율 결과를 보면 조정(1)은 자영업자의 영업잉여를 포함한 노동소득분배율로 1996년 정점(64.4%)에서 2011년 54.5%까지 하락함. 조정(2)는 1991년 73.2%에서 1996년 75.2%까지 상승했으나, 2011년 63.2%로 10%p 이상 떨어짐. 조정(3)은 취업자에서 농업어업 종사자를 제외한 분배율로 1996년보다 8%p 하락한 58.7%를 기록함. 1996년부터는 모두 하락세로 전환하였음( 주상영, 2013; 여경훈, 2012)

○ 특히 소비의 주된 원천인 노동소득의 정체가 내수의 구성 요소인 소비와 투자에 대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학계에서는 확인하고 있음. 내수 기반 악화의 장기화로 성장의 잠재력마저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 것으로 추정됨(주상영,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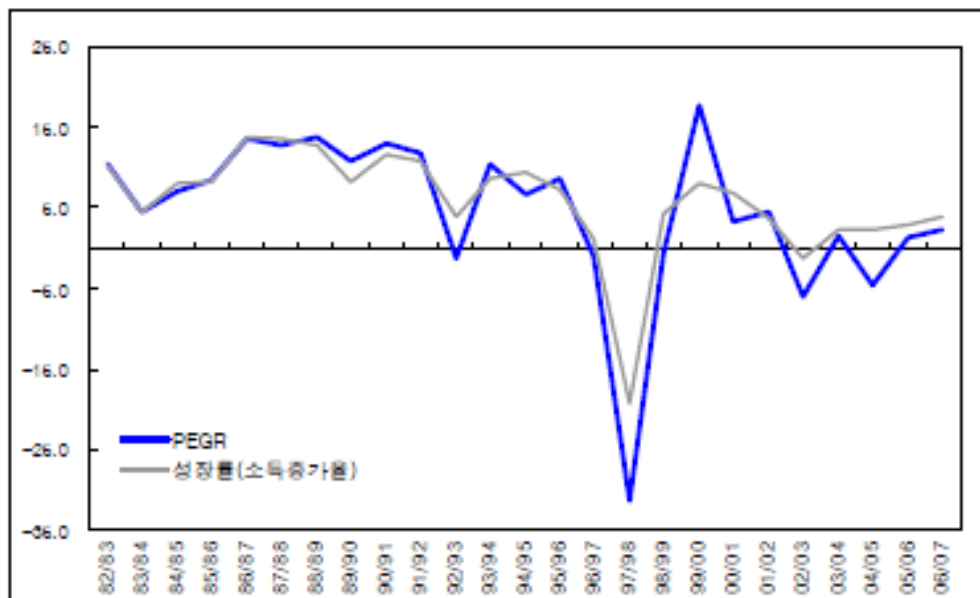
- 자본소득의 소비성향에 비해 노동소득의 소비성향이 더 높다는 관점에서 볼 때, 노동소득 분배율의 하락이 소비 침체에 기여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됨. 그러나 단위노동비용의 하락 혹은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이 투자증가율을 둔화시킨 현상은 논쟁의 대상이 됨. 수출의 호조에 불구하고 그 성과가 국내에 확산되지 않고 부진한 내수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시설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했을 것임. 케인지안은 근본적으로 투자를 매우 불안정적인 변수로 보고 유효수요의 창출을 중시하는데 이를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음. 적어도 한국에서는 노동소득분배율의 개선이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됨. 투자만이 성장의 관건<sup>7)</sup>이라는 과거의 통념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는 것임.

7) Solow(1956)의 신고전파 성장이론은 성장이론의 주류를 이루었다. 이 성장모형에서는 장기적 성장률은 기술수준, 저축률과 투자를 및 인구증가율에 의해 결정된다. 기술수준은 외생변수로 다루어졌다. 성장의 주된 요인은 물적 자본 축적으로서 부자의 저축성향이 빈자보다 높은 까닭에 분배의 불균등이 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론은 현실에서 맞지 않은 점이 자명하여지자 내생적 성장이론이 발전하고 있지만 일반인이나 기업가들의 상

○ 이러한 결과에서 총체적으로 2000년대의 성장기조는 친자본, 반빈곤(anti-poverty)의 성장형태로서 빈곤화 성장과정(immisering growth)에 있었다고 진단할 수 있고(다음 박스 참조), 이러한 빈곤화성장과 분배구조의 악화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빈곤율이 높아졌고, 이의 누적으로 만성빈곤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음.

－ <그림 3>에서 빈곤동등성장률<sup>8)</sup>(파란색)이 실제성장률(회색)보다 아래 있으면 빈곤이 증가하는 경우인데 2000년대 들어 매년 빈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5>에서 2000년대에는 빈곤의 성장탄력성이 평균적으로 (+)로 빈곤증가에, 하위 20% 소득점유율의 성장탄력성이 (-)로 빈자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작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3> 빈곤동등성장률(Poverty Equivalent Growth Rate)과 실제성장률



자료 : 유경준 (2009) (소득증가율은 도시근로자가구 총소득(경상+비경상)의 증가율임)

<표 5> 빈곤의 성장탄력성지표

단위 : %

|           | 빈곤의 성장 총 탄력성              | 하위 20% 소득점유율의 성장탄력성 |
|-----------|---------------------------|---------------------|
| 1990-2000 | -0.345                    | 0.269               |
| 2001-2011 | 0.386(2.58) <sup>9)</sup> | -0.370              |

주: 1) 탄력성은 도시근로자 경상소득의 1% 증가에 대한 상대빈곤율과 소득점유율의 변동율임.

자료 : 통계청의 가계동향자료와 보사연의 2012년 빈곤통계연보에서 저자 작성

식은 신고전과 성장이론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

8) 빈곤동등성장률은 기존의 성장률이 소득불평등도의 변화가 없었다면 실현하였을 빈곤감소율과 동일하게 하는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실제 성장율보다 작으면 빈곤이 증가한 경우이다.

9) 2002/2003년에는 성장률 크기에 비하여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여 비정규적인 것으로 보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괄호 내는 동 통계를 포함 시 결과이다.

<참고>

성장의 형태에 대한 논쟁

○ 성장-분배-빈곤의 명제는 빈곤의 감소에 성장과 분배가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의 경로와 성장의 형태에 대한 답은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성장은 기술진보나 노동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구조의 변화, 고용기회의 감소, 금융시장접근에 대한 어려움 등과 같은 장애들로 인하여 빈곤을 창출할 수 있고, 성장이 충분치 않거나 변동성이 심할 경우 대중의 빈곤화(예, 1990년대의 러시아와 동구들)를 가져올 수 있다. 성장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 경제성장은 생산가능 영역을 확장시키고 재화의 이용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사회후생수준을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50년대 미국 경제학자 바그와티(J. Bhagwati)는 경제성장에 따라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교역조건이 악화가 경제성장의 이익을 압도하여, 오히려 경제성장 이전보다 후생수준이 하락하는 ‘빈곤화 성장(immisering growth)’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의 커피생산사례에서 볼 수 있다. 개방경제에서 수출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였지만 생활이 도리어 어려워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 Krishna와 Yavas(2004)는 폐쇄경제에서도 생산물시장의 독점, 생산요소시장의 비효율화 발생, 주택과 같은 분할 할 수 없는 내구소비재 시장의 협소화, 기술진보에 의한 노동수요 축소 등 장애의 발생으로 성장이 오히려 복지를 축소시키는 빈곤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빈곤화성장이론의 영역을 확장시켰지만 영향력은 적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성장의 형태에 대한 논쟁이 ‘친빈곤 성장(pro-poor growth)’의 정의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빈자에게 유리한 소득분배를 동반하는 성장 즉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성장만을 친빈곤 성장으로 보는 측과 빈자의 소득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면(부자가 얼마나 별든) 친빈곤성장이라고 주장하는 측으로 나뉘어졌다. 세계은행은 성장의 속도(세계은행이 이전에 증시한 주장)뿐만 아니라 성장의 형태도 중요하지만 후자의 입장을 지지하고 새로운 성장정책패러다임으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제안하고 있다. 성장과정에 빈자들과 중산층이 다 같이 참여하는 기회의 균등을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정책은 근본적으로 과거 성장 제일주의의 범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고, 사회보장제도의 구축은 목표가 아니라 수단적 역할로 머무는 한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포스트케인지안과 칼렉키안의 성장모형에 근거하여 UNCTAD와 ILO가 ‘임금주도성장전략(또는 소득주도성장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경제체제는 이윤주도체제-임금주도경제체제로, 분배정책을 친자본적-친노동적으로 구분하여 그 조합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국가들을 분류할 수 있다.

1) 이윤주도경제의 친 자본 정책은 이윤이 높아지면 기업가와 간부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기계구비 및 생산력 증대에 더 많이 투자하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고용률 증가 및 구매력 증가의 형태로 적하 효과가 나타나 일반 근로자도 임금감축 및 근로조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이득을 본다고 주장한다.

2) 친 자본 배분정책이 임금주도체제와 결합된 경우 이 유형을 ‘실제적 신자유주의’라고 묘사하는데, 2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친 자본배분정책으로 인해 그 경제성고가 전후 황금시기 30년간에 이룩한 성과에 비해 미약하기 때문이다. 실제적 신자유주의에는 비대해진 금융부문(부채확대) 또는 외부수요(중상주의적 수출확대)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수반되는 데, 이로 인해 경제적, 재정적 불안이 초래된다. 이러한 외적 동인에 대한 의존 - 수출주도성장과 부채주도성장-은 사회가 추구하는 친자본적 분배정책과 임금주도 경제체제하에 있는 분

야의 내재적 특성 사이의 모순으로 인한 성장부진을 우회하려는 시도로 생겨난다.

3) 이윤주도경제와 친 노동 정책의 결합은 근로자 보상이나 임금비중을 높이려는 시도는 불가피하게 경제 둔화를 초래하게 되는 시나리오로 소득분배 변화가 해당 경제의 이윤주도체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경우 그 시도는 바로 중단된다.

4) 임금주도체제에 친 노동 정책이 결합된 칸에는 복지국가의 확충은 1970년대 오일쇼크가 있기 전까지는 실질임금의 상승이 노동생산성과 이윤을 큰 폭으로 높이면서 근로자와 기업가 모두에게 이로운 성장의 황금시대로 이어진 예로 볼 수 있다.

임금주도 성장전략은 4)와 같이 노동과 가계에 친화적인 임금 및 소득정책으로 복지지출을 확대하거나 생산성 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실질임금을 증가시키고 총수요 확대를 통하여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분배-총수요-투자-생산성의 선순환 원리를 작동 시키자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3)에 소속된 것으로 분류된다(Stockhammer와 Lavoie, 2012; 새사연, 2012).

경제체제/분배정책 기본 틀에 의한 실제 성장전략

|      |      | 분배정책                                                  |                              |
|------|------|-------------------------------------------------------|------------------------------|
|      |      | 친 자본                                                  | 친 노동                         |
| 경제체제 | 이윤주도 | ‘이론적 신자유주의’<br>적하자본주의                                 | 소득분배조치 경우 실패가능<br>(불운한 사회개혁) |
|      | 임금주도 | ‘실제적 신자유주의’<br>불안정하며, 외적성장 동인에 의존 (부채주도성장 또는 수출주도 성장) | 전후 황금시대<br>사회적 케인즈주의         |

## ○ 빈곤과 반빈곤 성장정책의 역사적 경험

1) 1965-1997년 중 : 수출전략에 의한 급격한 산업화와 고도성장으로 창출된 일자리를 통하여 빈곤이 급격히 감축되었고, 1987년의 노동운동 약진과 민주화로 임금이 대폭 증가하면서 평균적인 소득이 향상되었음. 그러나 발전주의국가의 최소 복지주의, 사회복지제도의 부분적 도입 또는 적용배제 등 사회적 배제, 성 차별, 도시화 등으로 노인, 장애인, 고졸 이하, 임시·일용직, 여성 등 비취업 집단, 농촌출신의 도시 유입자 등 취약계층을 위주로 장기 빈곤이 이미 지속되고 있었고, 사회계층화<sup>10)</sup> 진행, 그리고 빈곤의 세대 이전 효과 발생

- 장기적인 고도성장의 후유증인 고물가와 저효율 등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와 해외 경기 부진으로 1992년-1993년 중 국내경기가 둔화되고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일시빈곤이 확대되었는데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구조화가 시작되었음.

- 김영삼 정부의 자본자유화 등 무지한 개방화와 환율정책의 오도로 발생한 1997년의 외환

10) 취약계층이 위험생애사건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 위험생애사건의 발생 가능성 자체가 계층화되어 있고, 사회계층은 위험생애사건과 별개로 여전히 빈곤진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취약계층에서 위험생애사건의 빈곤축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다. 임시/일용직, 비취업인 경우에는 상용직에 비해 가구원 실직의 빈곤축발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여성, 고졸이하, 비취업 집단이 이혼/사별/별거로 인한 빈곤진입 위험에 매우 취약한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원진, 2011).

위기는 대규모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을 발생시켰고, 이에 대응할 고용보험과 사회안전망은 미비되어 있어 일시빈곤이 급증.

2) 김대중 정부 기간(1998년-2002년 중): 1999년 이후 해외경기의 도움으로 경기회복이 되고, 김대중 정권은 IMF의 지침에 의해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보험의 보편화 등 복지개혁을 실시하였으나 실제 내용으로는 복지최소주의의 유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복지방어적 복지제도를 만들었고,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노동시장의 분절을 초래 확산하여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취약한 자영업자의 급증으로 근로빈곤이 대량 발생하는 기반을 구축하였음. 노조도 정치참여의 조건으로 이에 동조함으로써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2000년대에 들어서 잠재성장율의 둔화와 성장의 고용능력이 하락으로 청년실업과 청년빈곤이 심화하고, 실제적으로는 10% 선의 고실업을 지속. 한편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저임-고임 등의 경제양극화 가속시작. 고령화 추세에 대한 대책을 방치하여 노인빈곤이 급증하고 가족해체의 진행으로 한 부모 여성가구의 빈곤도 점증.

3) 노무현 정부기간(2003-2007년) : 복지의 사회투자성격을 부각함으로써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설득한 공로가 있지만 실제 복지제도운영에서는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아 사회서비스공급을 시장에 위탁하고 저임의 사회서비스직군을 양산하여 결과적으로 빈곤 확산에 기여한 셈임. 재정안정화라는 실체 없는 명목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하락시킨 점과 용돈수준의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 것은 치명적인 정부실패였음. 연금은 사실상 부과식제도이므로 연금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오도된 것임.

4) 이명박 정부기간(2008-2013년) : 경제가 성장하면 적하효과에 의해 소득분배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고성장정책, 부자감세, 고환율정책, 친기업, 재벌규제완화, 부실건설업 지원 등 노골적인 빈곤화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구조적 빈곤은 더욱 심화

5) 박근혜 정부기간(2013년- ) : 박근혜 새정부는 ‘국민100%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복지정책 표적집단을 구분하여 맞춤형 복지를 내 놓았고, 복지와 양 대축의 하나로서 방치되어 온 노동부문에서는 고용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여 잔여적 복지모델을 벗어나고 있음. 그러나 성장의 형태에 대한 그림이 없고, 비정규직, 최저임금 등 1차 분배와 부자감세 철회나 증세 등 2차 분배에 대한 입장은 정리되지 않고 불명한 채 이명박정부의 기초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보수주의 기반위에서 복지와 고용에서 상당히 좌클릭하였으나 생산주의적 유산과 보편주의 복지 내지 빈곤감축을 위한 복지개혁이라는 이질적인 내용을 정합할 수 있는 정책스탄스가 결여되어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갈등을 인기영합적 시혜복지사업 위주로 가져갈 위험이 있음.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욕구별 개별급여체계전환에서 적정한 최저생계비의 책정 등 최저소득보장에 대한 의도가 상실되고, 기초연금도입안에서는 복지재정의 확대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맞춤형복지가 복지재정축소의 기제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또한 고용율 향상이 꽤 많은 일자리가 아니라 노무현정부와 같이 저임 노동의 확산으로 오도될 개연성도 염려스러움.

### 3. 빈곤감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빈곤정책대안 수립과 관련하여 EU의 최근 경험을 소개함.

- EU는 2000년부터 성장과 고용증대를 정책핵심으로 하는 Lisbon Strategy<sup>11)</sup>에 의해 적극적 노동정책구사 등에 힘입어 고용증대에는 큰 성과를 보였으나 시간제 등 낮은 임금근로자를 양산하여 EU 전체의 높은 수준의 빈곤수준(중위소득 60%기준 17%)에서는 별 변동이 없었다고 평가되었음.

2010년 EU는 2020년까지 향후 10년간의 경제사회정책으로서 효과적 투자(R & D에 대한 GDP 3% 투자, 교육 투자), 저탄소경제(환경과 에너지투자), 사회통합(고용율 75% 달성, 2천만명 빈곤감축)의 구체적인 5개 목표에 초점을 두는 “Europe 2020 Strategy”를 결정하였음. 성장 먼저가 다소 후퇴하고 구체적인 빈곤감축목표를 제시하여 각 회원국만 아니라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참여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현재 각 회원국가 및 각 지방정부는 반 빈곤행동계획 수립과 빈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최저소득제도의 강화 등 복지제도의 법적 개선과 함께 사회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상당히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현재 한국에서 복지국가모형수립을 위한 핵심 논쟁과제는 3가지임.

첫째, 성장-분배-빈곤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대립되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점임. 이 과제는 선성장-후복지논리와 성장·복지의 선순환논리로 표면화되어 대립되고 있는데 사실상 빈곤문제가 누락되어 있는 논쟁임. 성장-분배-빈곤의 삼각관계에서 성장형태에 대한 논쟁으로 진전되어 더욱 심화될 필요가 있음.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냐는 논쟁은 국민에 모두에게 복지를 보장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이념(이에는 모든 국민과 정당이 동의하고 있다고 봄)에서 보편 상호보완적 정책수단에 불과함. 더욱이 성장-분배-빈곤의 틀에서는 둘 다 요청되는 사안임.

둘째, 앞의 논쟁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서 재정부담 문제가 모든 논리를 압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점임. 정당 내부에서는 복지재정을 위한 증세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을 염려하는 기류가 강함. 이런 점을 감안하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을 논쟁의 타겟으로 할 수 있다고 봄. 역진성이 있지만 복지수혜자가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은 공정성에서 어긋나지 않다고 봄.

셋째, 복지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이다. 복지이데올로기는 복지국가모형 논쟁이기도 한데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임. 이는 발전시켜야 할 논쟁과제임. 휴머니즘과 인권이데올로기는 신자유주의의 극복에 미흡한 점이 있음. EU에서는 인권의 원천으로서 공공선 또는 사회공유의 이데올로기가 제안되고 있음.

○ 이러한 논쟁과제를 고려하여 빈곤정책 대안의 대강을 제안해 보고자 함.

1) 성장정책기조의 패러다임적 전환 : 중국은 고도성장의 한계에 부딪쳐 이미 내수중심의 성장

11) EU는 1999년 유로화 출범으로 단일통화권이 되면서 2000년 3월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EU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권(the most competitive and dynamic knowledge-based economy)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른바 리스본전략(Lisbon Strategy, 혹은 Lisbon Agenda)을 채택했다. 리스본전략은 크게 경제개혁, 고용증대 및 사회통합의 3대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는데 2005년 3월 채택된 '신리스본전략 (Renewed Lisbon Strategy)'은 지식과 혁신, 투자와 고용환경 조성, 고용창출을 3대 핵심분야로 삼고, 10대 실행계획(Lisbon Action Plan)을 제시하였다. 2010년에 역대 경제성장률을 3%선으로 끌어올리고, 600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성장중심주의의 유산이 계속되었다.

정책으로 전환하였음.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의 중요성을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역할을 100% 또는 과다 지원하는 방식은 이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봄. 내수활성화와 투자증진을 위하여 가계소득의 증대를 보장할 수 있게 친 빈곤적 성장전략인 임금(또는 가계소득)주도형 성장전략을 채택하는 성장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봄. 민주당은 이 과제를 정책화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여 주고 있다고 듣고 있음. 새누리당과 다른 당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자세가 요청됨.

2) 국민기구적 사회적 합의기구의 도입 운영: 현재 노사정, 사회보장위원회 등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회적 협의기구가 파행으로 운영되거나 정부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정부-시민단체 등 더 다양한 주체들과 대표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민기구적 사회적 협의기구를 도입함으로써 대립적 견해를 완화하고 협약에 이를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 협의기구에 소속 전문연구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적 제안을 받도록 함. 이외에 거시정책을 위한 사회경제정책위원회,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인구계층의 청와대국민회의를 도입하여 정책제안에 대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함.

- 미국은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대합의제도를 10년마다 개최함. 노인 문제의 경우 문제점과 대안을 전국의 각 지역포럼에 이해당사자들과 정치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많은 지역대표 등이 참여하는 White House Conference를 개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함. 보고서는 의회와 정부부처에 제출되어 법적 조치로 구현됨.

3) 최저소득보장제도의 법적 확립 : 우리나라복지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복지제도의 배제적 비복지성과 낮은 최저생계비 책정임. 특히 적정 최저생계비의 결정은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는데 조사용역받은 연구원들의 임의적인 하향 산출로 최저생비산출이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개편논의 중인 개별급여체제는 생계급여 등의 급여기준을 중위소득의 일정비율로 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최저생계비에 대한 보장권이 법규에서 사라지는 사태로 가고 있음.

- 첫째, 사회복지관련 법규와 관련하여서는 정치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최소한으로는 행정권의 남용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사항(예,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채금리수준으로 과다하게 책정하는 등)을 법규에서 제한하도록 명시하고, 이의신청을 관할 지방정부가 다시 심사하는 것은 공정치 못함으로 사회복지법원을 운영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담당하도록 함이 좋겠음.

- 둘째, 최저생계비의 적정한 책정과 230여 복지프로그램의 급여기준의 정합적인 책정을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별도의 ‘최저소득보장위원회’ (현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조사용역을 받은 보사연으로 부터 보고서를 제출받아 결정)를 설치하여 자체 연구인력에 의하여 많은 시민과 단체들이 참여하여 최저소득기준(Minimum income standard)을 설정하고, 정부 각 부처가 확정할 복지급여기준의 범위를 제한도록 함이 좋겠음. 최저소득보장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는 연금이나 최저임금에 대하여도 구속력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공정임금법’의 제정으로 공정임금위원회를 두어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둘 수 있음(호주의 사례).

4) 예방적 안전망과 빈곤감축방안으로서 사회투자계획의 운영 : 각 지자체별로 사회투자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토록하며, 중앙정부에서는 별도의 투자기금을 거액조달하여 지자체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 복지시설, 복지프로그램, 소득 등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빈곤 예방적이고 인간이 잘 살아갈 수 있게 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람에 대한 투자’와 취약가구의 돌봄 등이 중심 정책이 되며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조직에 대한 지원도 포함함. 사회투자계획의 수립 시에는 현 지역복지계획수립과 같은 저차와 과정과는 달리 시민들의 폭 넓은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사례 : EU의 Social Investment Package, 유럽 각국 지자체들의 사회투자계획).

5) 근로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대한 급여제공의 실현 :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일반 공공부조제도로서 보편적 적용을 지향하여 근로무능력자와 근로능력보유자를 다 같이 포함하여 인구계층별 인구학적 차이에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에 의하여 급여하고 있음. 예를 들면 불건강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추가생활비가 책정되어 있지 못함. 따라서 일반 공공부조제도가 아닌 근로능력자구와 근로무능력자군을 분리하여 지원하기 위해 노인, 장애인 및 근로무능력자에 대해 관대하게 처우하는 범주형 공공부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특히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빈곤제도를 목표로 생계, 주거, 의료, 돌봄, 건강관리 등 삶의 전반에 대하여 보호하는 노후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재 20만원의 기초연금도입으로는 현세대노인의 빈곤율이 50%수준에서 40%로 낮아지는 것에 불과하고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는 2045년까지는 베이비붐 노인 등 다음 미래 노인들은 노후준비미비와 저 연금 또는 무연금으로 50%대의 높은 빈곤율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노후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은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는 복지국가형성의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임.

6) 혁신적 복지개혁의 필요 :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는 복지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복지제도의 개선에 대해 논의할 때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많음. 직관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 같지만 Lipsey와 Lancaster의 차선의 이론(theory of the second best)은 여러 가지 제도개혁 조치를 추진할 때 비합리적인 측면들을 점차로 제거해 나가는 점진적 접근법이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모든 비합리성을 일거에 제거하지 않고 그 중 일부분만을 제거한다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의 상황이 예전에 비해 더 못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임. 노동법규의 개선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봄.

7) 빈곤감축량목표 등 국민의 후생에 대한 사회지표 공시 :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빈곤감축량목표, 주민행복지수, 임대주거지 제공 목표 등 빈곤과 후생에 대한 사회지표를 국민에게 제시하여 목표달성에 대해 정부의 책임 있는 가버넌스를 점검하는 장치가 필요함.

8) ‘한국의 빈곤과 부 보고서’ 작성 :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는 풍요를 누리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음. 국민의 복지상황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와 정책방향을 어떻게 해야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하는 바가 없음. 독일은 ‘독일의 부와 빈곤보고서’를 3년마다 발간하여 국민에게 보고함. 여기에는 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및 정부공무원들이 수십 명이 참가하여 각 복지영역별로 현황과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공무원들이 그간 대처해온 정책과 앞으로의 대책방향을 제시하여 이에 답하고 있음. 동 보고서는 정부의 국민후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것임.

<참고문헌>

- 새사연. 2012. “소득주도 성장전략이 대안이다.” 새사연브리핑. 2012.4.2.
- 서병수. 2013. “노인빈곤해소를 위한 노후최저소득보장제도의 구축방안 검토.” 2013년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 안종범. 2006. “양극화의 진단과 대책.” 한겨레신문강의
- 여경훈. 2012. “불평등과 경기침체\_분석과 정책함의.” 새사연. 새사연브리핑
- 유경준. 2006, 『성장과 분배 및 빈곤의 관계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개발연구원, 2006. 12.
- 유경준. 2008. 『빈곤감소적 성장(Pro-poor Growth): 정의와 한국에의 적용』 KDI. 정책연구시리즈 2008-03
- 유경준. 2009.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분석.” KDI정책포럼 제 215호
- 이원진. 2011. “개인화(individualization)인가 계층화(stratification)인가 생애사건과 사회계층이 빈곤진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45집 5호 참조
- 조홍식. 2013.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서경연 심포지움 시리즈 XX
- 주상영. 2013. “소득분배 악화와 내수 침체.”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공동학술대회.
- 최경수. 2013. Korea's Income Inequality: The Trend and major Issues.  
KDI-KAEA Conference on Fiscal Sustainability and Innovative Welfare System. 5 August 2013
- Brandolini, Andrea and Timothy M. Smeeding. 2009. Income Inequality in Richer and OECD Countries.
- Krishna, Kala and Cemile Yavas. 2004. Immiserizing Growth in a Closed Economy. *The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 106, No. 1, Mar. 2004
- Kanbur, Ravi 2004, "Growth, Inequality and Poverty: Some Hard Quest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Spring 2005.
- Saad-Filho, Alfredo. 2010. “Growth, Poverty and Inequality: From Washington Consensus to Inclusive Growth” DESA Working Paper No. 100
- Stockhammer, Engelbert and Marc Lavoie. 2012. Wage-led growth: Concept, theories and policies. ILO. Conditions of Work and Employment Series No. 41



<부 록> 본 연구회 토론회 개최 연혁 및 토론회 관련 기사



## <토론회 개최 연혁>

### 1. 창립기념 제 1차 토론회 개최

- ☐ 일시 : 2009. 12. 10 오전 11시
-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 제 : '미래한국 복지건설을 위한 신구상'
- ☐ 주제 발표 : 강욱모 (국립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토 론 자:
  - o 김병숙 교수(건국대학교행정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 o 김창남 교수(경희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정치학박사)
  - o 조순태 소장(강남성폭력상담소, 한국사회문제연구원)
  - o 정무성 교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 축 사 : 박범진 미래정책연구소 이사장( 한성디지털대학교 전 총장)

### 2. 제2차 토론회 개최

- ☐ 일시 : 2010. 2. 25
- ☐ 장소 : 성남 신청사 대강당(온누리관)
- ☐ 주 제 :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지역복지발전의 과제'
- ☐ 주제발표 : 백종만 학장(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 ☐ 토 론 자:
  - o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 o 장향만 사무관 (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지역복지과)
  - o 이해련 교수 (경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o 장윤영 도의원 (한나라당)
  - o 지관근 시의원 (민주당)
- ☐ 축 사 :
  - o 장석권( 전 단국대학교 총장)
  - o 김경우 회장(성남시 사회복지연합회/을지대 교수)

### 3. 제3차 토론회

- ☐ 일시 : 2010. 07. 12
-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 제 : '한국적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지역밀착형 사회적기업을중심으로'
- ☐ 주제 발표: 정무성 원장 (전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원장)

- ☐ 토 론 자:
  - o 박현준교수 (연세대학교 사회적기업지원센터소장)
  - o 김재춘 정책국장 ‘아름다운가게‘
  - o 정태길 사무국장 ‘함께 일하는 재단
  - o 박찬민 총괄실장(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o 윤준현 대표(주)에이스푸드
  - o 모동희 대표 남한산성반딧불이학교 (예비사회적기업)
- ☐ 축 사: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 ☐ 축사문
  - o 오세훈 서울시장
  - o 이재선 국회보건복지위원장
- ☐ 1부 사회 :이승훈 교수 (국제대학교)
- ☐ 2부 사회: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MBC 뉴스 토론회풀영상

#### 4. 제 4차 토론회

- ☐ 일시 : 2010. 10. 1
- ☐ 장소 : 성남시청 3층 대회의실
- ☐ 주 제 : ‘고령화시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선 한국 노인들’
- ☐ 주제발표: 최성재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사장)
- ☐ 토 론 자 :
  - o 나임순 교수 (백석대)
  - o 신영석 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 o 박순현 서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 o 김영진 회장 (성남시 노인복지시설연합회)
- ☐ 축 사 : 차홍봉 전 보건복지부장관(2013년 세계노년학·노인의학대회 대회장)
- ☐ 1부 사회 :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본 연구회 이사)
-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 후 원: 성남시, S·K사회적기업지원사업단

#### 5. 제5차 토론회

- ☐ 일시 : 2011. 2. 17
-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 ☐ 주 제 : '저출산대책변화의 합의 와 향후과제'
- ☐ 주제발표자 :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

☐ 토 론 자:

- o 정영훈 과장(대통령직속기관 미래기획위원회 사회복지정책과)
- o 도미향 교수(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 o 안명옥 이사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17대 국회의원)
- o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 축 사: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 o 차홍봉 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前 보건복지부장관)
- o 오영숙 총장 (前세종대총장)

☐ 축 가 : 장선주 (바리튼). 이동형 (테너)

☐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보건복지부, 대통령미래기획위원회, 롯데백화점

\*언론홍보 mbc뉴스토론회 풀영상, 연합뉴스, 데일리안, 뉴시스, 뉴데일리, 조선일보

## 6. 제6차 토론회

☐ 일시 : 2011. 6. 14

☐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 주제발표: 김용하 원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토 론 자

- o 김미혜 교수 (이화여대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o 이기영 단장 (보건복지부 베이비부머정책기획 총괄)
- o 우재룡 소장 (삼성생명은퇴연구소)
- o 최용민 (베이비부머해당 토론자 신청공모에서 선정된 일반시민)

☐ 축 사

- o 김성이(前보건복지부 장관)
- o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 협회 회장

☐ 오카리나 특별연주 : 오영숙 前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 실버학과)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삼성생명, 한국경제신문

\*\*\*언론 홍보 :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뉴시스 및 6개 언론사 기사 게재

## 7. 제7차 토론회

- ☐ 일시 : 2011. 9. 27
-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 제 : '한국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장기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
- ☐ 주제발표 :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
- ☐ 토 론 자
  - o 박용오 사무총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o 홍백의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o 김재진 박사 (한국조세연구원 예산분석센터장)
  - o 장상수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무)
- ☐ 축 사 : 심윤중(前 성균관 대학교 총장/국민희망포럼 이사장)
- ☐ 1부사회 : 박서영 교수 (신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 2부사회 : 박기환 교수 (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본 연구회 이사)
- ☐ 후 원 : SK사회적기업지원단
- \*\*\* 언론 홍보 : 뉴시스 및 연합뉴스 등 5개 언론사 기사

## 8. 창립 2주년 기념 및 제8차 토론회

- ☐ 일시 : 2011. 12. 20
- ☐ 장소 :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 제 : '누가, 어디에 기부하고 자원 봉사하는가?—나눔 주체 및 선호에 대한 이해'
- ☐ 주제발표 : 강철희 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 ☐ 토 론 자
  - o 장학봉 (사회공동모금회 사업본부장)
  - o 임혜성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 o 박대석 ( CJ 나눔 사무국장)
  - o 김현옥 (한국자원봉사관리협회 회장)
  - o 안명옥 (전국회의원/나눔공동체)
- ☐ 축 사
  - o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본 연구회 고문)
  - o 김원길 (전 보건복지부 장관)
  - o 오영숙 (전 세종대 총장/ 본 연구회 고문)
- ☐ 추가 : 소프라노 이윤순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 'Memory'(추억), <캣츠>
- ☐ 1부 사회 : 석말숙 교수(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 후원 : 보건복지부, IBK기업은행, CTS기독교TV
- \*\*\* 언론홍보 : 연합뉴스 및 언론사 6기사 보도

## 9. 제9차 토론회

- ☐ 일시 : 2012. 3. 9
-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 제 :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복지국가-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의 모색'
- ☐ 주제발표 : 홍경준 교수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토 론 자
  - o 박미출 (일반시민토론자 신청공모자에서 선정)
  - o 허준수교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과)
  - o 이정한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장)
  - o 박기환 교수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본 연구회 이사)
  - o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 ☐ 축 사
  - o 조성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o 박인복 회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 o 구본홍 사장 (CTS 기독교TV)
  - o 최란 이사장(대한민국 서울문화예술협회)
- ☐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 후 원 : 고용노동부, CTS기독교TV
- ☐ 협 찬 : 대구은행
- \*\*\*언론 홍보 : 연합, 뉴시스 및 5개 언론 기사

## 10. 제10차 토론회

- ☐ 일시 : 2012. 6. 26 오후 2시
-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 주 제 :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 ☐ 주제발표자 : 이 준 영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 토 론 자
  - o 신인석 교수 (중앙대 경영학과)
  - o 이의영 교수 (경실련 전 상집위원장/ 군산대 경제학과)
  - o 김광기 경제선임기자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부소장)
- ☐ 축 사
  - o 심윤중 총장 (前 성균관대학교 / 국민희망포럼 이사장)
  - o 임성택 총장 ( 그리스도대학교 )
- ☐ 1부 사회 : 진석범 교수 (동서울대학교 실버복지학과/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선진사회복지연구회)
- 후 원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미래정책연구원
- \*\*\*언론 홍보 :MBC 뉴스 토론회 풀영상

## 11. 제11차 토론회

- 일시 : 2012. 10. 25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
- 주제발표자 :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 론 자
  - 김동섭 조선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원장)
  - 조중근 건강복지공동회의 공동대표
  - 박민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과장
  - 김선희 한노총 사회정책국장
  - 윤철수 의료개혁국민연대 대표
- 축 사
  - 김정례 (전 보건복지부 장관)
  - 유양근 (부총장/ 본 연구회 고문)
- 1부 사회 : 나임순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후 원 : 홈플러스

## 12. 제12차 토론회

- 일시 : 2013. 3. 7 오후 2시
- 장소 :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제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 복지공약을 중심으로'
- 주제발표자 : 신영석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토 론 자
  - 김동열 실장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수석연구위원)
  - 정은상 님 (일반시민패널 공모선정)
  - 김재진 박사(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 김명훈 박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제도위원장)
  - 신성식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

☐ 축 사

- o 차흥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 o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 (전 법무부 장관)
- o 김영래 총장(동덕여자대학교 / 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 o 오제세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 1부 사회 : 도미향 교수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회 이사)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후 원 : 국민건강보험

### 13 제13 토론회

☐ 일시 : 2013. 7. 5 (금)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

☐ 주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 주제발표자 : 안상훈 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

☐ 토 론 자

- o 김정근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 o 최 균 교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o 이창곤 소장(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 o 유종일 교수(KDI국제정책대학원)
- o 허재준 박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 연구본부장)

☐ 축 사

- o 차흥봉 회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 보건복지부 장관/ 본 연구회 고문)
- o 오영숙 전 세종대학교 총장/ 본 연구회 고문)

☐ 1부 사회 : 정윤경 소장(말샘/글샘언어교육연구소 / 본 구회 운영위원)

☐ 2부 사회 : 이정숙 회장 (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 후 원 : 현대자동차

## <토론회 관련 언론 기사>



### "새 정부 복지재원 위해 증세방안 마련해야"<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새정부가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양한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선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을 제도적으로 증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부의 복지 재정에 135조원이 소요된다고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의 사회보장 공적지출 비율이 10% 미만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보장 공적지출 비율을 늘리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도 "고소득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은 보수층과 경제단체의 반발을 부르겠지만 복지가 확대되는 만큼 세금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히 알리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복지지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인 우리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인 34% 정도로 점차 올려야 한다고 설득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ogogo@yna.co.kr](mailto:gogogo@yna.co.kr)



###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입력 : 2013.03.07 15:04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7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복지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고용안전·노인복지·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새정부에 필요한 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 서비스의 계층별 제공 △빈곤층 등 사각계층 해소 △복지전문가의 활용 방안 △사회복지사의 노동조건 개선 △복지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단기적인 예산절감이나 소득공제 축소 등의 임기응변식 방안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간의 연계성 확보와 최저임금과 최저생활보장의 현실화 등 실질적인 복지 정책 마련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논의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실장도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도 더 세밀하게 추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며 "6년 연속 적자를 겪고 있는 국내 재정 여건에서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해선 "증세의 필요성과 재정적 부담과 국가의 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인도 토론에 참여해 새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상 씨는 "정부는 국민에게 막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예산과 인력만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포널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김명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도위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정숙 연구회 회장은 "박근혜정부가 4대 복지 추진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윤 기자 트위터 계정 @mton16]

## 시사코리아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방향과 문제점' 진단 토론회

새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으며,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면 다양한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오후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강당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는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 대비 9.4%로 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멕시코(8.2%) 다음으로 낮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합당하게 현재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률이 62.7%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며 국민 의료비에서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8.2% 수준에 머물러 OECD 평균에 비해 14% 정도 낮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비급여 의료항목의 증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의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빈곤화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육 문제에 대해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현재 민간기관 중심의 보육전달체계를 지양하고 국립과 공립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보육체계의 공공성을 보다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2010년 현재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지만, 독일은 36%, 스웨덴은 46%,

OECD 평균은 34%에 달한다"며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고소득자 증세와 법인세율 인상은 보수층과 경제단체의 반발을 부르겠지만 복지가 확대 되는 만큼 세금 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솔직히 알리는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새 정부가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허관우 기자 (ted27@sisakorea.kr)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방향' 토론회 열려

등록 일시 [2013-03-07 16:53:53]

【서울=뉴시스】이득수 기자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은 7일 오후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강당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주요 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는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GDP 대비 9.4%로 OECD 회원국 30개국 중에서 멕시코(8.2%) 다음으로 낮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사회복지지출 수준에 합당하게 현재의 사회복지지출의 규모와 수준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이어 "건강보험의 경우 보장률이 62.7%에 그쳐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하며 국민 의료비에서 공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58.2% 수준에 머물러 OECD 평균에 비해 14% 정도 낮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비급여 의료항목의 증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고 이로 인해 만성질환이나 중증의 환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돼 빈곤화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육 문제에 대해 "보편적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현재 민간기관 중심의 보육전

달체계를 지양하고 국립과 공립시설을 대폭적으로 확대해 보육체계의 공공성을 보다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복지재원 마련과 관련해 "2010년 현재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합한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지만, 독일은 36%, 스웨덴은 46%, OECD 평균은 34%에 달한다"며 "국민부담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차홍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 김영래 동덕여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새 정부가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leeds@newsis.com



"복지재원 부족..증세해야"

"사회복지세 신설도 검토할 필요..국민 설득 필수"

입력 : 2013-03-07 오후 6:44:1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복지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단기적인 예산절감이나 소득공제 축소 등의 임기응변식 방안으로는 적정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에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새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규모에 부합하는 복지정책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세나 법인세, 부유세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증세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사회복지세의 신설이나 부가가치세의 인상 등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 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낮은 만큼 거꾸로 조세부담률도 낮다"며 "경제를 무시하고 복지만 강조하면 경제성장에 있어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토론회 개최

장수경 기자 | jsk21@newscj.com

2013.03.07 16:02:56



▲ 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성공 위해선..."

**1 중앙일보** 입력 2013.03.07 15:06

[이재윤기자 MTON@]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7일 새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재윤 기자

"박근혜 정부 복지 정책 성공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지금의 현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는 7일 오후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대선복지공약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창립 3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부 복지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수용 가능한 방안을 제시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고용안전·노인복지·저소득층 지원방안 마련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

새정부에 필요한 복지 정책 방향으로 △복지전달체계 구축 △복지 서비스의 계층별 제공 △빈곤층 등 사각계층 해소 △복지전문가의 활용 방안 △사회복지사의 노동조건 개선 △복지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 등이 제시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단기적인 예산절감이나 소득공제 축소 등의 임기응변식 방안으로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기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특히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서비스 간의 연계성 확보와 최저임금과 최저생활보장의 현실화 등 실질적인 복지 정책 마련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논의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실장도 "정부는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도 더 세밀하게 추가 세금을 거둬들이게 될 것"이라며 "6년 연속 적자를 겪고 있는 국내 재정 여건에서 복지 지출 확대에 따른 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김 연구원은 이를 위해선 "증세의 필요성과 재정적 부담과 국가의 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일반인도 토론에 참여해 새 정부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은상 씨는 "정부는 국민에게 막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예산과 인력만 계속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론패널로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소장, 김명훈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도위원장,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이정숙 연구회 회장은 "박근혜정부가 4대 복지 추진전략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지수를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며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차홍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전 법무부장관), 김영래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 오제세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새정부 복지 공약 실현 위해 증세방안 필요"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토론

김소정 기자(bright@dailian.co.kr) 기사더보기 + 등록 : 2013-03-07 19:18

새 정부의 복지 공약 실현 가능성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증세없는 복지 재원 조달은 어렵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는 7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에서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토론의 쟁점은 '4대 중증질환 국가부담',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정책 이행을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주제를 발표한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단기적 예산절감이나 소득공제 축소 등 임기응변식 방안으로는 적정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기에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새 정부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유세 확대 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박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증세 방안에 대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소위 나쁜 기업가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도 영향을 받는다”며 “이런 부작용은 미리미리 살펴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복지세의 신설이나 부가가치세의 인상 등 증세 방안이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하며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실장은 특히 우리나라가 6년 연속으로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복지가 중산층을 살리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식 중앙일보 사회복지전문기자는 “박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실현을 하겠다고 했는데 공약을 만들 때 재정주계를 보수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135조원이 든다고 했지만 사실상 150조에서 많게는 200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신 기자는 아울러 “증세를 하지 않고서 공약실천을 위한 재원조달을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대책으로는 공약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국민을 설득해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진권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소장은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 부담률을 지적했다. 북유럽, 특히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언급하며 “적게 받고 적게 내는 체계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북유럽처럼 많이 내고 많이 받는 체계로 갈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복지 자체만 강조하면서 제도를 디자인한다면 그 비용은 우리가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일리안 = 오세현 / 문은혜 / 박소희 / 김평호 기자]

## “진정한 복지국가는 고용확대보다 사회보장체계 구축”

허준수 교수, “재취업교육 등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보호가 우선”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제3주년 기념 복지정책 토론회서 주장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3-03-10/수정일:2013-03-11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고용확대보다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Social Risk)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준수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경실련사회복지위원장)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의 방향’ 주제의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창립 3주년기념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허 교수는 “고용이 확충된다고 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외국의 경험들 살펴보면 실업률이 낮아진다고 국민의 삶의 질이 저절로 향상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적 위험들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됐을 때에 진정으로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허 교수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보험 급여기간의 확충과 급여의 현실화, 실업기간 동안에 재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훈련과 적합한 취업정보 신속한 제공 등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과 훈련에서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그는 “학력 간 임금격차를 줄이고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이 가능한 산업계 관련 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보다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질의 중소기업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나 3D업종에 적정임금을 제공하는 방안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제도를 향상시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정부중심의 거버넌스를 지양하고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고용과 복지를 통합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의 구축도 복지와 고용이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 나아가서 복지국가로 향해가는 데에 매우 필요하다” 강조했다.

그는 또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규모에 부합하는 소득세나 법인세, 부유세 등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증세방안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이를 바탕으로 조세저항이 심한 기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반시민페널 공모로 선정된 정은상 씨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국가의 할 일에 대해 주문했다.

정 씨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있다. 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국민에게 막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과 일자리는 국가가 다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 복지예산과 인력을 계속 늘리는 것, 고학력자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사회복지세 신설이나 부가가치세 인상 등 증세 방안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시즈아이즈]이정숙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회장 "시민이 관심 가져야 복지국가 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618\\_0011201273&cID=11203&pID=112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20618_0011201273&cID=11203&pID=11200)

기사등록 일시 [2012-06-18 15:28:08]



【서울=뉴스시즈】이득수 기자 = 복지문제는 경제민주화 청년실업 문제와 함께 연말 대선의 승패를 가를 핵심 이슈로 꼽히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경쟁적으로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과연 국가재정의 능력으로 감내해낼 수 있는 것인지, 지속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증은 없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에 걸맞는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해 있긴 하지만 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시급한 부문에 배정해야 할 한정된 자원을 복지에 쏟아 붓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혁, 좌우 이념에 따라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 민간단체인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중도적 입장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에 대해 탐구를 전개해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작은 단체이지만 매년 3~4회의 토론회를 열어 복지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콘텐츠를 축적해오고 있다. 26일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이준영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중앙대 경영학과 신인석 교수, 경제정의실천연합 이의영 상집위원장,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와 질의응답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연구회를 설립해 3년째 이끌고 있는 이정숙 회장을 만나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문제와 바람직한 방향을 비롯해 그의 복지관을 들어봤다.

#### - 선진사회복지연구회를 설립한 취지는?

“우리 사회는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 소득양극화 현상의 심화, 고용없는 성장 등으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한정된 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

연구회는 2009년 10월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면 우리나라도 선진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창립했다. 이념을 초월하고 정파를 떠나서, 또 복지의 전문가 비전문가, 종사자 비종사자 등 복지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본 연구회에 구성원이 되어 선진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며 출범했다. 그동안 꾸준히 우리나라 복지현안에 대해 고민과 정책대안 모색의 장을 마련하여 왔는데 우리 연구회의 이런 작은 몸짓이 나비효과랄까? 복지는 일부 취약계층이나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정책이라 여겨졌던 것이 국가 중요어젠다로 떠오르며 그 수혜대상자도 중산층까지 확대 될 정도가 되었고 온 국민이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기 시작했다.”

## - 연구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선진사회복지연구회는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만큼, 꼭 필요한 때에 골고루,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전달되는지, 또 수급자들의 재화나 서비스의 남용과 오용을 막을 수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시민운동차원에서 감시, 감독, 연구를 통한 시민옴부즈만 역할을 하고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 목적이자 목표이다.

또 우리나라 복지 현안에 대해 토론회를 통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고민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토론회가 끝난 후엔 발표 자료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토론회 시리즈’로 매주 7200명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그게 벌써 42회까지 나갔다. 또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카페, 학회에도 올려 토론회 당일 시간을 못 내어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복지현안에 대해 공부하고 관심을 갖도록 귀한 토론 자료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 - 이 회장께서 생각하는 ‘선진사회복지’란?

“최근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신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홍보차 내한해 한 대학의 노천극장에서 열린 강의를 한 적이 있어 참석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를 하게 한 강의였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즉 돈으로 사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돈이면 무엇이든 해결 되고 이루어지는 사회가 돼 가는데 우리 인간의 가치, 규범, 도덕, 꿈과 희망은 기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에 의해, 또 돈에 의해 박탈돼서는 안 되게 하는 것이 이상적 복지, 선진복지국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다.”

## - 정부의 복지정책과 총선에서 앞 다퉈 내놓은 복지공약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나라 2012년 내년 총지출예산 326조1000억원 중 28.2%인 92조원이 복지예산이다. 또 (2000~2007)간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14.2% OECD 국가 평균 6.3% 대비 2.3배 높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복지국가 반열 초입에 들어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지출(2007년)은 아직도 GDP대비 8.1%로 OECD 평균(19.8%)에 비하면 더 확충해야 한다.

국민들의 복지체감온도가 낮은 편인데 이는 복지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효율성에 대한 문제와 13개 부처에 걸쳐 230여개의 복지프로그램이 부처간 칸막이 현상으로 연계성과 통합성이 낮아 중복이 되거나 누수가 되는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무엇보다 사회복지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현장 방문점검이 제대로 안 되는 전달체계상에서의 문제가 무엇보다 심각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각 당, 각 지역 국회의원들이 복지와 관련해 많은 정책을 내 놓았다. 실천이 문제다. 가급적이면 꼭 실천해야 한다. 만약 그 당시 한 표가 아쉬워 비효율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공약했다면 솔직하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정치인, 정치권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하고 변명을 하기 때문이다.”

#### - 최근 사회복지계를 중심으로 한국형 복지 찾기가 한창이다.

복지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 것이다. 현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를 돈으로 다 해결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퍼주기만 한다면 도덕적 해이까지도 일으킬 수 있다. 자활자립 할 수 있게 재교육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재임 8년간 일자리 1600만개를 창출하고, 2800만명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린 업적 때문에 지난해 말 퇴임하면서 지지율이 87%에 달했다. 그 비결에 대해 “정치가 뭐냐고요? 어머니의 마음이지요”라고 답변했다. 우리나라 위정자들도 당리당락을 떠나 진정성을 가지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 복지에 대해 논리나 말의 성찬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성장이 먼저냐 분배 즉 복지가 먼저냐를 따지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사회가 돼야 한다.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인 스웨덴도 복지를 아주 성공적으로 실현하면서도 5.5%의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보면 투명한 사회, 신뢰의 정치,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 -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문제가 심각하다. 해법을 조언 한다면?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 11%가 노인인구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거기다 작년부터 은퇴가 시작된 712만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있다. 정말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운 문제 중에 건강문제가 43.6%, 경제적 어려움이 38.4%(2008년 통계청)로 나타났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노인의료비 점유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노인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경륜을 가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하고 노인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노후준비교육 등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노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령자 재취업, 자원봉사, 여가활동 등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했는데....

“이태백, 사오정, 삼포시대, 허니문푸어, 하우스푸어 등 수많은 신조어는 고용의 질과 양의 불안에서 생겼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2.2%로 치솟았고 켄거루족, 신 켄거루족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의 좌절, 분노, 자포자기는 자살과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적개심으로 표출 되어 사회불안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고용과 복지는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소득배분과 복지를 통한 재분배가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작동할 때 보다 나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산출한다고 한다. 이런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창업지원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과 협력이 필요하고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과 복지 격차를 해소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본다.

## - 경제민주화와 복지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는지?

“정치권에서는 헌법 119조를 근거로 여야가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하고 복지를 확대하겠다고 한다. 경제민주화가 돼야만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복지는 거시적인 경제정책이고 경제민주화는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분도 있다.

그동안 경제학자들과 정치인들께서 제기한 경제민주화와 복지에 대한 논의는 다소 있었지만 정작 복지학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논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연구회에서는 지난 2월부터 복지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바라보고자 26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토론회를 가지려 한다.

leeds@newsis.com

※이 기사는 뉴시스 발행 시사주간지 뉴시스아이스 제282호(6월25일자)에 실린 것입니다.

### '한국형 복지전략은?'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입력 2013.07.05 15:29:21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3.7.5/뉴스1

[coinlocker@news1.kr](mailto:coinlocker@news1.kr)



"성공복지모델 스웨덴 조차 개혁 서두르고 있다" '창조경제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토론회' 열려 "지속가능한 복지" 강조**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3-07-05 17:40

김해원 기자(lemir0505@dailian.co.kr) 기사더보기 +

“스웨덴조차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토론회에선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속 한국형 복지전략'을 세우기 위해 “무조건적인 유럽형 복지를 모방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한 복지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참석자들은 박근혜정부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 한국형 복지모델을 위해서는 공정성을 기초로 지속가능한 창조경제 속의 복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상훈 서울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공정한 복지의 여러 측면 중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는가에 따라 보편주의가 답일 수도 있고 선별주의가 답일 수도 있다”며 “스웨덴 같은 나라마저도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개혁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 “어쩌면 이런 흑백논리를 뛰어 넘어야만 한국형 전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전통적인 복지국가의 수단으로 소득보장전략이던 것이 최근 정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유럽의 개혁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는 생활보장전략은 새로운 한국형 복지국가의 수단적 전략으로 백분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형 복지 전략핵심으로서 고용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프로그램 차원에서 구체화하는데 지자체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도 “서비스의 질 확보가 없는 단순한 사회서비스 확대는 저임금 근로자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정책의 책임성, 투명성, 민주주의 수준 등이 중요하다”며 “이를 간과하고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로만 보면 복지제도의 성숙 및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균 한림대 교수도 “민간 또는 시장의 역할을 어떤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공부분 중 정부부분의 과부하 상태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열악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부분의 확장은 무리수”라고 했다.

다만,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성장 보다는 분배와 기회의 균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기회의 평등이 담보돼야 하고, 결과적으로는 약자에게 더 분배가 담보되는 등 한 사회의 총 복지를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국가가 정의로운 조세를 기반으로 재분배를 시행해야 하고 권리와 의무에 입각해 정치적으로 수용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종일 국제대학원 교수도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및 복지국가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인식돼야 한다”며 “창조측면과 노동-분배체제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인식과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해원 기자]

## 프라임경제

###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 토론회 개최

입력 2013.07.05 10:12:54 최민지 기자 | cmj@newsprime.co.kr

[프라임경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가 5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8층에서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선진복지사회연구회는 "한국형 복지모델을 모색하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하면 창조경제와 여러 학문이 융합하고 결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최균 교수(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연구원 원장·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정근 박사(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 수석연구원), 유종일 교수(KDI 국제정책대학원)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NewDaily**

"[창조 경제]를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를 만들자"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대표 이정숙)의 토론회가 열렸다.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창조경제를 통한 한국형 복지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저조하다.  
살기 힘들수록 복지 수요는 치솟는다.

정치가들은 표심을 위해 복지 정책을 남발한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사업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최고의 복지인 고용이 창출된다.

고용은 세금과 연결되고 복지의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선순환]이 형성되어야 지속가능한 복지가 이뤄진다"

토론자로 참가한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안상훈 교수의 발제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세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 성장이 지속가능한 복지의 지름길이라는 것에 대해 안 교수와 동일한 입장이다. 하지만 세금을 거둔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정근 연구원

최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해외 복지정책을 무작정 모방하는 현실을 규탄했다.

"복지를 논하는 대부분의 위정자들이 해외 사례를 말하는데 각 국가는 그 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복지정책은 우리만의 상황을 고려해 구상해야 한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업이 등장해야 한다며 [창조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업들의 신사업 발굴을 위해 그간 많은 투자를 했지만 아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간 선진국의 산업 아이템을 따라가는 [추격형]산업에는 강한 면모를 보였지만 이제는 세계 시장을 이끄는 [선도형]산업을 할 때다.

대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쉽게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막는게 [창조경제]의 시작일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는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과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도 참석했다.

## 사)선진복지사회연구 - 아이디어클리리 공동기획 5 - 6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와 아이디어클리리(대표 조승문)가 공동주최하는 '제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 과정', 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시간은 성공적인 귀농(촌)을 위한 강의와 현장체험으로 진행됐다. 10월 21일 분당구청에서 경북 상주시 귀농귀촌특별지원 T/F팀 차진환 유치홍보계장의 강의를 들은 후, 10월 28일 귀농·귀촌현장을 다녀왔다. 글·사진 정권수 취재팀장

-성남시 분당구 예비 귀농귀촌인 45명 상주시에서 현장체험- [상주 타임뉴스=이승근 기자] 상주시에서는 10월 28일 경기 성남 분당구 소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주관한 제2인생 귀농귀촌 전문과정 교육생 45명은 상주에 정착한 귀농인의 영농현장에서 체험실습을 가졌다.

이번에 상주시를 방문한 예비 귀농귀촌 교육생들은 주로 성남과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50~60세 전후의 중장년층으로, 전선규 화훼농장(함창 신흥리, 귀농 5년차), 이안복동 귀농마을(이안 문창리), 이근홍 블루베리농장(중동 회상리, 귀농 7년차), 상주곶감유통센터(상주 외답동)등을 방문·체험활동을 가졌다.

교육에 참가한 오영숙씨(여, 전 세종대 총장)는 "실제 상주에 와보니 수도권과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거리가 가깝다는 것을 느꼈고, 또한 자연환경이 아직 때 묻지 않고 깨끗한 청정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어 귀농·귀촌하기 좋은 도시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상주시, 성남시 분당구 예비 귀농귀촌인 45명 상주시에서 현장체험  
상주시에서 희망 귀농 잘 짓고, 행복 귀촌 잘 살고!



2013년 10월 29일(화) 10:29 [GBN 경북방송]

상주시에서는 28일 경기 성남 분당구 소재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가 주관한 제2인생 귀농귀촌 전문과정 교육생 45명은 상주에 정착한 귀농인의 영농현장에서 체험실습을 가졌다.

이번에 상주시를 방문한 예비 귀농귀촌 교육생들은 주로 성남과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50~60세 전후의 중장년층으로, 전선규 화훼농장(함창 신흥리, 귀농 5년차), 이안녹동 귀농마을(이안 문창리), 이근홍 블루베리농장(중동 회상리, 귀농 7년차), 상주곶감유통센터(상주 외답동)등을 방문·체험활동을 가졌다.

“복지는 우리의 작은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듭니다.”

\*후원계좌

611-020289-871(외환) 예금주: 선진사회복지연구회 이정숙

\*‘한국 사회적기업의 전망과 과제’ (2010.7.16), ‘저출산 대책변화의 함의와 향후 과제’ ((2011.2.18), ‘베이비부머세대의 전망과 정책과제’ (2011.6.15), ‘경제민주화를 통한 복지의 이상과 현실’ (2012,6,29) 토론회를 MBC뉴스 토론회 풀영상 이나 본 연구회 홈페이지에서 전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구성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2silent@hanmail.net 070-8793-5202

## 『제 2인생 설계를 위한 전문가과정 9988234』

일 시: 9월 23일~12월 11일

(12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8시 강의, 30분 Q/A)

--장 소: 성남시청 율동관 등

--주 최: 사단법인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아이디 위클리

--참석대상: 베이비부머 세대, 중노령, 그 외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비: 각 회 5천원 (김밥, 음료 준비)

--수료증 발급

| 날<br>짜     | 주<br>제                                               | 강사                                                 | 장<br>소       |
|------------|------------------------------------------------------|----------------------------------------------------|--------------|
| 2013-09-23 | 베이비부머세대의 만형, 재취업과 창업 생생스토리-그래야 살길이 보인다'              | 김선호 '천석꾼'대표<br>(홍익회,동원택배사장역임)                      | 성남시청<br>율동관  |
| 2013-09-30 | '시니어의 성공모델-끊임없는 열정과 도전의 삶'                           | 오영숙<br>前세종대총장                                      | 성남시청<br>율동관  |
| 2013-10-07 | '협동조합을 만들자!-새로운 일자리 창출'                              | 최유성<br>아이쿱금천한우물소비자생<br>활협동조합 기획위원                  | 분당구청<br>소회의실 |
| 2013-10-14 | '창조적 발상으로 멋진 인생 만들기-저질러라!<br>꿈이 있다면, 나이가 경쟁력이 되게 하라' | 조관일 회장<br>前강원도정무부지사, 한국석탄<br>공사사장역임, 現한국강사협회<br>회장 | 성남시청<br>율동관  |
| 2013-10-21 | '성공적인 귀농, 귀촌을 하기 위한 전략'                              | 차진환 상주시<br>유치홍보담당차장                                | 분당구청<br>소회의실 |
| 2013-10-28 | '귀농,귀촌 현장 상주시 견학'                                    | 상주시버스제공<br>및 코스안내                                  | 상주시          |
| 2013-11-04 | '전직 경력을 살려 청소년 멘토링 강사로 재취업'                          | 박성보 사무총장<br>한국고령사회연합회                              | 성남시청<br>율동관  |
| 2013-11-11 | '수지침으로 배우는 생활 건강 관리'                                 | 강미순 고려수지침<br>학술위원 겸 봉사단장                           | 성남시청<br>율동관  |
| 2013-11-18 | '웃음도 비즈니스 톨이다'                                       | 정은상<br>웃음코디겸 맥아더스쿨교장                               | 성남시청<br>율동관  |
| 2013-11-25 | '베이비부머세대에 맞는 재테크 및 돈 관리'                             | 서성식<br>에이플러스에셋 전문                                  | 성남시청<br>율동관  |
| 2013-12-02 | '지역봉사로 얻게 된 일자리'                                     | 김선천<br>성남FM방송진행자                                   | 성남시청<br>율동관  |
| 2013-12-09 | '긍정적 상호작용 코칭을 통한 자기개발'                               | 도미향<br>한국코칭학회회장                                    | 성남시청<br>율동관  |